

지역산업과 고용

2021 | vol.1

창간호

▶ 특별기고

COVID-19 이후 지역경제의 산업과 일자리 연계

▶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지역별 고용구조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과 고용 : 일본의 경험과 교훈

▶ 지역통신

-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 지역 심층 리포트

▶ 지역-산업 고용동향



발간사

‘지역산업과 고용’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수요와 관심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과 시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분석 또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정책 현황, 일자리 이슈 등은 함께 논의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공유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 문제는 산업별 특성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지역 고용 시장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내에서 지역 고용을 조망’하고 ‘지역 내에서 산업을 조망’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발간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과 일자리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각계각층에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창간호에는 지역 및 산업별 일자리 문제를 심도 깊은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 3편의 <심층분석> 원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고용동향>에서 증거 기반의

정책 논의를 위해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지역 및 산업별 고용변화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고민해 온 17개 시도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지역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지역 심층 포커스>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고용'은 지역 일자리 사업과 고용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은 옥고를 작성해주신 원내·외 집필진,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아낌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간 준비 초기부터 기획과 실행에 힘써주신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산업과 고용'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21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영돈**

창간호 축하글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역 소멸’과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대응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등 거대한 산업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지역별·업종별로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운영 방식과 서비스 등은 이미 혁신대상에 놓여있으며, 그 변화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의 개발,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 등 경제구조는 신성장·그린에너지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생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의 시기에, 고용-산업의 상호작용과 그 실태를 현장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간지가 발간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산업과 고용(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은 각 지역별 산업과 고용에 관한 구체적 동향·정보와 그에 따른 정책이슈에 대해 심층적·입체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부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의 사각지대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다양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중앙정부의 지역고용 정책·제도 수립과 지역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본 계간지가 지역의 산업 변동에 따른 '노동 전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지역 고용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계간지 창간에 수고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역고용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

지역산업과 고용

2021 | vol.1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주무현
편집간사	김수진
편집위원	김중한, 이성균, 윤동열, 채준호, 고영우, 권우현, 강민정, 이성재
사무간사	오윤석, 김필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디자인인쇄	전우용사촌

Contents

■ 발간사	2
■ 창간호 축하글	4
■ 특별기고	
• COVID-19 이후 지역경제의 산업과 일자리 연계 주무현	10
■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지역별 고용구조 변화 박성익	16
•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이두희	4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과 고용 : 일본의 경험과 교훈 우종원	75
■ 지역통신	
•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92
• 지역 심층 리포트	94
■ 지역-산업 고용동향	
• 17개 시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산업	112
•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114
• 고용위기업종 고용동향 : 항공운송업·조선업	117

지역산업과 고용

2021 | vol.1

특별기고

COVID-19 이후 지역경제의 산업과 일자리 연계

주무현 |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1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여건

지역경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구조,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숙련 수준 등에 의해 축적된 지역 특수적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local-specific industry and job ecosystem)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집중적 공급자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이 지역경제 또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30.5조원으로 총예산 대비 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자기 지역 산업-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해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익숙하여 자율행정 또는 책임행정 경험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창의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 지역경제의 일자리사업 주체가 역동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 등)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일자리사업이 최대·최적 효과(Pareto Optimum)를 도출하기 위해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 불만은 증대하고 있다. 지역고용정책의 탈중앙화와 책무성(de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가운데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2 COVID-19와 디지털과 녹색 전환 가속화

COVID-19 세계 대유행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국민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일자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고,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의 역외 유출 등으

로 이중·삼중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거시적 산업구조 재편 전략과 중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결합하지 못했고,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정자로서 거버넌스도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COVID-19 이전에도 지역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 변화와 녹색 전환은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지도와 숙련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COVID-19는 거대한 쓰나미(tsunami)가 디지털과 녹색 전환에 따른 지역노동시장의 변화를 더욱 빠르게 하여 새로운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를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OVID-19 이전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숙련 수요가 발생한 결과, 지역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부분 도시나 지역은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익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지역의 일자리 손실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시키고, 기존 도시화와 같이 추세를 재조정하여 잠재적으로 이런 변화 유형을 바꿀 수 있다.

COVID-19는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평균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이다.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확산 가능성이 커 전통적 고성장 부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기회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COVID-19 이후 지역간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 힘들 것이다. 과거의 기술 변화는 공업지역과 비공업지역의 일자리 양극화 등 지역간 격차를 확대하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역간 일자리 양극화 원인으로 주로 작용했다. 노동시장의 상층구조에 있거나 숙련 노동력이 집중된 지역경제는 COVID-19 확산에도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본다.

COVID-19 이전 기후 변화와 녹색 전환은 전통적인 제조업 집중 지역의 일자리 소멸을 초래하였으나, 그 자리에 녹색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소멸을 낳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COVID-19 이후 녹색 전환은 친환경 재화에 대한 대중적 소비를 증대시키고, 녹색 인프라에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COVID-19 이후 기후 변화에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부문과 탄소 집약적 부문에서 전환하려는 부문 사이에서 새로운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녹색 전환의 순(純)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전망된다. 천연자원 의존 지역이나 화석연료 기반 생산기지와 발전 지역은 일자리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 녹색 전환 시대 일자리 창출은 과거보다 더 큰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COVID-19가 이러한 전환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녹색 전환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이 창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간 지대에서 맴돌고 있다.

COVID-19 이전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의 노동력 소멸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모든 영역에서 고령 노동자가 자신의 숙련 수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하고 있었다. COVID-19 이후 점차 더 많은 농촌지역이 새로운 거주자를 유치하여 고령화 인구를 상쇄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COVID-19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COVID-19는 이미 진행 중인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기류 이동을 한층 빠르게 하여 성장하고 있거나 기존 선두 지역은 기술 변화의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및 ‘확장된’ 수도권 지역은 세계적 전환의 이익을 취할 준비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다. 디지털 분야 고학력 노동자와 숙련노동자는 특정 도시와 지역으로 점점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미 고학력 및 고숙련 노동자 집중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심지어는 해외로부터 숙련노동자를 유지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 성공적이다. 다른 한편, 전통적 제조업의 기술 및 인력구조를 가진 지역은 위기에 노출되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다. COVID-19 세계 대유행이 이런 변화의 방향을 어느 정도 변경하여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3 COVID-19 이후 지역일자리사업의 전략 과제

디지털과 그린 전환 시대 산업구조 재편으로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와 디지털화, 녹색 전환 등은 통계적으로 변화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중앙정부의 공급자 중심 일자리사업 예산 배분은 지역경제의 기술과 숙련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게 한다. 지역경제의 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창출을 위한 중앙집중적 일자리 예산 배분·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COVID-19 이후 지역경제의 고용 복원력 증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재정투자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COVID-19 이후 디지털과 녹색 전환 시대에도 지역경제는 혁신, 기술, 기업가 정신 및 사회결속(social cohesion)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숙련은 지역의 경제와 고용 발전에서 핵심 요소이다. 숙련 노동력이 있는 곳에서는 기업가 정신, 경제발전과 투자유치를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둘째, 다양하고 전문화된 숙련(diverse and specialized skill)은 혁신의 전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과 숙련 향상 기회 확대는 사회통합에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고용전략은 지역경제의 산업 특수성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의 일자리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프로그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재정투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중요하다. 지역일자리사업의 창의적·분권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경제의 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고용전략 수립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역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집행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뢰 구축과 일자리사업 공동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부분 일자리사업은 전국 평균을 대상으로 한 범용적 프로그램에서 지역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일자리사업 설계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경제의 산업 및 업종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맞춤형 일자리정책의 분권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전통적 산업구조의 구조적 재편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인구감소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에 맞는 지역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지역 간의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

셋째, 고용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을 위한 초광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전략 모색은 고용정책의 구상 전환(paradigm shift)에서 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역할 조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보편주의적 접근의 일자리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고유의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고용정책의 기획과 보완 기능에 집중하고, 초광역기구는 일자리사업 추진의 핵심적 주체로서 경제권역 및 일자리권역 단위의 고용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4 정책제언

한국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와 취업유발계수 감소로 고용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역경제는 주력산업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일자리 위기, 인구소멸과 청년 인구 역외 유출 등이 중·삼중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지역의 일자리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OVID-19 이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력(성장)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경제고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고용발전전략」 수립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지역고용전략 수립 연구 사업을 전국을 5개 경제 및 고용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한 경험이 있다.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분야 전문가가 지식을 집약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고용발전전략수립」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고용정책 실천 로드맵」 마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지역별 고용구조 변화
-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과 고용 : 일본의 경험과 교훈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1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지역별 고용구조 변화

박성익 | 경성대학교 교수

I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같은, 여러 경제위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비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변이의 출현으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부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격 근무에서 온라인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일어날 변화가 수개월로 압축돼 실현됨으로써, 사람들의 근무지, 근무형태, 소비행태 등에 극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¹⁾ 이러한 변화를 간파하고 이에 적응한 디지털화된 기업들과 지식 근로자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소외된 업종의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판단할 때, 코로나19가 초래한 가장 큰 경제문제는 고용구조에서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고용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수현(2021), 김정우 등(2021), 오상봉(2020), 이성균(2020), 이시균(2021) 등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지상훈(2020)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역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코로나19가 최근에 발생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

1) Beddoes(2020), "위기 후에 찾아오는 기회," in 『2021 세계경제 대전망』 Standage ed.

형이기 때문에, 지역별 분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 및 지역의 고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월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 산업별 고용충격은 어느 정도 상이한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취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양극화의 진전 여부, 구조변화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시도별로 고용충격은 얼마나 상이했는지, 어떤 산업에서 고용이 더 영향을 받았는지, 취업자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고용구조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전체 취업자의 동향을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교한 후, 산업별 영향은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양극화의 관점에서 취업자의 특성에 따라 고용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 III장에서는 산업별 구조 전환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양극화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며, 코로나19 이후로 취업자 수에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산업별로 구조변화 검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광역시도별로 취업자 수와 산업별 취업자 변화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취업자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II 코로나19 이후 전국 고용구조 변화

① 전체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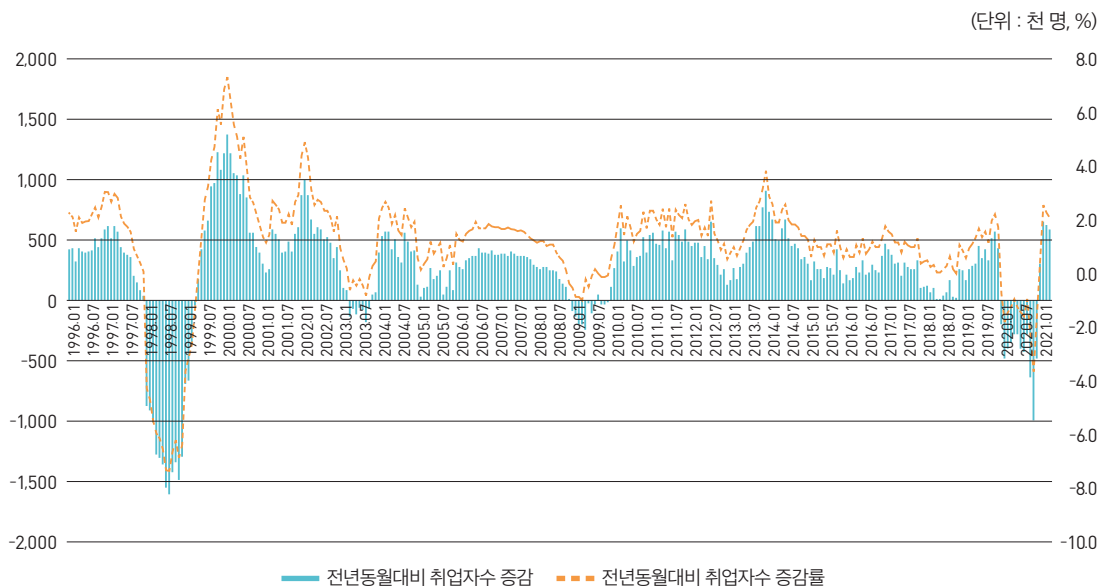
[그림 1]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폭과 증감률의 장기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역대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이후의 취업자 수를 비교한 <표 1>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로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취업자 수 최대 감소 인원은 전년동월대비 982천 명으로 3.7%가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감소인원은 428천 명으로 1.6%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의 고용충격 효과는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로 인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가 처음 가시화한 시기가 1998년 1월이었고, 다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9년 5월이었으므로, 외환위기가 취업자 수 감소를 초래한 기간은 16개월이었다. 외환위기로 취업자 수 감소가 절정일 때의 취업자 감소인원은 1,592천 명(-7.4%)이었다. 그리고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간 동안 월평균 감소인원은 1,069천 명으로 5.0%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취업자 수 감소 기간과 폭으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는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위기보다는 덜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2003년 신용카드 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기 때와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기간이 각각 7개월과 12개월에 달하였다. 취업자 수가 최대로 감소했을 때의 인원은 신용카드 위기 때 전년동월대비 173천 명(-0.8%), 미국발 금융위기 때 전년동월대비 240천 명(-1.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감소기간 동안 월평균 감소인원은 신용카드 위기 때 97천 명(-0.4%), 미국발 금융위기 때 92천 명(-0.4%)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는 역대 경제위기 때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취업자 수 변화 장기 추이



주 1)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감을 의미함
 2)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좌측 축,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률은 우측 축
 출처 : 통계청 Kosis

표 1 역대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감소 비교

(단위 : 개월, 천 명, %)

항목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19 이후
감소기간	1998. 1~1999. 4. 16개월	2003. 4~2003. 10. 7개월	2009. 1~2010. 1. 12개월	2020. 3~2021. 2. 12개월
최대인원 (감소율)	-1,592(-7.4%)	-173(-0.8%)	-240(-1.0%)	-982(-3.7%)
평균인원 (감소율)	-1,069(-5.0%)	-97(-0.4%)	-92(-0.4%)	-428(-1.6%)

* 2009년 9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로 계산에서 제외

주 : 감소폭과 감소율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대비 감소폭과 감소율을 의미

출처 : 통계청 Kosis

<표 2>는 코로나19 이후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폭과 증감률의 추이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를 보면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196천 명(-0.7%)의 취업자가 감소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가 이어져, 이때부터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월에 전년대비 취업자 수 감소폭(율)이 982천 명(-3.7%)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2021년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314천 명(1.2%)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21년 7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코로나19 이후의 최악의 고용위기는 일단 지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연월	2020. 02	2020. 03	2020. 04	2020. 05	2020. 06	2020. 07	2020. 08
취업자	26,838	26,609	26,562	26,930	27,055	27,106	27,085
증감폭	492	-196	-476	-392	-353	-277	-273
증감률	1.9	-0.7	-1.8	-1.4	-1.3	-1.0	-1.0
연월	2020. 09	2020. 10	2020. 11	2020. 12	2021. 01	2021. 02	2021. 03
취업자	27,012	27,088	27,241	26,526	25,818	26,365	26,923
증감폭	-392	-421	-274	-628	-982	-473	314
증감률	-1.4	-1.5	-1.0	-2.3	-3.7	-1.8	1.2

주 1) 취업자는 해당연월 취업자를 의미함

2) 증감폭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대비 증감폭과 증감률을 의미함

출처 : 통계청 Kosis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가 다른 경제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완화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확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순지원인원은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하였다. <표 3>을 보면, 2020년 3월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11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 증가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지원인원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0년 7월에는 47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3천 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인원 수의 월별 평균은 307천 명으로, 전년동기간대비 196천 명이 증가하여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고용상황이 악화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할 여지가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변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으로 인하여, 확진자 수가 2,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경제활동이 얼마든지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표 3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연월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2019. 03.	2019. 03. ~ 2020. 02. (월평균)	2020. 03.	2020. 07. (정점)	2020. 03. ~ 2021. 02. (월평균)
순지원인원	112	110	113	470	307
전년동월 대비 증감폭	-	-	1	353	196

주 1) 취업자는 해당연월 취업자를 의미함

2) 증감폭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대비 증감폭과 증감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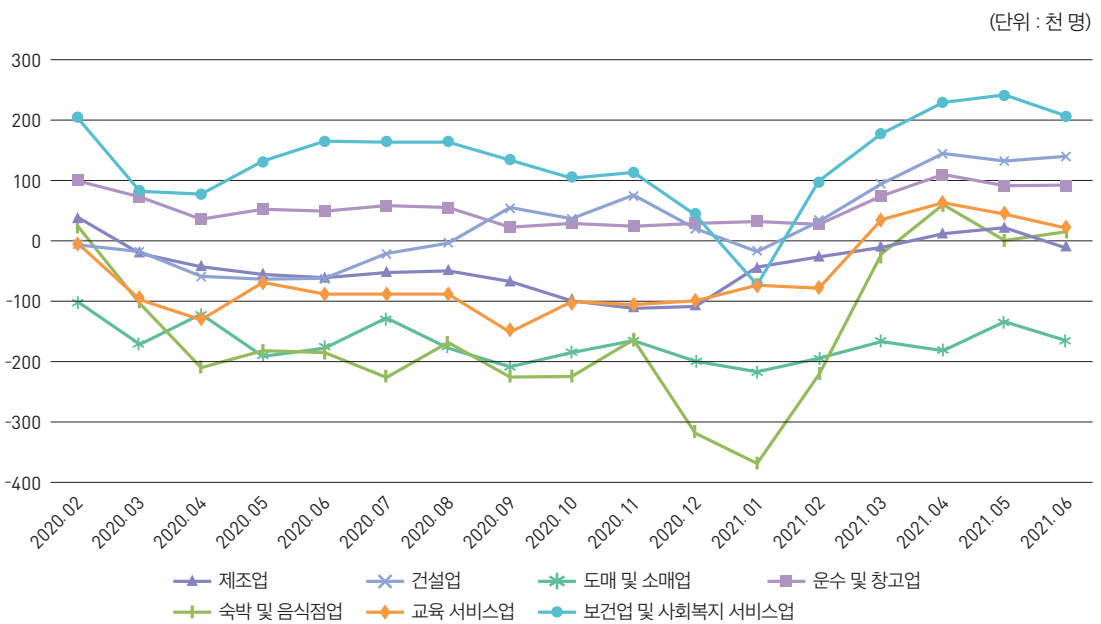
출처 : 고용행정통계 www.ei.go.kr

② 산업별 취업자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산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원격근무가 가능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한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는 주요 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폭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서비스업에서 고용 충격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매 및 소매업도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도 비록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수요 증대로 인하여 고용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에서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는 코로나19 초기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비교적 빠르게 고용충격에서 벗어나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별로 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고용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도 산업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추이



주: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Kosis

<표 4>는 산업별로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우선 취업자 감소기간을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17개월 동안 매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도 14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운수 및 창고업과 수

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적이 없었다. 그밖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도 1개월만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인 시점은 2021년 1월로 나타나지만 산업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020년 3월, 건설업은 2020년 5월이 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 소비생산활동의 경우는 2021년 7월이 정점이었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미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점이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위기 효과와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인 시점에서 취업자 감소폭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에서 367천 명(-15.7%)이 감소하여 고용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218천 명(-6.0%), 교육서비스업 -151천 명(-7.9%), 제조업 -113천 명(-2.5%)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발생 후, 현재까지의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대비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누고 다시 2020년 2월 대비 비율을 구한 것이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비율)'이다. 그 값을 보면, 전 산업의 값은 -143천 명(-0.5%)으로 아직 코로나19의 고용 감소효과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174천 명(-4.9%), 숙박 및 음식점업 -151천 명(-6.6%), 교육서비스업 -59천 명(-3.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4천 명(-4.4%), 제조업 -44천 명(-1.0%)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산업은 2021년 7월 현재 2년 전의 취업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 산업의 2021년 7월 기준 취업자 수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동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누적적인 고용효과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에 있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비교

(단위 : 천 명, %, 연월, 개월)

	2020. 02.		취업자 감소기간 (개월)	취업자 감소폭 정점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	2021. 07. 기준 2년 전 취업자 초과 여부
	취업자	비중		시점	감소인원 (비율)		
전체	26,838	100.0	12	2021. 01.	-982(-3.7)	-143(-0.5)	○
농업, 임업 및 어업	1,194	4.4	6	2021. 03.	-26(-1.9)	27(2.3)	○
광업	14	0.1	14	2020. 10.	-4(-26.7)	-2(-10.9)	×

	2020. 02.		취업자 감소기간 (개월)	취업자 감소폭 정점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	2021. 07. 기준 2년 전 취업자 초과 여부
	취업자	비중		시점	감소인원 (비율)		
제조업	4,445	16.6	14	2020. 11.	-113(-2.5)	-44(-1.0)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77	0.3	6	2021. 07.	-7(-9.5)	2(2.1)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43	0.5	0			18(12.6)	○
건설업	1,951	7.3	7	2020. 05.	-62(-3.0)	33(1.7)	○
도매 및 소매업	3,573	13.3	17	2021. 01.	-218(-6.0)	-174(-4.9)	×
운수 및 창고업	1,506	5.6	0			56(3.7)	○
숙박 및 음식점업	2,275	8.5	14	2021. 01.	-367(-15.7)	-151(-6.6)	×
정보통신업	849	3.2	11	2020. 10.	-33(-3.8)	5(0.5)	○
금융 및 보험업	787	2.9	10	2020. 11.	-32(-4.0)	-3(-0.3)	○
부동산업	548	2.0	13	2020. 11.	-74(-13.0)	-34(-6.3)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85	4.4	7	2020. 03.	-26(-2.2)	18(1.5)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17	4.9	1	2020. 05.	-17(-1.3)	42(3.2)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38	3.9	3	2020. 03.	-60(-5.4)	53(5.1)	○
교육서비스업	1,828	6.8	12	2020. 09.	-151(-7.9)	-59(-3.2)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275	8.5	1	2021. 01.	-74(-3.4)	134(5.9)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07	1.9	12	2021. 01.	-80(-15.8)	-21(-4.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223	4.6	17	2021. 01.	-104(-8.6)	-54(-4.4)	×
가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 소비생산활동	89	0.3	4	2021. 07.	-25(-23.6)	9(10.1)	×
국제 및 외국기관	15	0.1	4	2021. 07.	-5(-27.8)	2(15.3)	×

- 주 1) 취업자 감소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의미함
- 2) 감소인원 비율은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인 시점에서 감소인원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로 나눈 비율임
- 3)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은 취업자 수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것임
- 4)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은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의 2020년 2월 대비 비율임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③ 주요 특성별 취업자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는 주요 특성별로 고용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성별로 보면,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기간은 12개월로 동일하고,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점도 2021년 1월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점에서 감소인원은 남성은 385천 명(-2.5%)인데 비하여, 여성은 597천 명(-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의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값이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이다. 그 값이 남성은 -48천 명(-0.3%)인데 비하여, 여성은 -95천 명(-0.8%)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 효과는 남아있지만,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자 감소폭과 비율이 더 커서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기간이 17개월이었지만, 40대는 15개월, 30대 미만과 50대는 12개월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감소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가장 타격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의 경우,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빠른 시점인 2020년 9월로 나타난 반면에, 다른 연령대는 전부 2021년 1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월평균 취업자 증감비율을 보면, 30대가 -3.3%(-183천 명)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30대 미만 -2.8%(-106천 명), 40대 -2.0%(-127천 명)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7.2%(336천 명) 증가하여 다른 연령대와 대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증가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생계유지를 위하여 낮은 수준의 일자리라도 얻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는 전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60대 이상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60대 취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전국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므로, 최근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의 경우는 13개월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졸이상의 경우는 감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의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월평균 취업 감소인원이 293천 명(-2.1%)으로 전문대졸 10천 명(-0.3%)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이상의 경우는 동 기간 중에 161천 명(1.7%)이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에서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있는 자영업자의 취업자 감소기간은 1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월평균 취업 감소인원이 139천 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시근로자

의 경우는 12개월간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취업 감소인원도 175천 명(-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5개월간 감소하였으며, 월평균 취업 감소인원도 93천 명(-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상용근로자는 취업자가 감소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에 오히려 239천 명(1.6%)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해고한 결과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 5 특성별 취업자 수 감소 비교

(단위 : 천 명 %, 연월, 개월)

	2020. 02.		취업자 감소기간 (개월)	취업자 감소폭 정점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	2021. 07. 기준 2년 전 취업자 초과 여부	
	취업자	전국대비 비중		시점	감소인원 (비율)			
전체	26,838	100.0	12	2021. 01.	-982(-3.7)	-143(-0.0)	○	
성별	남성	15,336	57.1	12	2021. 01.	-385(-2.5)	-48(-0.3)	○
	여성	11,502	42.9	12	2021. 01.	-597(-5.4)	-95(-0.8)	○
연령별	30대미만	3,857	14.4	12	2021. 01.	-314(-7.9)	-106(-2.8)	×
	30대	5,501	20.5	17	2020. 09.	-283(-5.1)	-183(-3.3)	×
	40대	6,426	23.9	15	2021. 01.	-211(-3.3)	-127(-2.0)	×
	50대	6,358	23.7	12	2021. 01.	-169(-2.7)	-63(-1.0)	×
	60대이상	4,696	17.5	1	2021. 01.	-14(-0.3)	336(7.2)	○
학력별	고졸이하	13,993	52.1	13	2021. 01.	-992(-7.1)	-293(-2.1)	×
	전문대졸	3,630	13.5	13	2021. 01.	-81(-2.2)	-10(-0.3)	○
	대졸이상	9,215	34.3	0	-	-	161(1.7)	○
종사상 지위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1,459	5.4	17	2020. 05.	-200(-12.6)	-139(-9.5)	×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4,024	15.0	0	-	-	68(1.7)	○
	무급가족 종사자	962	3.6	16	2021. 01.	-96(-10.0)	-42(-4.3)	×
	상용근로자	14,596	54.4	0	-	-	239(1.6)	○
	임시근로자	4,507	16.8	12	2020. 04.	-588(-12.1)	-175(-3.9)	×
	일용근로자	1,290	4.8	15	2021. 01.	-232(-17.0)	-93(-7.2)	×

- 주 1) 취업자 감소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의미함
- 2) 감소인원 비율은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인 시점에서 감소인원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로 나눈 비율임
- 3)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은 취업자 수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것임
- 4)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은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의 2020년 2월 대비 비율임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핵심 결론, 즉 양극화의 진행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연령, 학력 및 종사상 지위 등의 특성이 우수한 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별 타격을 받지 않은 반면에, 그 특성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고령층보다는 30대 미만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사상의 지위로 볼 때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보호받는 상용근로자는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고용원있는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산업별 구조 전환(structural change) 분석

① 양극화 지수 및 σ -convergence 분석

코로나19 이후 'K자 회복'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자 회복이란 경제가 어떤 사건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은 후에,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한 분야만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도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취업자 수에 있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K자 회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양극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간단한 K자 회복지수(=양극화 지수, K_t)를 고안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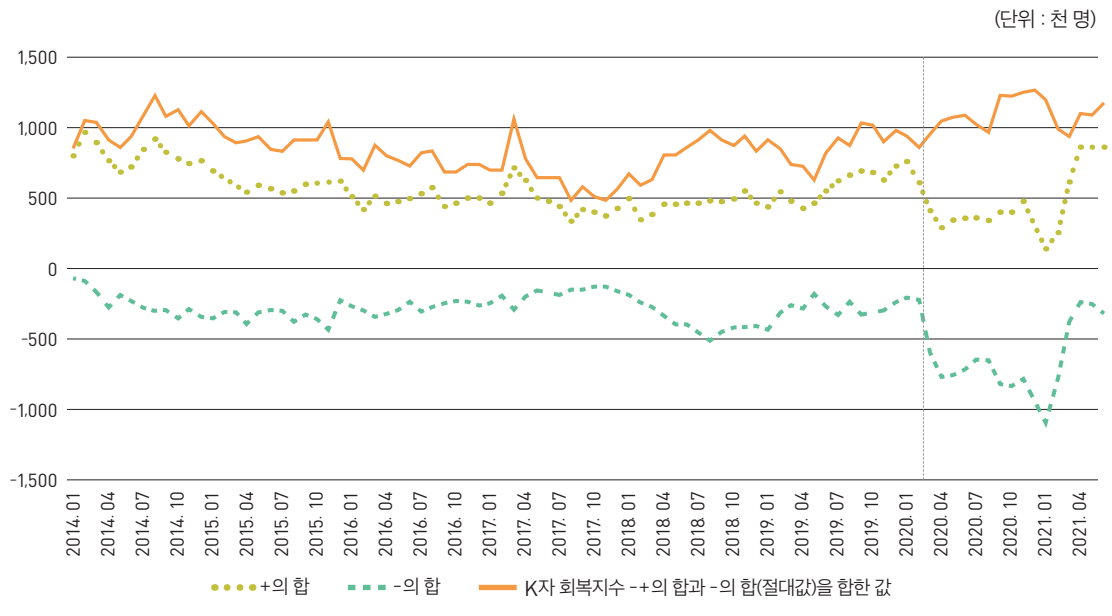
$$K_t = \sum_i \Delta E_{i,t} I(\Delta E_{i,t} > 0) + | \sum_i \Delta E_{i,t} I(\Delta E_{i,t} < 0) |$$

여기서 $\Delta E_{i,t}$ 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폭을 의미하고, $I(\dots)$ 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나타낸다. 그리고 i 와 t 는 각각 산업과 시간(월)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또한 $|\dots|$ 는 절댓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sum_i \Delta E_{i,t} I(\Delta E_{i,t} > 0)$ 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들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sum_i \Delta E_{i,t} I(\Delta E_{i,t} < 0)$ 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들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산업별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들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들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의 절댓값의 합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림 3]은 위의 양극화 지수를 계산하여 그린 것이다. 동 그림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진행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비록 과거의 값들에 비하여 양극화가 크게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것보다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동 지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부적절한 산업분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양극화 지수는 산업 대분류를 토대로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동일 산업 대분류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효과가 서로 상충되는 다른 중분류 산업들이 존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산업별 취업자 수의 변동이 추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대면산업과 비대면산업의 분류 등 적절한 산업분류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K자 회복지수(=양극화 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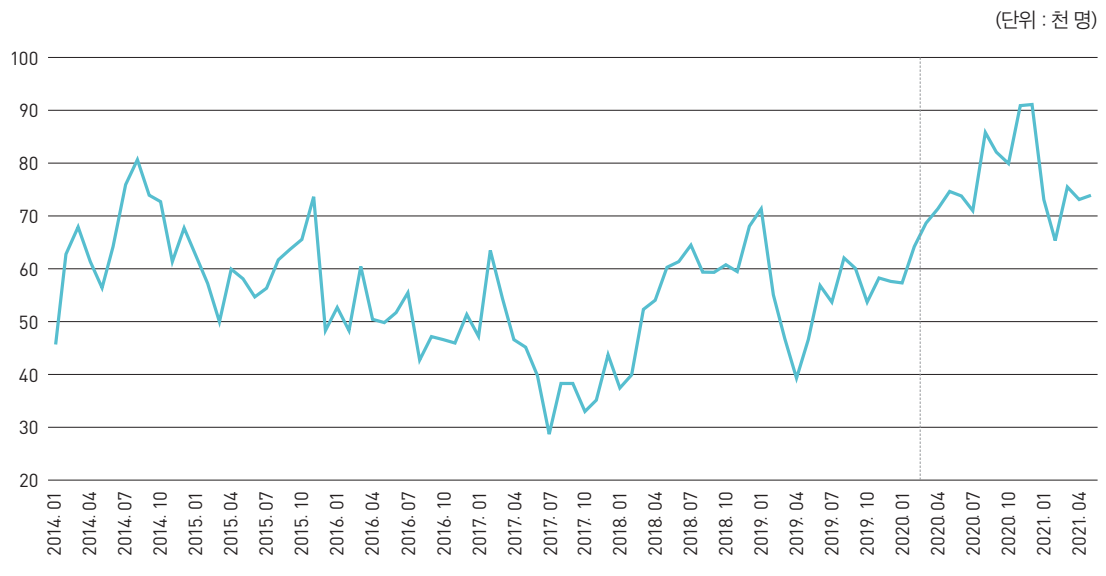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위에서 분석한 양극화 현상은 σ -convergence의 개념²⁾을 활용하여, 산업간 양극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폭의 표준편차가 커지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양극화가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림 4]는 취업자 수 증감폭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동 결과는 K자 회복지수의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표준편차는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나 2021년 2월부터 표준편차가 작아져서 양극화의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표준편차와 K자 회복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0.9396인 것으로 나타나, 양자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표준편차 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2) σ -convergence는 경제성장론에서 국가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국가 간 소득이 수렴하면, 소득의 표준편차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의 증가(감)폭이 동일하다면, 표준편차는 0이 되고, 양극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계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산업에서는 계속 감소하면, 표준편차는 커질 것이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취업자 수 증감폭의 표준편차로 σ -convergence를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Barro & Sala-i-Martin(1990, 1991, 1992)를 참조할 것

②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의 감소는 고용에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5]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의 월별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으로부터 취업자 수는 시간 경과에 따라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과 월 단위로 주기적 변동이 매우 크다는 것, 그리고 2020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세가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추세가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how(1960)가 제안한 Chow test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에 구조변화가 존재하였는지를 검정하였다. 취업자 수가 단 순히 시간의 함수라고 가정³⁾할 때,

$$E_t = \alpha + \beta t + \epsilon$$

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E_t 는 취업자 수, t 는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만약에 구조변화가 발생 하였다면, 구조변화 전 기간과 후 기간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_t = \alpha_1 + \beta_1 t + \epsilon \quad E_t = \alpha_2 + \beta_2 t + \epsi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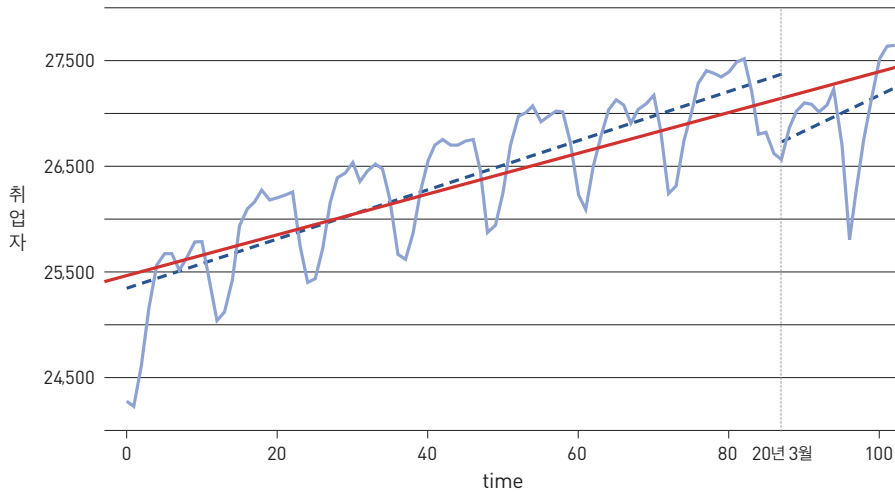
여기서 귀무가설 $H_0 : \alpha_1 = \alpha_2, \beta_1 = \beta_2$ 이다. Chow에 의하면, 검정통계량은 F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6>은 전 산업 및 각 대분류 산업별로 취업자 수의 구조변화가 존재하는지를 검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전 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구조변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K(금융 및 보험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만 구조변화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산업에서는 구조변화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본고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간 변수 외에 다른 적절한 독립변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수 표준편차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주 : 실선은 전 기간의 추세선이고, 점선은 코로나19 전후로 나누어 추정한 추세선임

표 6 취업자 수 구조변화 여부 Chow 검정 결과

산업	전 산업	A	B	C	D	E	F	G
F값	7.9115	3.0822	15.102	14.387	1.2794	54.368	5.4947	63.912
p값	0.0006494	0.05029	1.888e-06	3.275e-06	0.2828	2.2e-16	0.005459	2.2e-16
구조변화	○	○	○	○	×	○	○	○
연월	H	I	J	K	L	M	N	O
F값	86.161	71.299	11.007	3.0812	73.431	6.3004	1.2146	0.56068
p값	2.2e-16	2.2e-16	4.826e-05	0.05033	2.2e-16	0.002657	0.3012	0.5726
구조변화	○	○	○	×	○	○	×	×
연월	P	Q	R	S	T	U		
F값	30.231	8.923	7.8933	31.921	30.393	6.4716		
p값	5.653e-11	0.0002736	0.0006597	2.002e-11	5.113e-11	0.002283		
구조변화	○	○	○	○	○	○		

주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그러나 [그림 5]로부터 2021년 3월 들어서서는 전 산업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구조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현재의 구조변화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은 자료가 더 축적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코로나19 이후 광역시도별 고용구조 변화

① 광역시도별 취업자

<표 7>은 2020년 2월 이후 2021년 7월까지 광역시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 추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취업자 감소 기간이 지역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의 17개월 중, 울산이 16개월로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15개월, 부산과 경남이 각각 13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그에 비해 세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한 기간이 없었으며, 충북은 4개월, 대전과 전북은 5개월 동안만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시점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일찍 확산되었던 대구에서는 2020년 3월에 90천 명(-7.4%)이 감소하였으며, 부산에서는 2020년 5월 65천 명(-3.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취업자의 최대 감소폭 시점이 2021년 1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2021년 3월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취업자 감소폭이 크지 않았다. 최대 감소폭 시점에서 취업자 감소율도 지역마다 상이하였다.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의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를 보면, 전국의 경우 그 값이 -143천 명(-0.5%)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도 누적적으로는 코로나19의 고용 감소 효과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편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의 2020년 2월 대비 비율을 구해보면, 울산이 -2.3%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원이 -1.7%, 부산과 경북이 -1.3%, 인천

4) 충남의 경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2020년 2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효과가 증폭된 초기 시점에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에는 취업자 감소폭과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1.1%, 경남 -1.0%, 서울 -0.9%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 비하여 세종 5.8%, 전북 1.4%, 대전과 충북이 각각 0.3%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는 코로나19의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종과 대전 및 충북의 경우는 각각 행정 중심도시 및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입지 지역으로서 강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광역시도별 취업자 수 감소 비교

(단위 : 천 명, %, 개월, 연월)

	2020. 02.		취업자 감소 기간 (개월)	취업자 감소폭 정점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	2021. 07. 기준 2년 전 취업자 회복 여부
	취업자	전국 대비 비중		시점	감소인원 (비율)		
전국	26,838	100.0	12	2021. 01.	-982 (-3.7)	-143 (-0.5)	○
서울	5,103	19.0	11	2021. 01.	-196 (-3.9)	-48 (-0.9)	×
부산	1,651	6.2	13	2020. 05.	-65 (-3.9)	-21 (-1.3)	×
대구	1,193	4.4	12	2020. 03.	-90 (-7.4)	-7 (-0.6)	○
인천	1,566	5.8	13	2020. 12.	-53 (-3.3)	-17 (-1.1)	×
광주	750	2.8	11	2021. 01.	-26 (-3.5)	-4 (-0.5)	○
대전	784	2.9	5	2021. 02.	-26 (-3.3)	3 (0.3)	○
울산	569	2.1	16	2021. 01.	-28 (-4.9)	-13 (-2.3)	×
세종	171	0.6	0	-	-	10 (5.8)	
경기	6,909	25.7	11	2021. 01.	-245 (-3.5)	-4 (-0.1)	○
강원	759	2.8	12	2021. 01.	-42 (-5.7)	-13 (-1.7)	×
충북	868	3.2	4	2021. 01.	-27 (-3.1)	3 (0.3)	○
충남	1,120	4.2	11	2020. 03.	-45 (-3.8)	-7 (-0.7)	○
전북	904	3.4	5	2020. 04.	-20 (-2.1)	13 (1.4)	○
전남	968	3.6	8	2021. 01.	-36 (-3.8)	-1 (-0.1)	○
경북	1,407	5.2	15	2021. 01.	-59 (-4.2)	-18 (-1.3)	×
경남	1,735	6.5	13	2021. 01.	-82 (-4.7)	-17 (-1.0)	○
제주	380	1.4	11	2021. 01.	-24 (-6.2)	-1 (-0.3)	○

- 주 1) 취업자 감소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의미함
- 2) 감소인원 비율은 취업자 감소폭이 정점인 시점에서 감소인원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로 나눈 비율임
- 3)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은 취업자 수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것임
- 4)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 비율은 취업자 증감 누적인원/월의 2020년 2월 대비 비율임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2021년 7월 기준의 취업자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년 전의 취업자를 비교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였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취업자 수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7월 기준으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하여 다시 대유행이 시작되면, 언제라도 취업자 수 회복은 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광역시도별·산업별 취업자

앞에서는 광역시도별 취업자 수 전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광역시도별로 고용이 감소한 산업과 증가한 산업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별·산업별로 고용이 감소한 산업과 증가한 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 산업에 대하여 대분류산업별 취업자 수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6개 산업분류의 취업자 수만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여 광역시도별·산업별 고용현황을 파악한다.⁵⁾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면, 2018년 1월부터 최근(2021년 6월)까지 광역시도별 대분류 산업별 월별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사는 기업조사로서 인적 특성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특정 유형의 근로자 조사가 누락⁶⁾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광역시도별·산업별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산업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으로 보면, I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3.7천 명(-11.9%)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그 다음이 C 제조업 -60.3천 명(-1.6%),

5) 코로나19 이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역시도별·산업별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이외에도 고용보험 자료(www.ei.go.kr)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 자료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의 완화로 인하여 코로나 19 전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취업자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는 반기(half-yearly)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의 고용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2020년 4월과 10월의 자료가 전부이다. 최근의 자료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도 미흡하므로, 본고에서는 활용하지 않는다.

6) 사업체노동력조사는 ① 건설업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②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③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한 근로자, ⑤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⑥ 창업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이 제외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보다 작다.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4.5천 명(-3.8%)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감소인원과 순위는 조사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표 4>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 조사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동 조사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와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한 근로자는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 광역시도별-산업별 취업자 변동 순위(감소 산업)

(단위 : 천 명, %, 개월)

	1위			2위			3위		
	업종	감소인원 (비율)	감소 개월	업종	감소인원 (비율)	감소 개월	업종	감소인원 (비율)	감소 개월
전국	I	-143.7(-11.9)	16	C	-60.3(-1.6)	14	N	-44.5(-3.8)	16
서울	I	-41.2(-13.3)	16	N	-35.3(-7.5)	16	G	-18.3(-2.7)	14
부산	I	-9.2(-10.4)	16	G	-6.8(-4.1)	16	N	-6.2(-7.0)	16
대구	C	-5.2(-3.6)	16	G	-4.0(-3.7)	12	I	-3.3(-7.0)	12
인천	I	-7.9(-13.3)	13	G	-5.8(-5.9)	16	C	-5.2(-2.3)	13
광주	G	-3.4(-5.4)	16	F	-2.4(-4.6)	16	R	-1.7(-19.6)	15
대전	I	-5.4(-17.5)	12	G	-3.9(-5.8)	16	S	-1.9(-12.1)	16
울산	C	-4.2(-2.4)	16	G	-1.8(-5.0)	13	F	-1.0(-3.0)	10
세종	I	-1.1(-16.7)	14	R	-0.5(-34.9)	12	F	-0.2(-3.3)	7
경기	I	-33.7(-12.0)	16	C	-20.0(-1.6)	14	R	-12.0(-13.7)	16
강원	I	-10.5(-25.8)	15	H	-1.3(-6.0)	13	G	-1.1(-2.4)	13
충북	G	-2.5(-3.8)	13	C	-0.6(-0.3)	14	I	-0.6(-1.8)	9
충남	I	-9.2(-21.4)	16	F	-6.2(-11.0)	16	G	-1.2(-1.6)	14
전북	I	-4.7(-12.7)	16	F	-1.4(-3.1)	13	C	-1.4(-3.1)	14
전남	K	-2.4(-8.8)	15	I	-0.4(-1.1)	10	G	-0.3(-0.5)	11
경북	I	-6.8(-18.1)	12	C	-4.7(-1.6)	14	R	-1.3(-8.4)	13
경남	C	-4.8(-1.3)	15	I	-4.7(-6.9)	16	N	-1.5(-3.9)	16
제주	I	-3.4(-10.9)	13	N	-1.0(-10.4)	13	R	-0.9(-9.1)	16

주 1) 감소인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중 전년동월대비 종사자 수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것임
 2) 감소비율은 감소인원의 2020년 2월 취업자 수 대비 비율임
 3)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지역별로 보면, 전국 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에서 I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감소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및 제주의 총 11개 광역시도에서 이 분야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대구와 울산, 경남에서는 C 제조업이, 광주와 충북에서는 G 도매 및 소매업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1~3순위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면, I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회, G 도매 및 소매업이 11회, C 제조업이 8회로 이들 산업에서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서울에서 동 산업의 종사자가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 <표 4>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9 광역시도별-산업별 취업자 변동 순위(증가 산업)

(단위 : 천 명, %, 개월)

	1위			2위			3위		
	업종	증가인원 (비율)	감소 개월	업종	증가인원 (비율)	감소 개월	업종	증가인원 (비율)	감소 개월
전국	Q	83.6(4.5)	0	O	83.4(10.8)	0	M	42.2(3.9)	0
서울	Q	16.3(4.2)	0	M	14.5(3.0)	0	J	12.8(3.5)	1
부산	Q	8.4(6.0)	0	O	4.3(9.2)	0	F	4.1(4.3)	2
대구	O	4.0(13.1)	0	F	1.8(3.3)	1	Q	1.5(1.6)	1
인천	Q	5.7(6.0)	0	O	4.6(12.3)	0	L	1.6(9.6)	0
광주	Q	1.8(2.7)	0	O	1.6(8.1)	4	N	1.2(3.9)	5
대전	M	3.3(6.9)	0	O	2.4(8.9)	2	Q	1.8(2.9)	0
울산	P	2.3(7.9)	0	O	2.2(14.6)	0	Q	1.2(3.5)	0
세종	O	1.3(5.9)	0	C	1.0(4.8)	0	Q	0.9(9.6)	0
경기	O	18.5(14.6)	0	Q	14.9(3.7)	0	M	11.1(4.2)	0
강원	O	4.3(10.4)	0	Q	3.7(6.0)	0	F	1.4(2.9)	3
충북	O	2.6(8.4)	0	M	1.7(8.0)	0	F	1.6(3.8)	2
충남	O	4.7(12.6)	0	Q	4.1(5.4)	0	M	1.6(7.9)	0
전북	Q	5.1(6.4)	0	O	2.6(7.0)	3	M	1.0(5.0)	0
전남	O	6.7(14.6)	0	Q	3.5(4.5)	0	M	1.8(11.9)	0
경북	Q	4.8(5.0)	0	O	4.3(8.3)	0	M	3.1(11.4)	0
경남	Q	7.4(6.4)	0	O	5.8(12.4)	0	F	3.1(3.9)	4
제주	F	2.1(10.9)	2	O	1.3(8.6)	3	Q	1.1(4.9)	0

주 1) 증가인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중 전년동월대비 종사자 수 월별 증감인원의 누적인원을 구한 후, 그 인원을 월평균으로 나눈 것임

주 2) 증가비율은 증가인원의 2020년 2월 취업자 수 대비 비율임

주 3) 산업분류는 <표 9>의 주 3)를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를 이용하여 계산

<표 9>는 광역시도별·산업별로 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산업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으로 보면,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3.6천 명(4.5%)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이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3.4천 명(10.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2.2천 명(3.9%)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증가인원과 순위도 조사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표 4>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는 어느 정도 상이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에서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총 7개 광역시도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의 7개 광역시도에서는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지역의 현황을 1~3순위까지 살펴보면,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각각 16회,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8회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서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종사자 증가가 많았던 이유는 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비대면 산업의 발달로 인한 전문가 수요 증가가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증가는 종사자 수 감소를 어느 정도 완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광역시도별 취업자 특성분석

<표 5>에서 이미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표 10>과 <표 11>은 이러한 영향이 광역시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동 표의 값들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변동인원을 누적하고 월평균 변동인원을 구한 후, 2020년 2월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고용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표 10>의 성별 차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남성은 0.3%, 여성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충격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은 강원 -1.7%, 울산 -1.6%, 경남 -1.5%의 순서로 고용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은 울산 -3.3%, 부산 -2.3%, 경북 -2.0%의 순서로 고용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세종과 충북 및 전북에서는 남녀 모두 고용이 증가하였다. 경기와 전남에서는 남성은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전에서는 남성은 감소하였지만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60대 이상만 증가하고, 기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3.3%, 20대 이하 -2.8%로 저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이러한 패턴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경우, 여타 지역과 달리 서울, 대전, 세종, 충북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 대구에서 40대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큰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연령별 취업자 변동 현황도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고졸 이하는 -2.1%, 전문대졸 -0.3%, 대졸이상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전 학력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에, 전북에서는 전 학력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광주에서는 대졸이상 취업자 변동률이 -5.2%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10 광역시도별·인적특성별 취업자 변동 비교

(단위 : %)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국	-0.3	-0.8	-2.8	-3.3	-2.0	-1.0	7.2	-2.1	-0.3	1.7
서울	-0.9	-1.0	1.2	-2.7	-1.9	-1.4	1.5	-3.9	1.8	0.9
부산	-0.5	-2.3	-6.8	-7.5	-2.5	0.1	8.5	-0.9	-2.8	-1.3
대구	-0.4	-0.8	-1.5	-0.5	-5.4	0.4	5.5	-3.6	6.4	0.5
인천	-1.2	-1.0	-5.6	-5.0	-0.6	-1.7	9.5	0.6	-4.3	-2.8
광주	-0.9	-0.1	-4.7	-4.9	-0.3	1.1	5.9	2.0	4.6	-5.2
대전	-0.2	1.1	2.4	-1.9	-3.7	-0.4	7.7	-1.8	5.6	1.5
울산	-1.6	-3.3	-9.5	-6.1	-2.8	-0.6	7.8	-6.4	2.4	3.0
세종	6.5	5.0	7.2	2.8	7.1	4.6	11.8	-6.0	4.5	12.6
경기	0.8	-1.2	-3.6	-1.2	-1.2	-1.1	10.0	-2.6	-1.1	4.1
강원	-1.7	-1.5	-6.9	-3.9	-3.2	-2.9	5.5	-2.9	-9.2	4.6
충북	0.0	0.8	0.3	-3.4	-1.1	1.1	4.7	1.3	-1.7	-0.7
충남	-1.0	-0.2	-6.0	-2.9	-2.6	-0.7	7.7	-1.8	0.9	1.2
전북	0.8	2.2	0.4	-2.5	-2.4	-0.4	9.3	0.6	7.3	0.7
전남	0.3	-0.5	-6.7	-3.6	-0.3	-1.8	6.0	-0.9	5.1	-0.8
경북	-0.8	-2.0	-4.9	-8.7	-4.7	-1.7	8.4	-5.3	3.0	6.7
경남	-1.5	-0.2	-4.0	-7.8	-3.0	-2.2	11.4	-0.2	-9.2	2.1
제주	-1.3	0.8	-2.3	-2.6	-1.6	-0.8	4.8	-2.1	-9.3	9.4

주)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변동인원을 누적하고 월평균 변동인원을 구한 후, 2020년 2월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한 것임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표 11>의 종사상 지위별 변화를 보면, 전국적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상용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광주외의 경우 전국과 달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타 지역과 달리 상용근로자가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제주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변화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판매종사자가 -4.9%로 크게 감소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종사자 -3.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는 6.2%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종의 경우는 전국과 달리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가 증가한 반면에,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별 및 직업별 지역 간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맞춤형 취업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11 광역시도별·직업특성별 취업자 변동 비교

(단위 : %)

	종사상지위별						직업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사무 종사자 (3)	서비스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단순노무 종사자 (9)
전국	-9.5	1.7	-4.3	1.6	-3.9	-7.2	-0.4	-3.0	-4.9	-0.1	-2.1	6.2
서울	-5.6	2.6	-5.6	2.6	-9.9	-8.0	-1.6	-2.2	-4.3	-3.6	0.9	2.7
부산	-5.2	9.5	6.4	-5.1	5.4	-9.4	1.3	-0.3	2.5	8.6	-14.0	3.2
대구	-8.2	-5.7	-18.8	3.4	-0.2	2.1	4.1	-4.5	0.3	-4.4	1.4	19.0
인천	-21.9	7.7	-28.7	2.3	-9.3	15.7	-4.8	-7.3	-11.4	8.2	5.0	8.4
광주	0.8	5.1	19.7	-1.9	-6.2	8.0	2.4	2.7	-2.0	1.9	-8.2	9.7
대전	0.5	-4.0	-0.5	0.6	6.3	-9.4	1.3	-3.3	-6.1	2.4	-4.2	5.0
울산	-11.3	2.0	-19.5	0.7	-8.0	-19.2	-12.5	-10.3	-5.7	-9.0	-0.6	10.8
세종	-5.9	9.3	2.9	8.8	-7.4	-23.5	13.1	4.0	4.3	11.8	-2.6	-5.9
경기	-12.5	-0.7	-8.6	3.1	-2.9	-6.6	0.1	-3.4	-6.2	4.2	-0.9	10.5
강원	-2.1	-5.6	-15.3	0.1	-0.3	8.8	11.4	-5.6	-2.0	7.3	-2.8	-3.9

	종사상지위별						직업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사무 종사자 (3)	서비스 종사자 (4)	판매 종사자 (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	단순노무 종사자 (9)
총복	-19.7	2.3	-7.8	2.5	0.8	-8.2	-2.0	-5.0	6.5	-2.8	5.8	1.3
충남	-12.3	1.1	1.4	-0.1	8.7	-24.9	2.8	-8.9	-3.5	-1.1	-10.1	5.1
전북	-0.3	3.2	7.4	4.0	-2.0	-22.5	2.1	-0.6	-0.8	-10.5	-2.0	7.1
전남	0.6	4.0	3.8	0.1	-3.3	-16.5	0.7	-6.0	-0.2	-6.5	-0.4	3.8
경북	-25.7	4.9	-3.1	-0.4	-3.6	-12.4	-4.3	-1.1	-20.7	-11.6	-1.0	1.4
경남	-8.7	0.9	-8.5	0.2	-1.4	-3.5	-2.9	3.4	-6.5	2.9	-4.9	6.8
제주	4.2	-2.8	12.3	6.1	-17.4	-7.0	-5.6	-0.7	-4.6	-13.2	0.0	-5.7

주)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변동인원을 누적하고 월평균 변동인원을 구한 후, 2020년 2월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한 것임

출처 : 통계청 Kosis를 이용하여 계산

V 결론

본고는 코로나19가 전국 및 지역의 고용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어떤 산업이 별 타격을 입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취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양극화의 진전 여부, 구조변화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역시도별로 고용충격은 얼마나 상이했는지, 어떤 산업에서 고용이 더 영향을 받았는지, 취업자 특성별로는 어떤 차별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고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2003년 신용카드 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에서는 대면이 필수적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 연령, 학력 및 종사상 지위 등의 특성이 우수한 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은 반면에, 그 특성이 취약한 계층일수록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세종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고

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수 광역시도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의 종사자가 감소한 반면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증가하여, 지역 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영향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본고에서의 분석결과는 아직 한계가 많고, 향후 추가로 분석되어야 과제도 많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한계는 다른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보건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악화하여, 다시 고용위기가 재연될 우려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코로나19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 코로나19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월별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한데, 월별 데이터는 경제적 분석이 충분할 정도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분류의 한계도 존재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을 위주로 하는 일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떤 산업이 대면산업인지, 비대면 산업인지에 대하여, 아직 엄밀한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자료의 이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대분류단위로 산업을 분류하였는데, 향후에는 대면·비대면에 대한 엄밀한 산업분류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제로는 고용충격이 지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김수현(202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과 주요 업종 고용변동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김정우, 김기민, 방효훈(2021), “코로나19 위기가 충남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충남연구 제5권 제1호, pp 27-49.

오상봉(2020),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통계청.

이성균(2020), “코로나19 사태와 울산지역 실업문제”, 지역사회학 제21권 제3호, 지역사회학회.

이시균(2021),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이슈, 2021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상훈(2020),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변화”, 노동리뷰, 한국 노동연구원.

■ 국외 문헌

Barro & Sala-i-Martin(1990), “Economic Growth and Convergence across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341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rarch.

Barro & Sala-i-Martin(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Issue 2, Pages 407-443.

Barro & Sala-i-Martin(1992), “Converg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0, No. 2.

Beddoes(2020), “위기 후에 찾아오는 기회”, 『2021 세계경제 대전망』Standage ed. (주)한국경제신문 한경 BP 譯

Chow, Gregory C. (1960).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Econometrica*. 28 (3): 591-605.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2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이두희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시작하면서 :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77년 발간된 대표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 Toffler)의 “제3의 물결”에서 예견한 미래의 삶은 대부분 실현되었거나 더 빨리 현실화되었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예견은 생각보다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토플러의 ‘재택근무의 미래사회’를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비대면(untact)이라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만들면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열고 산업 및 고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삶의 현장과 가까운 지역경제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시장과 수요가 마비되거나 줄어들면서 지역이나 글로벌 수요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지역경제의 위기와 함께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일자리 창출은 주로 새로운 산업인 비대면 산업(untact industry)을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화(Servitization)되는 산업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삶과 산업 및 경제의 위기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더 심각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본사 집중 및 연구개발 중심 기능과 비수도권의 생산 공장 중심 기능 특성상 지역의 성장잠재력 저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지역 간 투자 불균형 심화 등 지역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성장모멘텀이 필요하다. 과연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산업재편에 따른 지역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줄탁동시(倅喲同時)’의 지역산업 및 고용정책은 없을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올해 들어 양호한 회복세로 경제성장률도 4%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은 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구조라 주력 제조업의 저성장 극복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의 일자리 공급 측면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일자리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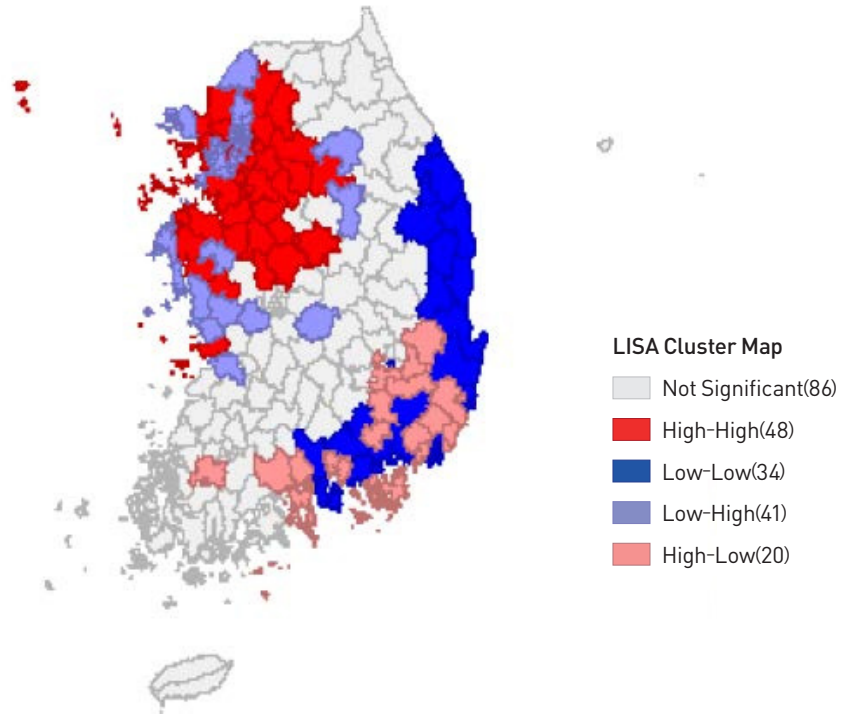
정책으로 실시한 단기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단기 응급대처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 급속한 충격 발생에 대비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도 일정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장기 포스트코로나 대응책으로 일자리 수요정책은 다소 미흡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재편으로 발생한 일자리 수요에 대비한 지역투자자 시급하다. 수도권에 비해 투자 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 수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수요정책의 기본 방향은 산업재편 방향을 고려한 지역투자자와 연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대타협(Big Deal)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투자할 기업을 위한 토지가격, 생산기반 여건, 적정 임금, 기술개발과 적정 인력공급 등의 투자유인을 맞출 대타협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사관계로 한계를 경험한 지역은 뉴노멀시대 새로운 수요자 주체인 시민의 강력한 투자요구(Big Push)와 지방정부의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극 투자유치 노력도 요구된다. 즉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현재 추진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사업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지역 산업 및 고용의 변화와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향후 지역 산업재편 및 방향을 살펴본 후 이에 대응할 지역 산업재편 방향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코로나19와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와 위기극복 관련 이론적 검토

최근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지역산업 및 고용의 충격은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은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과 선도(first move)경제의 산업전환 이슈를 앞당기면서 기회가 아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이두희 외, 2019). 특히, ‘수도권은 기업본사와 연구개발 기능, 지역은 공장과 생산기능’이라는 산업입지구조가 고착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남동임해를 중심으로 주력 산업단지가 건설된 지 40년 이상 지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겪었던 주력산업의 노후화와 공장 또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러스트 벨트’를 형성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두희 외, 2017). 지역의 고용성장률을 공간 군집도 분석으로 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몸이 머리와 팔·다리가 분리된 모습과 같다.

그림 1 지역 고용성장률 공간군집도분석(LISA) 결과



자료 : 이두희 외, 2019, p. 170

특히 우리나라 지역의 성장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2001년 이후 연평균 잠재성장률의 비중을 보면, 2001~2005년 5.1%의 고성장 평균 잠재성장률에서 노동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인데 반해 2019~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에서는 12%로 더 낮은 노동투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한국은행, 2019).

표 1 잠재성장률 비중 추이

연평균 잠재성장률	2001~2005	비중 (%)	2006~2010	비중 (%)	2011~2015	비중 (%)	2016~2020	비중 (%)	2019~2020	비중 (%)
노동투입(%p)	0.8	15.7	0.5	12.2	0.7	21.9	0.4	14.8	0.3	12.0
자본투입(%p)	2.1	41.2	1.7	41.5	1.6	50.0	1.4	51.9	1.2	48.0
총요소생산성(%p)	2.2	43.1	1.9	46.3	1	31.3	0.9	33.3	0.9	36.0
잠재성장률(%)	5.1	100	4.1	100	3.2	100	2.7	100	2.5	10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19. 8.)

이 같은 결과는 제조업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은 비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2000년대 쇠락한 제조업 산업역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산업생태계인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업 르네상스(부흥)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이두희 외, 2018, 2019). 문제의 시급성은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 지역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의 생산거점 지역이다. 부산은 2010~2013년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경남도 0.11%의 미미한 성장을 하고 있다(이두희 외, 2019). 실제 제조업의 비중은 비수도권이 훨씬 높는데, 2017년의 경우 비수도권 제조업 비중이 39.5%인데 비해 수도권은 24.1% 비중을 차지하였다(이두희 외, 2019). 결국, 지역의 저성장과 산업위기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과 산업주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두희 외(2019)의 358명 지역전문가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산업위기 발생 원인(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산업위기 발생원인(%)				
		산업 성숙·쇠퇴기(단기·중기 원인)		산업 쇠퇴·소멸기(중기·장기 원인)		
		일시적 지역경기 침체	앵커 기업유출	산업구조 문제 (장기수급 불균형)	산업전환 재편문제 (해당산업 침체·쇠퇴)	
전체	(358)	13.8	18.1	34.7	42.9	
유형	기업	(101)	6.0	16.0	46.0	33.0
	공무원 및 공공기관	(160)	18.9	18.2	33.3	42.8
	대학 및 지역연구원	(97)	13.7	20.0	25.3	53.7
지역	충청	(58)	35.1	15.8	36.8	28.1
	전라	(52)	2.0	47.1	35.3	37.3
	경상	(172)	11.1	12.3	32.7	49.1
	기타	(76)	12.0	13.3	37.3	44.0

자료 : 이두희 외, 2019, p.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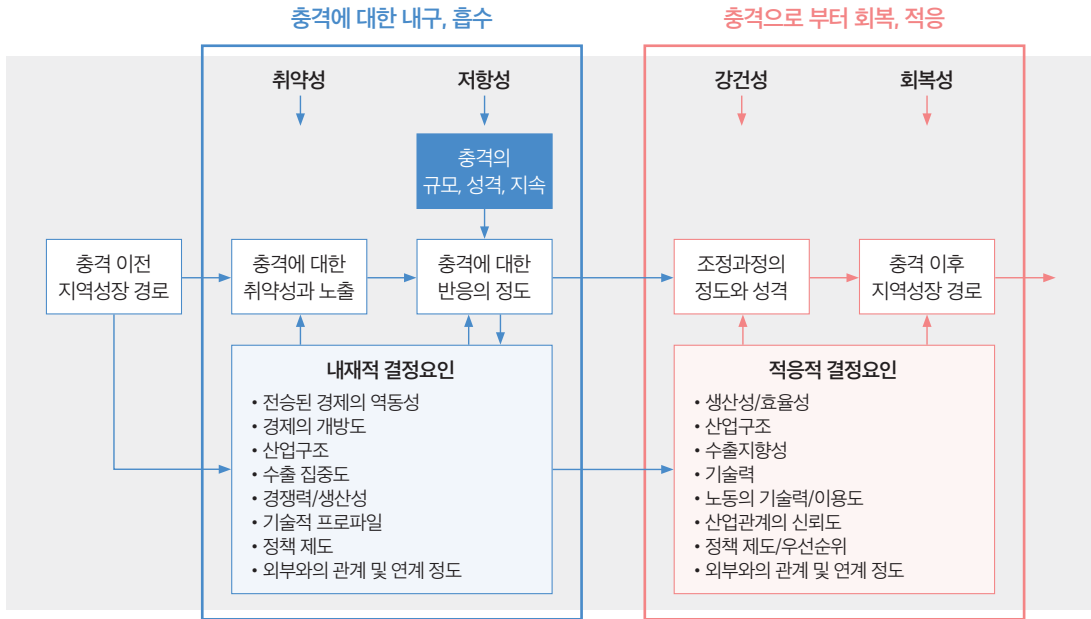
지역의 노동생산성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의 생산성 부진과 이에 따른 소득부진은 제조업 생산성 저하와 낮은 생산성에 있다. 또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노동투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또한 지역의 산업위기는 고용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전체의 불황으로 전이 되는 악순환 고리와 연계되어 있다(이두희 외, 2019). 예컨대, 2008년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우리 경제는 조선업의 호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조선업 호황기인 2014년의 경우, 조선업의 고용규모가

20만 이상이었지만, 조선업의 위기가 온 2018년에는 10만 명 정도로 고용의 위기도 함께 왔다.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극복 노력을 통해 최근 조선 수주가 회복되면서 다시 세계 1위로 부상하였지만 이미 떠난 10만 명의 일자리는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산업위기는 산업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산업구조조정은 경쟁력을 잃은 지역 산업의 축소와 신산업 창출 및 도입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두희 외, 2019). 산업구조조정 관련 전략으로 Markusen and Carlson(1989)은 단절전략(bowing out), 절감전략(bidding down), 보존전략(betting on)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두희 외, 2019). 동태적 지역산업 발전 관점에서는 구조고도화(upgrading), 다각화(diversification), 경로출현(emergence) 등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구분할 수도 있다(Grillitsch and Asheim, 2018). Foray(2015)의 경우 산업구조조정 관련하여 유럽의 스마트특성화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에서 품목전환, 구조고도화, 다각화, 산업전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두희 외, 2019).

동태적(Dynamic)으로 지역 산업위기와 지역경제 회복(resilience) 또는 위기극복 관련 이론은 충격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를 단기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기보다는 방향성과 추세를 가지고 ‘충격에 대한 내구 및 흡수’와 ‘충격으로부터 회복 및 적응’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요인과 적응적 결정요인에 따라 위기 극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홍사흠 외, 2016; Martin et al., 2018, 2015). 버논의 산업수명주기를 고려해 보면, 지역 주력산업이 단기 성숙산업에 속해도 지역의 앵커기업이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업그레이딩(upgrading)에 성공하면 지역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업그레이딩은 상품 업그레이딩, 공정 업그레이딩, 기능 업그레이딩, 가치사슬 업그레이딩 등이 있을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MacKinnon, 2012). 따라서 가치사슬 이론에 기초한 지역정책은 특정 선도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경제구조의 구축, 산업적 다양성의 확보와 특정 선도기업 내의 가치사슬에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상승시킬 전략이 필요하다(이두희 외, 2019). 즉, 지역의 고속련 인력 확보, 기술개발 강화, 투자유치 전략과 주체 간 협력 등 지역산업역량 강화도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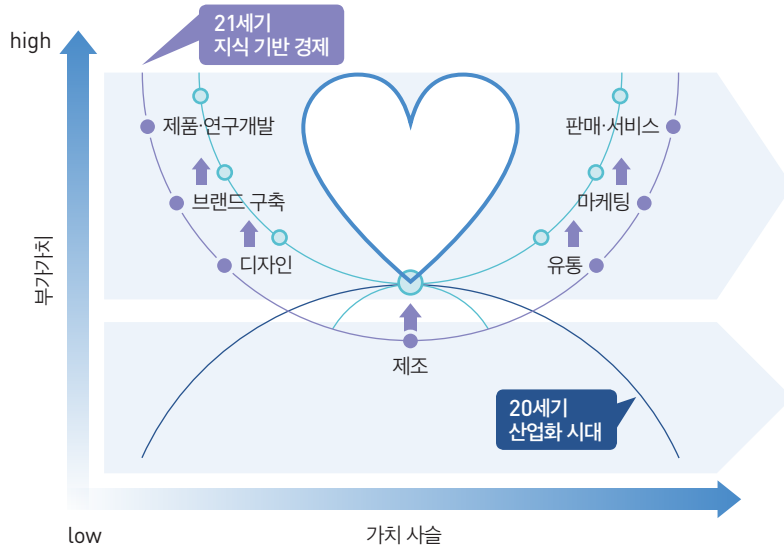
그림 2 동태적 과정의 지역경제 회복력



자료 : 이두희 외, 2019, p. 57; 홍사흠 외 2016; 변창욱 2015; Martin & Sunley 2015

한편, 우리나라의 지역 주력산업은 성숙기와 쇠퇴기에 위치해 있는 데다(<표 2> 참고), 산업입지의 형태마저 수도권에는 본사 및 R&D 등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기능이 중심이 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공장 위주의 생산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산업재편에 따른 산업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세기 산업화에서 강조된 역U자 형태의 부가가치와 가치사슬의 구조가 지식 기반 사회의 21세기에는 U자 형태의 스마일커브로 전환되면서 산업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즉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욱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산업의 심각성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등 정보혁신과 관련된 산업으로 빠르게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하트커브'와 같은 서비스와 제조업이 융합되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으로 빠르게 산업재편이 되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제조업이 서비스화되는 서비타이제이션 사회에서는 생산기능 중심의 공장만으로는 산업위기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산기능 위주의 공장만 있는 지역은 임금이 올라가고 생산설비의 노후화가 심해질 경우, 기업이 언제든지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지역산업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치 미국의 러스트벨트처럼 한국의 지역 주력산업도 산업재편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형 러스트벨트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가 지역에 던진 경제적 충격은 과연 어떻게 지역 산업재편에 영향을 줄 것인가? 코로나19의 충격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에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

그림 3 스마일커브와 하트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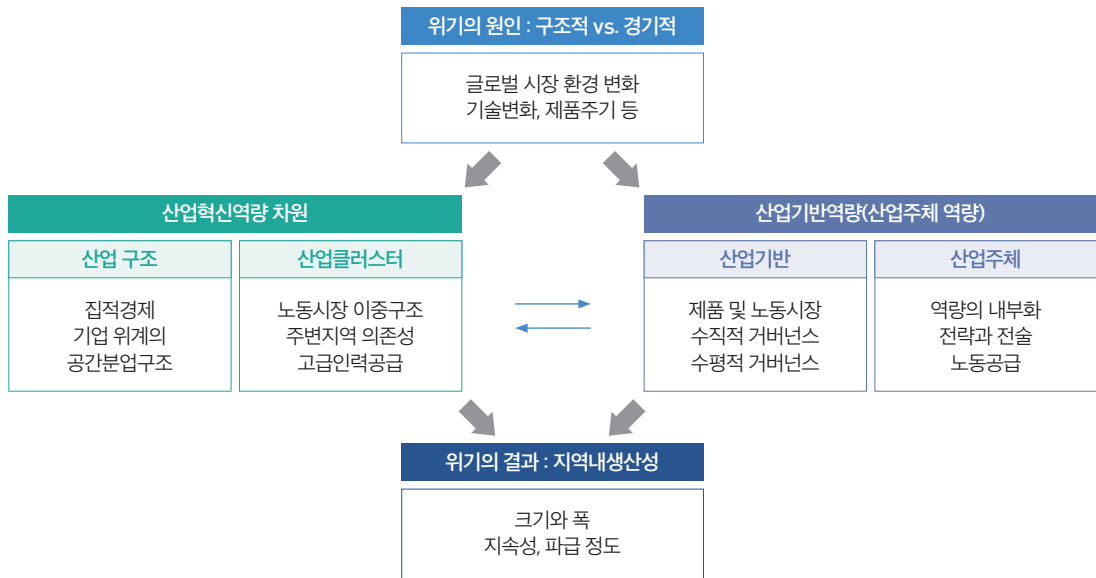
자료 : 이두희 외, 2019, p.78 재수정

비록 단기적이지만, 코로나19가 던진 지역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Grillitsch and Asheim(2018)은 지역의 산업경로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지역 산업위기에 대한 극복 전략으로 지역산업의 업그레이딩을 강조한다(이두희 외, 2019). 기존 산업의 질적 변화를 통해 기존 산업과 함께 연관 혹은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지역산업의 새로운 경로창출을 통해 기존 산업과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것도 위기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따라서 지역의 산업을 전환시킬 힘 또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지역산업역량⁷⁾’은 이러한 지역산업 위기극복방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이두희 외, 2019). [그림 4]와 같이 산업재편에 따른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산업기반역량의 산업인프라와 산업주체, 산업혁신역량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혁신역량 중 산업구조가 특정산업에 특화된 경우 고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외부충격에는 취약할 수 있다. 반면, 다양한 산업과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위기의 깊이와 폭을 줄일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주무현 외, 2018). 지역의 산업기반역량 중 (단순) 노동시장 구조 즉, 숙련, 성별, 연령별 노동력 구성, 노동시장 유연성, 이동성과 같은 노동시장 조건에 따

7) Nübler(2014)가 제시한 산업역량의 개념은 산업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산업기반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과 기술혁신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산업혁신 역량 구축(capability build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2015, 2017; Salazar-Xirinachs et al., 2014).

라 위기의 성격과 전개과정이 상이하다(이두희 외, 2019; Martin & Sunley, 2017). 결국, 지역의 산업 위기 유형과 위기극복(지역경제 회복력)은 해당 지역의 산업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두희 외, 2017).

그림 4 지역 산업위기 원인과 산업역량 요인



자료 : 주무현 외, 2018; 이두희 외, 2019, p.68 수정 및 재구성

따라서 지역의 산업역량(capacity building & capability building)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산업충격으로 위기의 징후가 왔을 때 산업기반역량이 취약하다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이두희 외, 2019). 반면에 지역 특화산업이 쇠퇴기에 있어 산업전환이 필요할 때 산업구조나 산업 다각화, 고급인력 등의 산업혁신역량이 부족하다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기가 힘들다(이두희 외, 2019). 실제,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산업역량의 결과를 보면, 산업이 발달한 많은 지역에서 산업역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위기가 초래된 지역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이두희 외, 2020; <표 3> 참고).

표 3 지역산업역량 종합지수 및 순위(2020)

산업경제통계권 지역명	종합지수	순위	산업경제통계권 지역명	종합지수	순위
[경기]오산-화성	1.621	1	[강원]원주-횡성-양평	1.176	36
[경기]수원	1.611	2	[경남]거창-합천-[경북]고령-성주	1.137	37
[대전]서-유성-[충남]계룡-논산	1.604	3	[광주]-남-서구-[전남]나주	1.126	38
[서울]구로-영등포	1.552	4	[서울]동작-용산-중구	1.126	39
[인천]연수-옹진-중구	1.530	5	[경남]밀양-의령-창녕-창원-함안	1.122	40
[경기]김포-[인천]강화-서구	1.512	6	[부산]남-동-영도-중구	1.116	41
[경기]광명-[서울]관악-금천	1.511	7	[대전]대덕-동-중구-[충남]금산-[충북]영동-옥천	1.101	42
[경기]과천-성남-[서울]서초	1.507	8	[서울]서대문-은평-종로	1.096	43
[경기]군포-안양-의왕	1.468	9	[전북]군산-익산-[충남]부여-서천	1.092	44
[경기]여주-용인-이천	1.448	10	[부산]수영-연제	1.078	45
[세종]-[충남]공주-[충북]보은-청주	1.445	11	[경기]가평-구리-남양주	1.067	46
[서울]강남-송파	1.424	12	[강원]강릉-고성-속초-양양-평창	1.055	47
[경기]안성-평택	1.398	13	[경남]남해-사천-산청-진주-하동-함양	1.054	48
[충남]아산-천안	1.372	14	[인천]계양-부평	1.052	49
[경기]시흥-안산	1.369	15	[전남]광양-순천-여수	1.046	50
[경기]광주-하남	1.367	16	[서울]강북-노원-도봉	1.041	51
[경남]양산-[울산]울주	1.350	17	[경북]경주-영덕-울릉-포항	1.038	52
[경남]김해-[부산]강서	1.333	18	[경기]동두천-연천-의정부-포천	1.032	53
[경기]고양-[서울]마포	1.307	19	[대구]남-서-수성-중구	1.022	54
[충북]괴산-음성-증평-진천-충주	1.300	20	[전남]담양-[전북]고창-부안-순창-정읍	1.019	55
[대구]달서-달성	1.293	21	[충남]당진-서산-예산-태안	1.018	56
[경북]구미-군위-김천-상주-칠곡	1.269	22	[서울]동대문-성북-중랑	1.014	57
[인천]남-남동-동구	1.267	23	[부산]부산진-북-사상	0.993	58
[경기]부천	1.261	24	[전남]곡성-구례-[전북]남원-무주-완주-임실-장수-진안	0.992	59
[경북]경산-영천-청도	1.253	25	[부산]사하-서구	0.985	60
[경기]양주-파주	1.228	26	[강원]영월-[충북]단양-제천	0.970	61
[서울]강동-광진-성동	1.225	27	[부산]금정-동래	0.964	62
[광주]광산-[전남]무안-영광-장성-함평	1.214	28	[울산]남-동-북-중구	0.960	63
[강원]양구-인제-철원-춘천-홍천-화천	1.214	29	[충남]보령-청양-홍성	0.955	64
[광주]동-북구	1.214	30	[경북]문경-봉화-안동-영양-영주-예천-의성-청송	0.937	65
[서울]강서-양천	1.207	31	[전남]강진-고흥-보성-완도-장흥-진도-해남-화순	0.925	66
[전북]김제-전주	1.199	32	[전남]목포-신안-영암	0.896	67
[대구]동-북구	1.198	33	[강원]동해-삼척-정선-태백-[경북]울진	0.787	68
[부산]기장-해운대	1.192	34	[경남]거제-고성-통영	0.589	69
[제주]서귀포-제주	1.186	35			

자료 : 이두희 외, 2020, pp. 76-77.

따라서 지역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전환과 산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위기극복 사례로는 미국의 산업공유자산 정책인 제조혁신부흥 전략이 있다. Pissano & Shih(2009)의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산업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은 기존의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와 산업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주는 이론이다(이두희 외, 2018, 2019; 정준호, 2017; Pissano & Shih, 2012). 미국의 러스트벨트는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의 일부 지역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철강 및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지역이었지만 일본과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발달과 지역의 기업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산업이 쇠퇴하며 위기가 찾아왔다(이두희 외, 2019). Pissano & Shih(2012) 교수가 제안한 것은 제조업 가까운 곳에 R&D센터나 혁신 관련 기관 설치 및 산업인력 지원을 위해 산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제조혁신부흥 정책이었다(이두희 외, 2018, 2019). 바로 머리와 팔-다리-몸통을 결합하여 온전한 신체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스마일커브에서 부가가치가 낮다고 생각했던 제조업 부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이 혁신이 스마일커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산업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이두희 외, 2018, 2019; [그림 3]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편 방향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 또는 지역 내의 산업역량이 강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이두희 외, 2017, 2019).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역 산업과 고용에 영향을 준 2020년을 중심으로 산업 및 고용의 변화와 산업재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산업재편 방향을 통해 지역의 산업 및 고용의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구조와 지역일자리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20년을 중심으로 올해 2/4분기까지 지역별로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해당 지표의 회복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수출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가장 빠른 회복과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고용률은 가장 낮은 회복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광주가 29.4%로 지난해 대비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생산은 서울이 8.0%로 가장 높았다. 물론 거저효과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고용률은 대구가 3.2%p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은 -0.2%p로 전년도 대비 고용률 성장이 가장 저조하였다.

표 4 2021년 2/4분기 주요 지역경제 지표

(단위 : 전년동분기비, %, %p)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소매판매	수출	고용률	소비자물가
전국	13.0	5.7	4.4	42.1	1.0	2.5
서울	11.3	8.0	6.4	72.4	0.5	1.8
부산	2.0	6.0	4.8	59.5	1.8	2.4
대구	28.2	5.3	-0.4	65.1	3.2	2.7
인천	15.6	5.1	-4.0	27.7	0.4	2.4
광주	29.4	4.0	-4.2	49.3	0.1	2.6
대전	13.0	3.4	-4.3	12.6	1.0	2.7
울산	10.8	3.3	-5.8	66.0	-0.2	2.5
세종	14.7	-	-	31.3	0.9	-
경기	18.5	5.4	-1.0	27.1	0.8	2.6
강원	4.8	5.0	-2.4	47.6	1.0	2.8
충북	19.6	3.7	-2.2	19.3	0.0	2.7
충남	7.1	5.7	-3.8	42.4	1.3	2.9
전북	12.2	2.3	-5.1	59.4	2.2	3.0
전남	9.1	3.5	0.0	84.4	1.3	2.9
경북	9.6	4.9	-0.7	31.9	0.4	2.6
경남	8.7	3.3	-3.3	20.1	1.2	2.7
제주	10.2	5.5	15.7	92.7	2.5	3.3

자료 : 통계청,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산업생산지수(광업제조업생산지수)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인 영향을 준 2020년에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더 악영향을 받았다(<표 6> 참고). 2021년 들어 회복도 수도권은 2020년 12월부터 전년도 대비 양(+)의 증가율이었지만(2021년 4월, 20.9%), 비수도권은 2021년 4월에 들어서야 양(+)의 증가율(8.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설법인 수의 증감에서도 2021년 4월 기준, 수도권은 전년도 대비 9.8%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4.8%로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표 7> 참고).

표 5 광공업생산 및 서비스업생산 증감률(불변)

(단위 : 전년동분기비, %)

시도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시도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전국	0.8	2.5	4.6	-5.9	0.2	0.0	4.4	13.0	전국	1.5	1.9	-1.0	-3.4	-1.7	-2.0	2.2	5.7
서울	-2.6	-9.5	-13.9	-21.4	-16.2	-10.1	0.9	11.3	서울	2.4	3.9	2.0	-0.5	2.3	1.0	6.0	8.0
부산	-2.5	-1.0	-0.2	-9.6	-7.1	-9.6	-7.4	2.0	부산	0.6	0.4	-3.3	-5.5	-4.2	-3.7	0.5	6.0
대구	0.1	-2.5	-3.8	-24.6	-11.0	-6.3	1.1	28.2	대구	0.7	1.1	-4.5	-4.8	-1.1	-1.6	2.6	5.3
인천	-6.2	-2.0	-0.1	-6.8	4.2	-1.4	3.4	15.6	인천	0.2	1.5	-4.3	-11.8	-11.6	-11.6	-4.7	5.1
광주	-0.1	-8.4	0.6	-19.1	12.5	7.6	7.9	29.4	광주	1.5	1.7	-0.7	-1.8	-2.6	-1.2	0.1	4.0
대전	14.1	9.3	-4.3	-16.0	-3.0	-4.0	3.8	13.0	대전	0.9	1.4	-2.9	-2.9	-2.0	-2.5	1.2	3.4
울산	1.2	-2.8	-5.6	-13.7	-3.0	-3.6	4.6	10.8	울산	-0.2	0.9	-2.3	-4.6	-3.2	-2.4	0.0	3.3
세종	6.2	3.9	11.7	1.6	4.7	10.2	8.8	14.7	세종	-	-	-	-	-	-	-	-
경기	1.1	14.0	22.6	2.9	10.6	1.0	11.0	18.5	경기	0.9	2.3	0.1	-1.6	-0.8	-1.6	1.9	5.4
강원	1.6	-0.2	-2.0	-8.7	-5.3	-5.1	-3.6	4.8	강원	0.1	1.2	-4.1	-4.7	-5.8	-5.1	-0.8	5.0
충북	0.8	-2.6	-4.2	-13.8	-4.9	2.2	7.6	19.6	충북	-0.4	0.4	-2.7	-3.6	-3.1	-3.5	0.1	3.7
충남	-3.6	-3.6	1.1	-6.7	-4.2	0.1	-0.2	7.1	충남	1.3	2.3	-2.7	-4.3	-2.6	-3.2	1.4	5.7
전북	-5.2	-5.4	-3.0	-10.4	-4.7	-4.7	2.6	12.2	전북	1.4	2.0	-0.8	-0.9	-0.5	-3.1	0.4	2.3
전남	2.0	7.3	4.1	-1.2	-2.0	-3.7	2.9	9.1	전남	2.0	2.0	-0.1	-1.8	-1.9	-3.6	-0.4	3.5
경북	-0.9	-4.1	-2.6	-12.6	-4.0	-4.1	4.3	9.6	경북	0.6	1.7	-4.1	-5.3	-3.5	-4.8	1.6	4.9
경남	-0.1	2.3	0.0	-15.2	-7.0	-5.8	-4.2	8.7	경남	-0.1	0.8	-1.8	-3.0	-2.4	-2.1	0.1	3.3
제주	-7.9	3.4	-12.6	-7.2	-2.9	-1.6	3.7	10.2	제주	0.7	3.0	-10.8	-12.9	-8.6	-9.5	-6.3	5.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세종은 사업체수 과소로 하위 업종별 지수 미공표)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표 6 산업생산지수(광공업제조생산지수(월별))

(단위 : 2015=100, %)

구분	사도	'19.12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1.01	'21.02	'21.03	'21.04
전국		115.1 (6.4)	99.7 (11.0)	101.6 (-5.2)	104.3 (-1.3)	99.6 (-3.7)	109.0 (-2.8)	118.1 (2.6)	110.2 (7.8)	100.5 (0.8)	118.6 (4.4)	114.2 (12.4)
수도권	서울	105.9 (-6.3)	82.2 (-12.0)	76.3 (-21.3)	72.8 (-19.5)	77.8 (-18.1)	86.7 (-16.2)	99.2 (-6.3)	95.3 (-5.6)	82.5 (0.4)	91.5 (8.8)	84.4 (10.6)
	인천	116.7 (0.8)	102.6 (6.7)	97.4 (-9.0)	100.2 (-1.1)	101.5 (-1.7)	105.3 (-2.3)	120.7 (3.4)	115.0 (9.8)	100.4 (-2.1)	113.8 (1.3)	110.9 (13.9)
	경기	146.0 (22.3)	129.3 (29.6)	123.4 (2.5)	137.9 (9.0)	129.8 (10.8)	135.8 (-0.1)	152.7 (4.6)	144.4 (10.5)	139.8 (8.1)	166.7 (14.0)	151.2 (22.5)
수도권 계		139.0 (17.4)	122.1 (23.6)	116.3 (-0.4)	127.8 (6.2)	122.0 (7.4)	127.9 (-1.3)	144.3 (3.8)	136.6 (9.5)	130.1 (6.6)	153.8 (12.3)	140.6 (20.9)
비수도권	부산	100.3 (4.7)	88.5 (8.3)	88.8 (-8.2)	88.9 (-3.3)	77.2 (-11.7)	81.5 (-14.8)	93.4 (-6.9)	82.9 (-5.4)	78.8 (-11.0)	91.6 (-5.9)	89.5 (0.8)
	대구	104.2 (-0.2)	96.5 (10.2)	86.5 (-20.9)	78.8 (-20.4)	77.8 (-17.7)	96.2 (-10.3)	99.9 (-4.1)	97.6 (4.3)	89.6 (-7.2)	107.0 (5.9)	107.1 (23.8)
	광주	86.2 (-6.5)	83.0 (9.6)	82.5 (-21.8)	90.8 (-5.6)	87.2 (7.1)	103.4 (13.3)	89.8 (4.2)	92.7 (10.1)	90.1 (8.6)	105.3 (5.6)	112.1 (35.9)
	대전	110.4 (5.4)	93.5 (3.8)	94.8 (-17.2)	101.6 (-0.6)	98.9 (-2.6)	100.2 (-16.2)	117.5 (6.4)	101.6 (2.4)	95.9 (2.6)	111.2 (6.3)	107.2 (13.1)
	울산	105.8 (-0.4)	75.4 (-8.5)	89.1 (-8.4)	86.4 (-9.8)	79.9 (-9.8)	96.0 (-3.9)	99.3 (-6.1)	97.2 (7.2)	83.4 (10.6)	100.6 (-2.3)	95.0 (6.6)
	세종	113.9 (6.5)	111.3 (18.4)	110.7 (2.8)	109.0 (4.4)	108.8 (2.4)	120.2 (2.8)	132.9 (16.7)	125.3 (12.4)	116.0 (4.2)	131.7 (9.9)	126.0 (13.8)
	강원	111.8 (1.9)	94.0 (-0.2)	99.7 (-7.7)	98.7 (-4.4)	92.5 (-9.9)	102.3 (-5.5)	105.7 (-5.5)	95.7 (-2.3)	87.6 (-6.8)	103.9 (-2.3)	101.3 (1.6)
	충북	120.3 (-3.5)	107.6 (6.2)	113.0 (-12.1)	108.1 (-8.1)	101.9 (-12.4)	115.9 (-6.3)	128.1 (6.5)	120.3 (12.7)	111.9 (4.0)	129.0 (6.2)	125.4 (11.0)
	충남	127.2 (0.3)	106.3 (3.7)	113.4 (-2.5)	113.0 (-4.1)	112.6 (-4.7)	116.8 (-2.6)	124.7 (-2.0)	120.5 (6.2)	103.4 (-2.7)	120.2 (-4.1)	121.8 (7.4)
	전북	91.8 (-4.7)	82.1 (2.1)	88.9 (-6.6)	81.8 (-8.5)	74.6 (-11.0)	86.9 (-8.0)	91.1 (-0.8)	90.5 (2.5)	83.4 (1.6)	98.1 (3.6)	95.0 (6.9)
	전남	104.2 (7.8)	97.7 (12.2)	95.4 (-4.7)	96.1 (3.9)	98.6 (-3.2)	98.0 (-1.8)	101.4 (-2.7)	105.4 (1.9)	99.3 (1.6)	108.2 (4.9)	103.6 (8.6)
	경북	83.5 (-1.6)	79.3 (1.9)	81.6 (-11.5)	78.1 (-9.5)	81.5 (-8.8)	82.2 (-8.5)	85.6 (2.5)	91.4 (18.1)	78.0 (-1.6)	91.0 (-2.5)	88.3 (8.2)
	경남	96.9 (7.9)	87.7 (9.5)	85.8 (-11.9)	83.5 (-11.1)	72.9 (-13.1)	84.7 (-10.4)	94.0 (-3.0)	89.1 (2.1)	77.5 (-11.6)	94.7 (-2.7)	92.0 (7.2)
	제주	110.4 (-10.4)	96.4 (-4.4)	96.4 (-5.5)	99.7 (-1.1)	108.6 (-5.6)	98.5 (-14.1)	127.8 (15.8)	108.5 (11.5)	94.5 (-2.0)	106.5 (1.7)	101.7 (5.5)
비수도권 계		104.5 (1.1)	90.8 (4.2)	94.4 (-9.1)	92.5 (-6.9)	88.9 (-8.4)	97.0 (-6.1)	103.3 (-1.1)	100.8 (6.6)	89.6 (-1.3)	104.9 (-0.5)	102.7 (8.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표 7 신설법인 수 추이(월별)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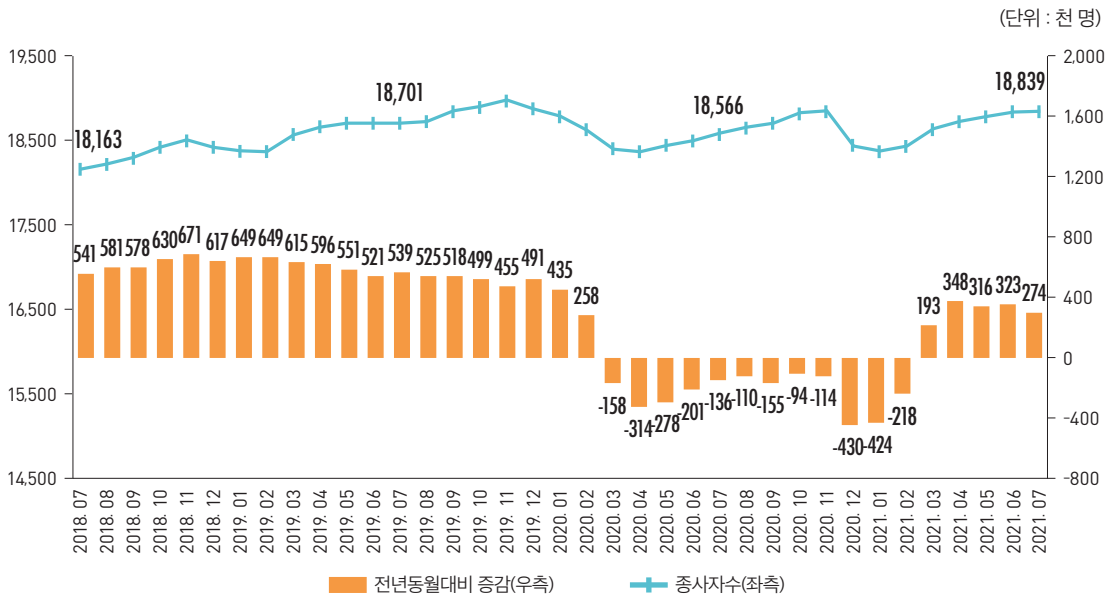
구분	사도	'19.12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1.01	'21.02	'21.03	'21.04
전국		9,891 (20.3)	11,450 (49.8)	10,086 (2.2)	11,983 (43.7)	9,037 (2.7)	8,188 (-11.2)	10,259 (3.7)	10,627 (-1.0)	9,247 (-19.2)	11,196 (-5.0)	10,869 (7.8)
수도권	서울	2,855 (12.0)	3,036 (34.7)	2,606 (-11.1)	3,099 (21.1)	2,689 (-4.0)	2,585 (-6.2)	2,987 (4.6)	2,875 (0.9)	2,702 (-11.0)	3,264 (2.9)	3,100 (19.0)
	인천	406 (18.4)	468 (30.4)	478 (9.4)	555 (41.2)	393 (9.8)	376 (-9.2)	464 (14.3)	482 (11.3)	378 (-19.2)	523 (-5.1)	458 (-4.2)
	경기	2,681 (27.8)	3,397 (70.3)	2,922 (13.3)	3,667 (70.4)	2,588 (8.6)	2,147 (-13.8)	2,812 (4.9)	2,890 (-6.9)	2,530 (-25.5)	2,999 (-14.1)	3,035 (3.9)
수도권 계		5,942 (19.1)	6,901 (49.8)	6,006 (1.0)	7,321 (43.4)	5,670 (2.3)	5,108 (-9.8)	6,263 (5.4)	6,247 (-2.2)	5,610 (-18.7)	6,786 (-5.9)	6,593 (9.8)
비수도권	부산	533 (29.7)	587 (59.9)	564 (19.7)	596 (39.6)	421 (0.2)	346 (-15.8)	458 (-14.1)	532 (1.1)	435 (-25.9)	561 (-4.6)	590 (4.6)
	대구	347 (39.4)	396 (73.7)	321 (3.5)	366 (30.7)	262 (-1.1)	237 (-19.4)	328 (-5.5)	377 (3.6)	269 (-32.1)	339 (-6.1)	337 (5.0)
	광주	337 (23.0)	359 (56.8)	364 (11.3)	463 (64.8)	237 (-9.9)	278 (-17.3)	335 (-0.6)	333 (-10.5)	278 (-22.6)	356 (-6.8)	336 (-7.7)
	대전	242 (20.4)	313 (58.9)	272 (27.1)	327 (54.2)	196 (-10.9)	187 (-16.5)	221 (-8.7)	265 (-7.0)	196 (-37.4)	275 (-12.1)	262 (-3.7)
	울산	112 (12.0)	171 (87.9)	135 (21.6)	154 (42.6)	106 (-4.5)	140 (7.7)	128 (14.3)	134 (-6.9)	138 (-19.3)	133 (-14.2)	142 (5.2)
	세종	72 (67.4)	91 (75.0)	54 (-20.6)	91 (85.7)	42 (-14.3)	44 (-20.0)	71 (-1.4)	55 (-29.5)	69 (-24.2)	81 (-16.5)	91 (68.5)
	강원	214 (20.9)	253 (48.0)	265 (7.7)	220 (46.7)	189 (34.0)	172 (7.5)	231 (7.9)	234 (-4.9)	258 (2.0)	228 (-13.6)	239 (-9.8)
	충북	242 (16.3)	276 (38.7)	254 (4.1)	336 (71.4)	220 (-5.6)	221 (6.3)	261 (7.9)	298 (9.6)	215 (-22.1)	270 (0.0)	252 (-0.8)
	충남	362 (34.1)	458 (69.6)	395 (16.2)	421 (45.2)	342 (12.9)	255 (-16.4)	378 (4.4)	398 (-4.3)	365 (-20.3)	472 (15.7)	447 (13.2)
	전북	305 (14.2)	379 (49.8)	316 (0.3)	358 (62.7)	281 (18.1)	250 (-19.6)	312 (2.3)	365 (7.4)	299 (-21.1)	357 (-6.3)	287 (-9.2)
	전남	326 (7.6)	370 (23.7)	327 (-9.4)	351 (21.0)	295 (5.7)	242 (-27.3)	366 (12.3)	375 (3.3)	295 (-20.3)	389 (-3.2)	349 (6.7)
	경북	343 (17.1)	366 (31.7)	315 (-16.2)	380 (23.0)	323 (19.6)	284 (-14.2)	389 (13.4)	410 (7.0)	321 (-12.3)	360 (8.4)	360 (14.3)
	경남	388 (13.8)	406 (45.0)	383 (-8.2)	450 (45.2)	335 (-5.6)	294 (-16.7)	394 (1.5)	474 (6.3)	362 (-10.8)	431 (-8.1)	425 (11.0)
제주	126 (35.5)	124 (2.5)	115 (-8.7)	149 (30.7)	118 (11.3)	130 (20.4)	124 (-1.6)	130 (13.0)	137 (10.5)	158 (6.8)	159 (38.3)	
비수도권 계		3,949 (22.3)	4,549 (49.9)	4,080 (3.9)	4,662 (44.1)	3,367 (3.5)	3,080 (-13.5)	3,996 (1.2)	4,380 (0.7)	3,637 (-20.0)	4,410 (-3.5)	4,276 (4.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2021),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20년을 중심으로 지역고용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3월 이후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그림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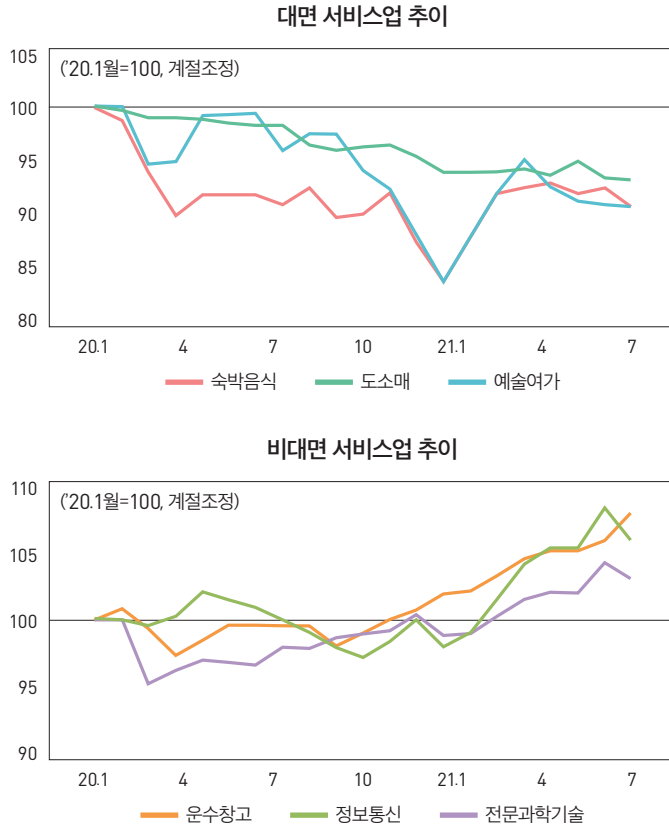
그림 5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2021.8),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한편, 2021년 2월까지의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2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62만 8천 명의 취업자가 감소하였다(통계청, 2021). 이러한 코로나19의 지역고용 충격은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추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충격 가운데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성장률이 대면 서비스업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 비대면 서비스업인 운수창고와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업종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세가 계속되었다(그림 6 참고).

그림 6 대면 vs. 비대면 서비스업 고용 추이 비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2021년 7월

코로나19는 지역 산업 및 고용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조사(2021)에 따르면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8> 참고). 이 두 산업의 피보험자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성장세를 보인 산업으로 확인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대면 서비스산업이 악영향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서비타이제이션)에도 영향을 받아 산업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산업별 종사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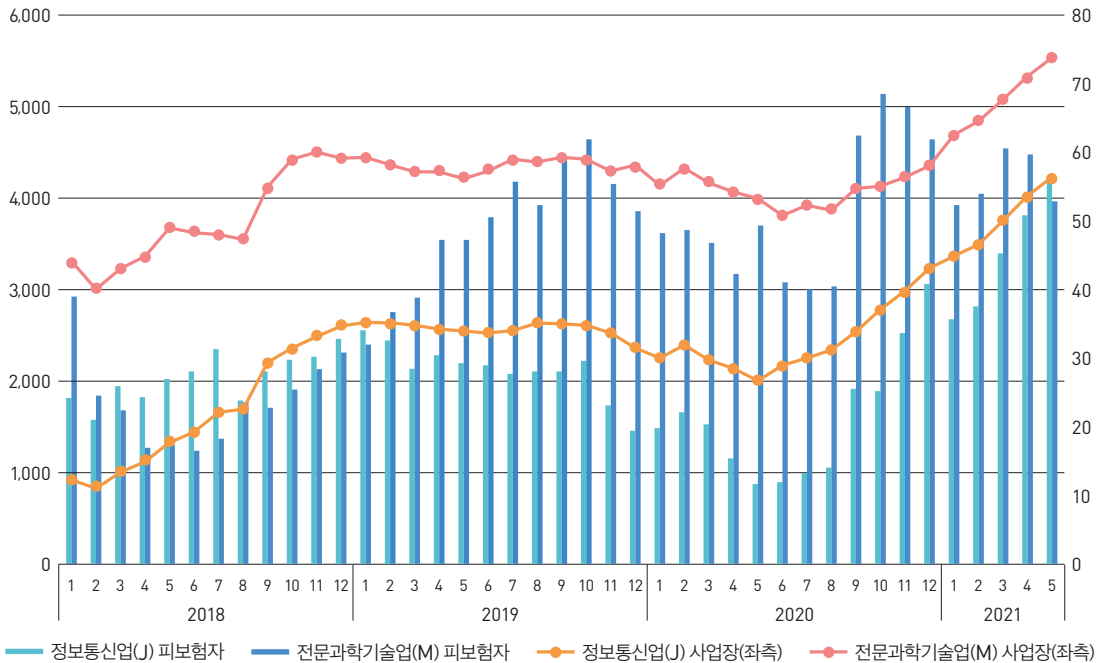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7월			'21.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8,566	-136	-0.7	18,812	323	1.7	18,839	274	1.5
광업	12	-1	-4.7	12	0	0.4	12	0	0.2
제조업	3,643	-83	-2.2	3,659	19	0.5	3,663	19	0.5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공급업	69	2	3.6	70	2	3.2	70	1	1.4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15	4	3.2	118	4	3.3	119	4	3.4
건설업	1,388	6	0.4	1,403	12	0.9	1,389	0	0.0
도매 및 소매업	2,260	-63	-2.7	2,273	21	0.9	2,282	23	1.0
운수 및 창고업	702	-28	-3.8	702	1	0.1	706	4	0.6
숙박 및 음식점업	1,162	-130	-10.1	1,092	-51	-4.5	1,098	-64	-5.5
정보통신업	610	-1	-0.2	657	52	8.6	664	54	8.8
금융 및 보험업	769	9	1.1	772	8	1.1	772	3	0.5
부동산업	411	15	3.9	429	18	4.5	430	19	4.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1,094	37	3.5	1,146	57	5.2	1,152	58	5.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1,137	-45	-3.8	1,120	-17	-1.5	1,123	-13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6	64	8.4	858	60	7.5	863	47	5.8
교육서비스업	1,623	36	2.3	1,671	44	2.7	1,650	27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09	91	5.0	1,995	99	5.2	2,014	106	5.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09	-40	-11.6	301	1	0.4	301	-8	-2.6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537	-7	-1.2	531	-9	-1.6	531	-6	-1.1

자료 : 고용노동부(2021.8),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7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장 수 및 피보험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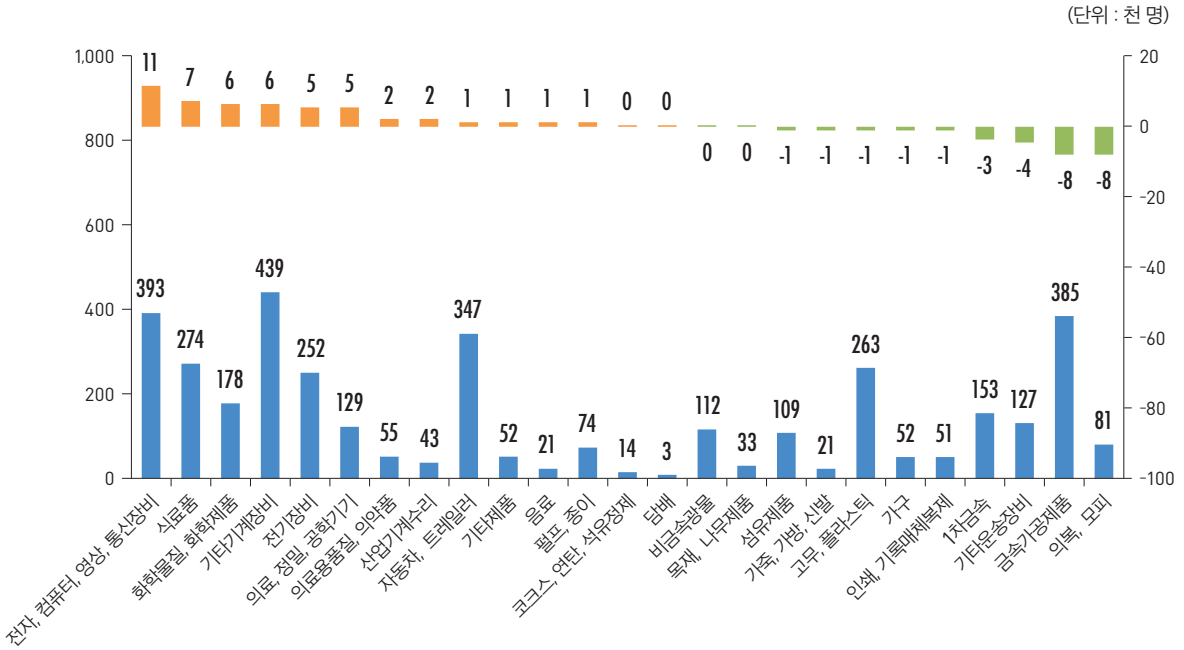
(2018년 1월~2021년 5월, 좌측 단위 개, 우측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2021, 5월호

제조업의 경우도 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회복도 빨랐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전자,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식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장비’, ‘전기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의료용물질, 의약품’, ‘산업기계수리’,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다(그림 8) 참고). 이들 산업은 최근 디지털화와 연관된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융합과 관련이 높은 산업군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 크게 받았으며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표 10> 참고).

그림 8 제조업 종사자 수 및 증감(2021년 7월)



자료 : 고용노동부(2021.8),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9 제조업 세부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

업종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2020	상반기	-1.4	1.8	-1.2	-4.9	-1.9	1.1	-5.6
	하반기	-1.2	-4.9	-1.2	-2.4	-2.7	2.9	-5.4
2021	상반기	-0.1	-5.6	1.6	0.5	-1.4	2.9	1.4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1), 「2021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 주 : 1) 취업자 수 증감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 2) 2020년 실적치는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참조

표 10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7월			'21.6월			7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체	18,566	-136	-0.7	18,812	323	1.7	18,839	274	1.5
300인 미만	15,618	-187	-1.2	15,784	230	1.5	15,804	185	1.2
300인 이상	2,947	51	1.8	3,028	93	3.2	3,035	88	3.0

자료 : 고용노동부(2021.8),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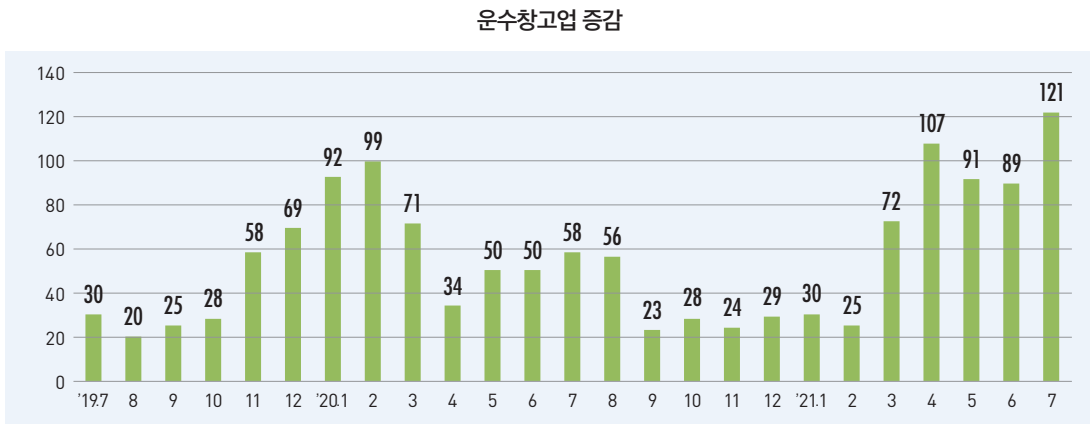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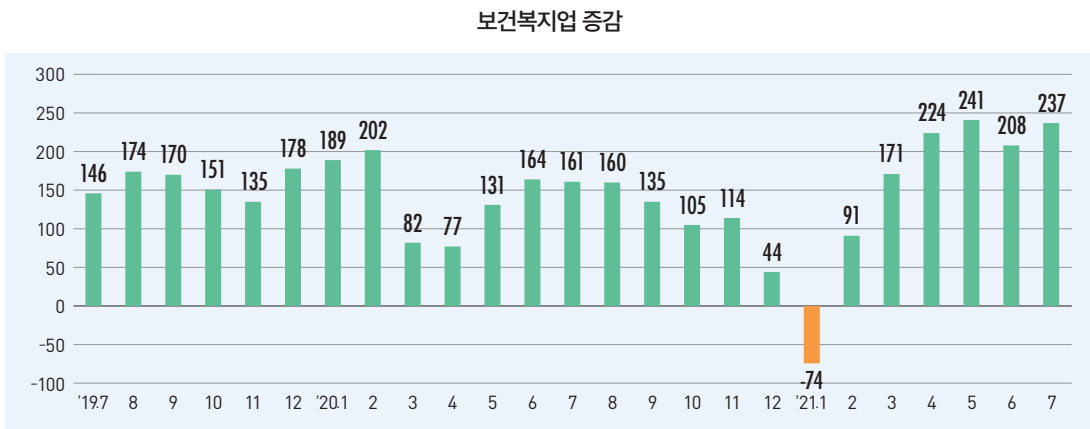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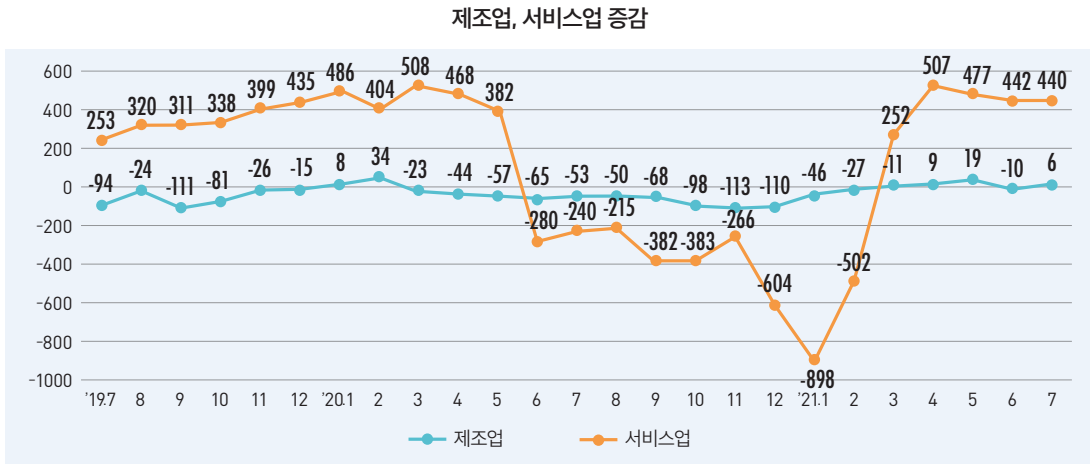
코로나19 전염병의 충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동향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제조업은 비교적 고용의 변화가 완만한 반면, 서비스업의 등락은 업종별로 심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운수창고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이 성장한 반면, 대면 서비스업종인 도소매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융합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다. 제조업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업과 관련이 높은 업종이 코로나19 기간에도 고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과 <표 9> 참고).

일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충격은 산업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대면과 관련된 정보산업이나 디지털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산업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경제 충격 속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서비스업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모바일,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무인항공(드론), 자율주행 등으로 관련 제조업의 성장도 확연히 눈에 띈다. 또한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업과 관련 제조업은 부가가치도 높은 산업이다. 바로 제III장에서 설명한 스마일커브 및 하트커브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화 또는 융합인 서비타이제이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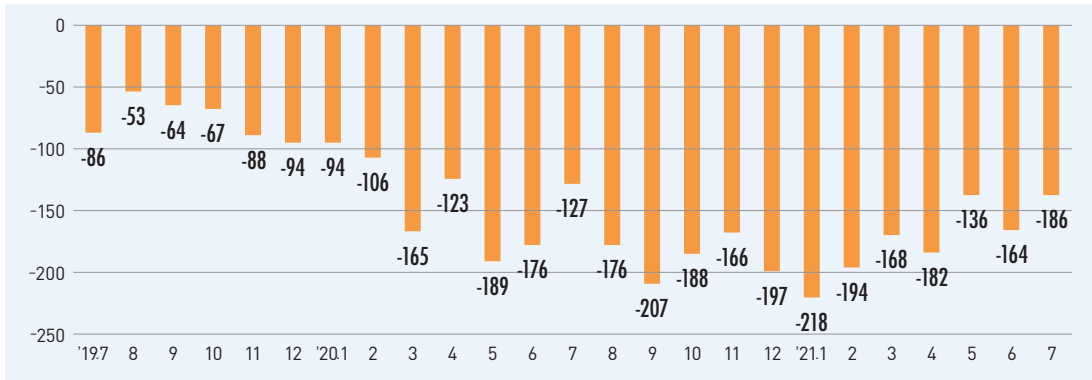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충격은 스마일커브에서 하트커브로 이동하는 산업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치사슬의 부가가치가 이동하는 경향과도 연계된 산업재편이다. 주요국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의 추이는 서비스 중간재 비중과 밀접한 서비타이제이션을 설명해 준다(<표 11> 참고). 주요국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와 서비스 중간재 비중을 보면 미국이 34.9%로 가장 높은 서비타이제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가 2018년 기준 96.7천 달러로 미국의 111.5천 달러에 비해 낮지만 주요 선진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높다. 하지만 서비타이제이션과 관련이 높은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재 비중은 17.8%로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그림 10) 참고).

그림 9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도소매업 증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2021년 7월

표 11 주요국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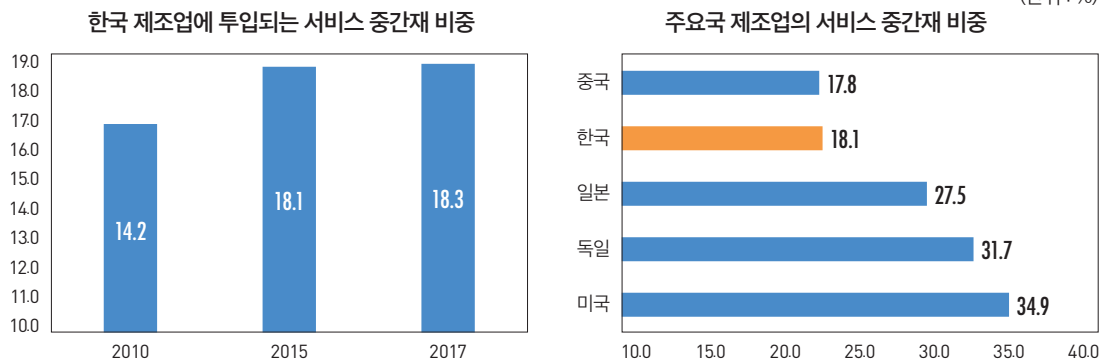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증가율
중국	19.6	20.6	21.8	23.2	25.3	27.8	7.3
일본	69.8	72.0	79.9	77.2	79.8	81.9	3.3
독일	80.1	81.2	84.6	86.2	88.3	90.2	2.4
미국	105.4	107.5	108.2	104.9	107.5	111.5	1.1
한국	93.0	88.0	86.3	89.2	94.4	96.7	0.8

자료 : 심혜정(2020), p. 3 재인용, BCG Report(2020)

그림 10 한국 및 주요국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재 비중

(단위: %)



자료 : 심혜정(2020), p. 4 재인용, BCG Report(2020)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 비중은 2015년 기준 18.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미래유망 산업에서도 그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산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제품이 31.6%(2017)로 높은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12>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충격은 산업의 서비타이제이션을 강화하는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지역의 주력산업은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한국 제조업 부문별 서비스 중간재 비중

(단위 : %)

산업	2010(A)	2017(B)	차이(B-A)
제조업 전체	14.2	18.3	4.1
1차 금속제품	7.8	15.8	8.0
화학제품	14.3	21.1	6.8
비금속광물제품	26.0	31.6	5.6
전기 및 전자기기	14.3	18.2	3.9
금속제품	15.8	19.6	3.8
목재·종이·인쇄	20.8	24.4	3.6
석탄 및 석유제품	6.0	9.2	3.1
음식료품	20.5	22.6	2.0
운송장비	14.4	16.1	1.7
섬유 및 가죽제품	21.0	20.2	-0.8
정밀기기	19.0	17.4	-1.6
기계 및 장비	16.3	14.5	-1.8

자료 : 심혜정(2020), p. 4.

향후 산업재편 방향으로 예상되는 서비타이제이션은 무엇이며 지역산업 및 일자리에 어떻게 적용될까?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은 4차 산업과 정보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이 제조업과 융합 또는 연계하여 서비스화를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화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은 제조업과 상품이 정보통신(ICT)기술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산 파나시아 기업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선박용계측기기, 레벨계측기, 육상경보장치, 선박구성부품 제조 등 항해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를 생산하던 파나시아는 정부의 스마트 시범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 기존 수작업

공정을 협동 로봇에 의한 자동화 공정으로 대대적으로 혁신하였다. 그 결과, 매출액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ICT 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선박용 각 부품에 센서를 장착해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를 위성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추적하고 부품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교체주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서비타이제이션의 대표적 기업 사례로 세계 1위의 타이어 기업, 브리지스톤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은 브리지스톤은 ‘타이어손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량용 클라우드플랫폼과 결합하여 타이어에 생기는 흠집 및 손상, 마모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한 뒤 운전자에게 즉각 통보해 주는 새로운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의 재편방향이 될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한 대응책도 코로나19의 지역 경제 충격을 극복할 지역산업 및 고용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구체적인 코로나19 이후 산업재편에 대응한 산업 및 고용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3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

모델	대표사례	내용
통합경험서비스 (Holistic Experience Service)	삼성전자 패밀리 허브 냉장고	냉장고에 사물인터넷 기능을 통한 식재료 관리 및 요리법 제공과 음악,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더해 주방을 생활 중심 공간으로 구현
	아마존 킨들(Kindle)	아마존의 전자책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서비스 구축
제품금융 서비스 (Product Financial Service)	미국 건강보험 상품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스카, 존 핸콕 등의 보험사는 운동량과 생활습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러한 기기를 착용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제공
	동부화재 smarT-UBI	스마트폰 네비게이션과 연계해 급과속이나 급가속과 같은 운전습관을 측정하고,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PaaS (Product As A Service)	코웨이 안심 하트 서비스	정수기 필터 교체, 물탱크 및 유로 관리, 주요 위생관련 부품 및 파우셋 교체 등 지속적인 관리서비스 제공
	현대 자동차 블루멤버스	정비예약, 방문점검, 사고차 무상견인, 긴급출동 등 차량관리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제품 (Product On the Cloud Service)	현대 중공업 스마트 커넥티드십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고객의 제반 데이터가 현대 중공업의 클라우드서비스에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선박의 운행과 관련된 최적화서비스를 제공
	캐터필러 장비관리 솔루션	GPS를 통한 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장비의 상태와 이력을 분석하고 부품 교체, 연비 향상, 불법 사용 감시 등의 서비스 제공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종합제작업체로서 항공기 개발, 생산 및 시험 평가 능력과 더불어 항공기 운항정비와 기체 및 부품 정비, 항공기 개조 등을 포함하는 MRO 사업을 수행
	GE 항공사업부	항공기 엔진 판매와 더불어 엔진 도입을 위한 금융서비스, 엔진의 원격진단과 점검,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자산관리 등 제품생명주기상의 서비스 제공

자료 : 이동희 외, 2018, p.116; 김광순, 2017

Ⅳ 마치면서 : 지역산업구조 재편 방향과 지역 일자리창출 방안

중세시대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 결국 급속한 중세사회 재편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던 인류의 경험이 있다(유현준, 2021). 과연 지금의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산업재편이 어떤 르네상스를 이끌 것인지, 또 그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COVID-19)이 지역경제에 위기로 다가오면서 산업재편이 빨라지고 있음을 지금까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명한 산업재편의 방향은 가치사슬에서 서비타이제이션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이 미약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바로 이 점은 지역산업의 위기를 내포한다. 또 코로나19를 통해 빠르게 진행될 산업재편은 지역의 고용위기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역중심 방역이 빠르고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도 지역주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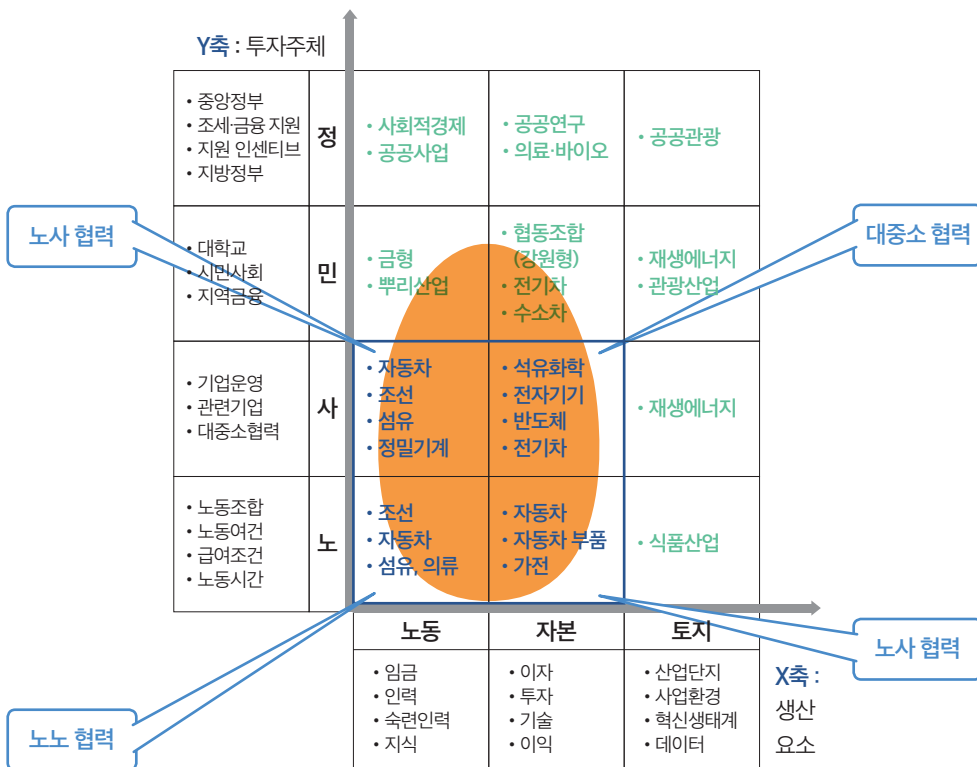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강화되면서 빅데이터, AI, 자동화 등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해 스마트 물류와 제조가 함께 융합되면서 서비스화되는 서비타이제이션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바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스마일커브에서 하트커브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에서 취약한 서비타이제이션을 극복할 산업정책과 전략이 먼저 요구된다.

과연 코로나19의 지역 산업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빅딜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최근 시행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지역의 '산업 공유자산(Industrial Commons)'은 다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으로 "혁신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지리적으로 착근된 집합적인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및 제조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두희 외, 2019). 여기에는 지역경제 주체인 노·사·민·정과 관련 정책, 조직이 있다. 이들은 산업재편과 관련 투자주체가 될 수도 있다. 서비타이제이션에 대응, 지역산업 재편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협력 혹은 위험 분담을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산업공유자산의 생산요소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다. 지역 생산요소시장의 지역적 배분인 토지에 대한 지대,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가 대타협(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빅딜에는 먼저 토지빅딜이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비교적 저렴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빅딜이다. 이어서 노동 빅딜은 노동자측이 상생협약으로 적정 임금과 시간 협약, 사측의 정년연장이나 임금 보장 등의 빅딜이 가능할 것이다. 자본 빅딜은 연구개발 및 혁신과 투자 협약, 금융지원 등이 가능한 빅딜이다. 마지막으로 수요 빅딜은 지역 주민의 투

자환경 조성 합의, 금융(지역은행)과 고급노동공급(대학) 등 협약과 주민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시민사회 압력(Big Push) 등이다. 따라서 투자주체인 노·사·민·정의 조직과 목표가 생산요소의 분배와 타협, 협력의 결과물인 지역 빅딜을 통해 서비타이제이션 관련 산업재편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다. 투자 대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사업모델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빅딜의 결과는 지역 산업 및 고용의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재편의 방향인 디지털 및 탄소중립 관련 산업과 연계한 서비타이제이션을 위한 지역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율탁동시 부화 모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형



자료 : 이두희 외, 2021, p. 582.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역산업 전환을 위해 지역의 빅딜로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성장모멘텀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산업(차세대차와 자율주행과AI, Big Data 등)과 그린산업(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의 뉴딜 및 서비타이제이션에 대응한 지역투자 유치를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향후 산업재편의 방향인 서비타이제이션의 효과적인 대응이 될 빅딜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 빅뉴딜은 초광역 산업혁신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를 넘어 초광역 산업경제 혁신기반구축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신한반도 경제 산업기반 구축, 혁신역량(R&D) 투자, 산업전환 관련 R&D 초광역 투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및 고용의 동향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고용을 비롯한 경제현황은 디지털화 및 서비스화가 미흡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소비, 생산, 고용, 수출, 경기지수 등에서 더 심각한 것을 확인하였고 향후 가속화될 서비타이제이션에도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주력산업이 러스벨트화되는 산업공유자산의 비극을 막도록 제조업의 공급라인을 스마트화 및 서비타이제이션하고 수요기반을 확충할 새로운 형태의 대타협인 빅딜(Big Deal)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은 지역 산업공유자산을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이 하나가 되는 미국의 산업르네상스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지역의 지속가능한 내생적 성장(endogeneous growth)을 목표로 하고, 뉴노멀 시대 시민 수요의 지원(big push)을 바탕으로 한 빅딜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 극복전략이나 정책방안은 제조업의 서비스화(서비타이제이션)를 기반으로 한 비수도권의 위기극복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이다. 거버넌스로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 서비스화를 위한 '(가칭)광역 서비타이제이션 센터'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가치사슬이 초광역화 경향을 고려한 가치사슬의 완결성이 높은 초광역 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프랑스와 같이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지자체가 함께 하는 '(가칭) 광역지역발전청'을 설립하여 산하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역 서비타이제이션 센터'를 두는 방안이다. 지역의 제품 또는 산업의 서비스화(서비타이제이션)를 위한 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연계협력의 필요(3D 프린팅과 로봇산업 등 스마트공장과 자동화 등)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산업구조개편 전략(혁신도시2.0, 산단대개조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등도 동시 연계)이다. 신한류 경제에 부합한 문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 산업화 강화(K-POP, Food 등)와 연계한 산업구조개편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서비타이제이션 산업고용구조개편을 위해 '지역고용산업구조개편 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역지방발전청은 중앙부처 공무원

의 범부처 패키지 지원과 광역시도 공무원이 함께 기획하는 형태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산업위기를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이 감지 될 경우 특별법으로 개정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특별법에 있는 사전위기 대응 지역을 적극 이용하여 위기가 오기 전에 산업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이후 현재 우리나라 경제부문 중에서 가장 회복이 느린 소비 및 중소기업 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국민지원금을 지역전자화폐(상품권)로 지급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서비타이제이션의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단기에는 기초지자체 중심에서 광역시도 단위 또는 초광역권의 지역전자화폐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비수도권 협력형 초광역 지역전자화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전자화폐 수요처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대금이나 물품(소부장 관련)도 지급 가능한 서비타이제이션용 지역화폐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가 도래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초광역 및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골목상권으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한 우리 동네 골목상권을 만들어 스마트오더, 디지털 사이니즈 등 스마트 상점 조성 지원과 기업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장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저신용자 자금지원을 통한 포용금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산업재편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규 특화펀드 개발 및 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출상품의 다양성도 커지고 농산물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데 글로벌 서비타이제이션을 위해 지역 수출 마케팅 플랫폼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 코트라(KOTRA)가 무역 관련 비대면회의(화상회의)를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수출입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 서비타이제이션 센터의 플랫폼과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비대면 수출 및 시장개척 지원, 공공시장 및 공공조달 참여확대, 지역 관광활성화 및 컨설팅, 지역시장 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도 필요하다. 무역 및 교역 관련 비대면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 고용 확대, 비대면사업 관련 인프라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단기정책 가운데, 기존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타이제이션 관련 연구개발(R&D) 및 지역산업 인프라성 사업들에 대한 평가 기간을 단축, 신속히 수행하고 예산 집행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타이제이션 관련 연구개발 예산 조기 집행 산업 범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산업 및 지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을 모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 고용충격 방지와 기업 경영부담 완화, 청년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 중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 시),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전직 교육 제공, 퇴직인력을 기술사업화·자문 등에 활용), 실직자 지원(미취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4대보험 납부유예 등(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서비타이제이션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 고용플랫폼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지역의 주요 업종별 서비타이제이션 관련 인력 및 외국인 근로 의존 실태에 대한 현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포스트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 산업 및 고용 빅딜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수요 및 공급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지역산업의 역량만을 고려하는 메뉴판식의 산업타깃팅에서 벗어나 서비타이제이션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간 연결성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 타깃팅 방식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GSC 또는 GVC)의 재편과 서비타이제이션의 필요성은 국내 공급망의 효율적 재편을 필요로 한다. 지역 간 산업 간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적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산업부흥 뉴딜정책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타이제이션으로 초광역 지역 내 기업거러구조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성장경로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서비타이제이션의 산업재편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통한 지역경제의 회복 프로그램 및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과도 연계하고 그린 뉴딜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를 비롯한 지역기업의 품목전환(구조고도화)과 산업현대화(스마트팩토리 등) 등 산업전환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비타이제이션을 고려한 산업단지 내 사업전환을 위한 용도 변경 및 전자 유통업(쿠팡 등)의 산업단지 허용 등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주력 제조업의 위기, 지역 내 청년 실업의 급증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의 유연하고 저렴한 입지공간의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중대한 변화인 기업이 사람을 찾아가는 형태(Jobs follow people)를 고려하여 도시중심의 산업입지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산업단지의 공장 외 타 용도로의 활용을 어렵게 하였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간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도시의 산단 내 휴폐업공장 등을 리모델링하여 산단별 유망 분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지역의 산업역량을 강화할 산업혁신역량과 서비타이제이션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로 ‘신제조혁신르네상스(지역 산업혁신역량 강화)’ 전략이다. 산업재편의 방향인 서비타이제이션과 탄소중립 사회를 고려한 지역산업의 산업다각화 및 산업전환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소사회와 서비타이제이션을 위한 신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연구기반 시설조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업종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자발적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전용자금 지원(설비자금, 우대보증 등), 지역포괄보조금 우대지원도 필요하다. 서비타이제이션을 위한 사업다각화 컨설팅 및 기술지

원, 사업다각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판로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즈니스 분야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즈니스,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바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연계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역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 산업재편 방향이 될 서비타이제이션과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의 산업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현대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창업자 또는 기업가는 1955년 베이비부머 세대이다.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애플(하드웨어)의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의 게이츠, 구글(서비스)의 슈미트와 같은 기업가정신을 함유한 기업가를 배출하면서 글로벌 산업을 이끌고 있다(정지훈, 2020). 우리나라 지역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이끌 이러한 기업가를 육성할 산업인력 교육제도도 긴요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위축되는 현실에서 시장 주체 간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 기대를 가능케 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여타 업종에 확산될 지역빅딜을 신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실 디지털화 또는 서비타이제이션은 자동화에도 관련이 높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고용이 다수 창출되는 국내 제조업 부문의 서비타이제이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관련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성공적인 사업의 확대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주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요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차별화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빅딜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비타이제이션의 효과적 대응 빅딜로 포스트코로나 주요 산업의 효과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산업재편이 가속화될 서비타이제이션에 대응한 지역의 빅딜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산업(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모두 해결할 줄탁동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고용노동부 (2021), 「2021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2021. 8.)
- 김광순 (2017),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제조서비스 융합 Business Model 분류”, 세미나 발표자료, 20170522.
- 심혜정 (2020),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과 해외 진출 사례”, 「Trade Brief 2020」, No. 6,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유현준 (2021), 「공간의 미래」, 을유문화사.
- 이근 (2014), 「경제추격론의 재창조」, 오래
- 이동희·고대영·김상훈 (2018),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의 효과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8-905, 산업연구원.
- 이두희·곽대중·홍진기·김동수(2010), 「주요 녹색산업의 지역별 발전전략 : 태양광, 연료전지, LED, 그린카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이두희·김동수·이석기·김수정·김송년(2020), 「북한의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 지역산업발전 전략」, 연구보고서 2020-27, 산업연구원.
- 이두희·김송년·유이선·김지수(2019), 「지역산업위기 유형분석과 위기대응방안 및 산업전환전략」, 연구보고서 2019-921, 산업연구원.
- 이두희·심영섭·이영주·김선배(2011), 「기업혁신시스템 CIS 분석을 통한 녹색산업 발전 전략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이두희·이승엽(2015),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산업연구원.
- 이두희·정현민·정윤선·김수동·고경훈(2018), 「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연구보고서 2018-886, 산업연구원.
- 이두희·허문구·김윤수·서정현(2017), 「지역별 산업역량분석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 산업경제통계권(ISA)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7-864, 산업연구원.
- 이두희 외(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도운영 정책연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 정준호(2017),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 및 리쇼어링 현상”, 「월간 노동리뷰」, 2017년 6월호, pp.18-28.
- _____(2016), “EU의 스마트 전문화 및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지역산업정책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782-798.
- 정지훈 (2020), 「거의 모든 IT의 역사」, 메디치미디어.
- 주무현·이상호·신서하·오윤석 외(2018),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토플러 (1981), 「제3물결」, 학원사.
- 통계청 (2021),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 동향」, 통계청
-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통계청(KOSIS), 지역계정(<http://kosis.kr/index/index.jsp>).
- 한국고용정보원 (2021), 「고용동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21. 7.)
- 한국고용정보원 (2021),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2021. 5.)
- 한국은행 (2019), 「조사통계월보」 2019. 8.
- 한국지역정책학회(2017), 「저성장시대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현대경제연구원(2018),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경제주평」, 통권 879호.
- _____ (2015),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진행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pp.15-28(625).
- _____ (2014),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현황과 시사점」.
- 홍사흠·안홍기·하수정·남기찬·김은란 (2016),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국외 문헌

- Acs, Z. J. (2002), *Innova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Northampton, MA : Edward Elgar.
- Acs, Z. J., L. Anslein, and A. Varga (2002), "Patents and Innovation Counts as Measures of Regional Production of New Knowledge", *Policy Research* 31: pp. 1069-1085.
- Acs, Z. J., D. Audretsch, and M. Feldman (1994), "R&D Spillovers and Recipient Firm Siz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0(2): 336-40.
- Anderson, R., J. M. Quigley, and M. Wilhelmsson. (2005). "Agglomeration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reativity", *Papers in Regional Science* 84(3): 446-464.
- BCG Report (2020), *A Manufacturing Strategy Built for Trade Instability*, 2020. 2. 14.
- Foray, D.(2015), *Smart Specialisation*, Routledge.
- _____ (2011), "Smart Specialization : the concept", *Applied Policy Seminar*, 4th session of the UNECE team o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Policies, Palais des Nations, 12 May 2011.
- Griliches, Z.(1984), *R&D, Patents and Productivi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9), "Issues i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R&D to Productivity Growth",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pp.92-116.
- Grillitsch, M. and B. Asheim(2018), "Place-based innovation policy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regions", *European Planning Studies* 26, p.8.
- MacKinnon, D.(2012), "Beyond strategic coupling : reassessing the firm- region nexu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pp.227-245.
- Markusen, A. and V. Carlson(1989), "Deindustrialization in the American Midwest : Causes and responses", In *Deindustrialization in the U.S. : Lessons for Japan*(eds.) L. Rodwin and H. Sazanami, Boston : Unwin Hyman.

Martin, R., P. Sunley, B. Gardiner, E. Evenhuis and P. Tyler(2018), "The city dimension of the productivity growth puzzle : the relative role of structural change and within-sector slowdow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 18, p.539-570.

Martin, R. and P. Sunley(2017),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Rovert (eds). Huggins and Piers Thompson(2017), *Handbook of Regions and Competitiveness : Contemporary Theories and Perspective on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pp. 287-307.

_____ (2015), "Towards a Developmental Turn in 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 *Regional Studies*, Vol. 49, issue 5, pp.712-732.

Pisano, G.P. and W.C. Shih(2012), *Producing Prosperity : Why America Needs a Manufacturing Renaissance*,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_____ (2009), "Restoring American Competitiveness", *Harvard Business Review* 87 (7-8), pp.1-13.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

3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과 고용 : 일본의 경험과 교훈

우종원 | 일본 사이타마대학 교수

I 지역에 대한 기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본의 경우 총리가 의장을 맡아 국가성장전략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투자회의”는 2020년 7월, ‘포스트코로나(Post-Corona) 사회의 기본 이념’의 첫 번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한 지역창생의 추진”을 설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새로운 업무방식, 특히 원격근무를 정착시켜 지방창생을 꾀하는 한편, DX를 추진함으로써 ‘분산형 거주’를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새로운 업무방식과 관련해서는 첫째, 지방을 ‘생활의 장’으로 설정하고, 둘째, 프리랜서의 건전한 확대와 적절한 보호를 추진하며, 셋째, 스타트업·NPO·청년·에센셜워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런 생각이 실현된다면 지역에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

지역에 기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원격근무의 급격한 보급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일본에서는 그동안 원격근무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를 급속하게 확대시켰다. 기업 비율은 47.5%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⁸⁾ 본사 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도쿄도(都)는 보급율이 더 높아, 2021년 5월 현재,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의 원격근무 실시율은 64.8%로, 전월비 8.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종사자를 단위로 한 비율은 이보다 낮아, 주 3일 이상 원격근무를 실시한 종사자 비율은 49.9%이다(이상, 도쿄도 조사).

지역에 대해 가지는 기대의 또 하나의 근거는 지방 이주 가능성이다. 내각부가 2020년 5~6월에 실시한 개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대 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거주자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8) 「令和2年通信利用動向調査の結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15.0%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22.1%)와 30대(20.0%)에서 높았고 원격근무 경험유무별로는 경험자(24.6%)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위의 두 가지 근거를 이상적으로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원격근무가 보편화하고, 전문기술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환경이 좋은 지방에서 사는 삶을 선호할 수 있고, 이는 지역이 추진하는 DX와 맞물려 지역이 활성화하는 더없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그림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젊은 층의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이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실현될 수 있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지역 자체가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자기가 자란 고향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지방에 이주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스스로 DX의 실현을 포함해 젊은 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결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사례는 수도권 중심지역의 하나로 도쿄도의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県;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및 현청 소재지인 사이타마 시(市)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이타마현의 실태와 과제

V-RESAS(<https://v-resas.go.jp>)라는 게 있다. 코로나19가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 및 지역활성화시책의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시화해 누구든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사이트로 내각부가 운용한다. 데이터 소스는 다양하다. 고용데이터의 경우, 직업안정소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라, 복수의 웹 구인정보사이트에서 수집한 구인정보 수를 가시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고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중순과 2년 전인 2019년 8월 중순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구인정보 수가 줄어들었지만, 변방지역인 홋카이도 및 혼슈 북부지방 그리고 큐슈 남부지방은 오히려 그 수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을 도시보다는 농촌, 3대 도시권보다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음식·숙박업이지만, 큐슈 남부지방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숙박자 수는 2년 전과 비교할 때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이타마현의 실태와 과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사이타마현은 인구가 약 730만 명으로 경제규모가 일본에서 다섯 번째 정도의 현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현의 성격을 반영해 현민의 21%가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의료·복지에도 13% 정도가 취업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제조업의 부품공급기지 역할도 하고 있어 제조업 취업인구가 현민 전체의 18%를 차지한다. 취업자는 전체적으로 393만 명 정도이다.

사이타마현도 코로나19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했을 때, 음식점 정보 열람 수는 평균 70% 감소했다. 숙박자 수도 20% 줄었으며, 구인정보 수는 13% 감소했다.⁹⁾ 공식 통계로 본 취업자 수도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본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반영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유효구인배율(구인 수를 구직 수로 나눈 값)은 그다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6월 현재 사이타마의 배율은 0.98배로, 일자리를 가리지만 않는다면 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구직자가 취직이 가능한 수준이다. 실업률도 2021년 2월 기준 3.1%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유효구인배율이 1.6배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및 생산의 감소가 현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규모 유지와 좋은 일자리 확보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타마현 정부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기에 “사이타마현의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사업 지속을 위한 긴급 지원”을 꼽고 이를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과 급부금 지급, 그리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취해진 조치와 대동소이하다. 유의할 것은 중장기대책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사회구조가 ①접촉회피, ②분산화, ③서플라이체인인 강화, ④네트워크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 각각에 대해 ①디지털화·온라인화 가속, ②원격근무에 의거한 지방거주 및 본사 기능의 지방 이전, ③특정국가 의존 리스크의 회피, ④지역이나 기업규모 등을 뛰어넘은 협력으로 대처한다고 천명했다. 방침 자체는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냉정하게 바라보자면, 장미빛 전망을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나열한 감도 있어, 과연 이들 대책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어쨌든 위드코로나의 첫걸음으로 사이타마현 정부는 2020년 5월, 중앙부처의 지방기관 및 현내 관계 기관과 함께 ‘강한 경제 구축을 위한 사이타마현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당면한 과제로 “노동력의 유동성”, “판로 확대”, “서플라이체인인 유지·확보”,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ation Plan)” 및 “디지털

9) <https://v-resas.go.jp>

화 추진” 등을 설정했다. 이 중 디지털화 추진에 대해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과제로 ①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의 디지털화 추진, ②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사업자의 디지털화 추진에 필요한 인재 육성·확보·보완, ③행정의 디지털화 추진을 설정했다. 나아가 상기 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업무의 자동화, 생력화 및 인력절감 지원, 원격업무(의료/제조업용,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용) 지원시스템의 도입, 원격근무에 필요한 노무관리체제의 정비와 공동작업 스페이스의 정비를 설정했다. 그리고 상기 ②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학교교육의 충실과 중고연령층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IT인재육성 세미나 및 WEB연수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및 원격 지원, 인재 매칭 사이트 구축을 꼽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스타트지점에서 필요한 시책을 상당한 정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그 실현 여부이다. 예를 들어 당면한 과제의 첫 번째로 꼽은 “노동력의 유동성”에 관해 살펴보자. 상기 ‘전략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노동자를 ‘출향(出向; 원래 기업에 적을 둔 상태로 일정 기간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것)’시킨다는 그림을 그렸다. “인재 세어 매칭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양쪽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한편, 산업고용안정센터 소속의 인재컨설팅트가 매칭을 담당하도록 했다. 2020년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실적을 보면, 노동자를 내보내고 싶은 기업 26개사, 받아들이고 싶은 기업 165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매칭에 성공한 케이스는 제로였다.¹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위로부터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탓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싶은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이들 기업이 코로나19 아래서도 형편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탓에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기업은 어쨌든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에 신청한다고 봐야 한다. 반면, 노동자를 내보내고 싶은 기업 가운데 진짜로 경영이 힘든 기업은 출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해고가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고용조정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런 와중에 출향을 검토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정규직 사원을 확보해 두고자 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고용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탓에, 한 번 출향하면 이것이 이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따라서 노동자를 출향시키고 싶은 기업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돌아온다는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한 매칭까지 이르기가 힘든 것이다. 물론 내보내는 기업과 받아들이는 기업의 업종이 다른 탓에, 출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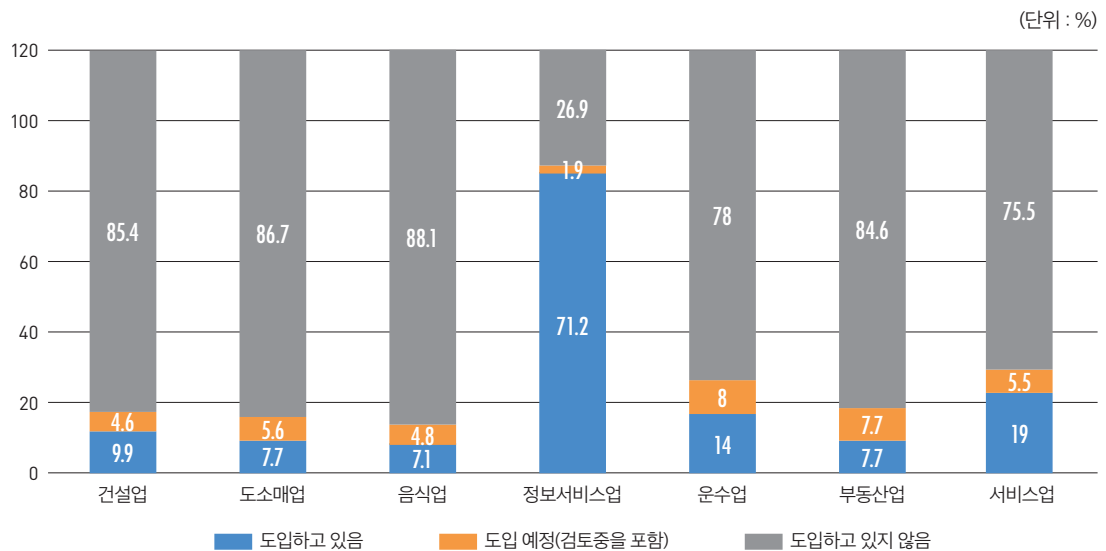
10) 『朝日新聞』 2020년 11월 18일자 <https://www.asahi.com/articles/ASNCK6W5BNC9UTNB017.html>

대한 노동자측의 의욕이 높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화 추진이라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디지털화 추진이라는 깃발을 흔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 기업의 경영관리능력, 지역에서의 인재 조달·육성·활용의 여지, 지역의 지원역량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디지털화와 관련해 중요한 지표인 원격근무 보급률을 보자. 사이타마현에 의하면, 2020년 6월 현재,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14.6%에 불과하다. 도입 예정 기업 5.3%를 합해도 채 20%가 되지 않는다.¹¹⁾ 앞에서는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원격근무가 그다지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업종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71.2%가 원격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데 반해, 도·소매업과 음식업은 그 비율이 7%대에 불과하다. 운수업은 14%에 그치고 있고 서비스업도 19%로 그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이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큰 지방에서 DX를 추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사이타마현의 원격근무 도입 상황 : 업종별 상세(단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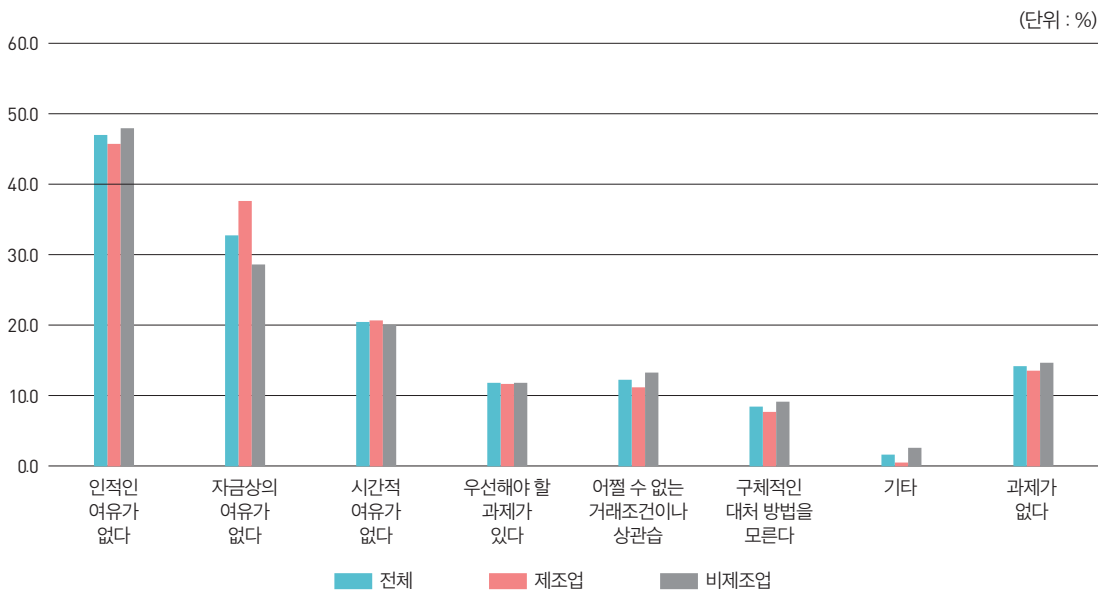
출처 : 埼玉県「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7~9月期)」

11) 「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7~9月期)」

코로나19 속에서도 왜 원격근무 도입이 지지부진할까. 이에 대해 전체 기업의 과반이 넘는 55%가 “원격근무에 맞는 업무가 한정적”인 것이 원격근무 도입을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수공이 가는 점이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체 기업의 24%가 원격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그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DX와 생산성 향상을 연결시킬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기업의 여력은 소진되고 있다. 사이타마현의 조사에 의하면, 현내 기업의 설비투자능력은 감소하고 있어, 2019년도 현재, 전체 기업의 6할 가까이가 설비투자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¹²⁾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신규투자가 아니라 기존 설비의 보수/갱신이 대부분이다. 투자만이 아니다. 일상적인 기업운영에서도 여유를 상실하고 있다. <그림 2>를 보자. 이는 현내 기업들이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함에 있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적인 여유, 자금상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근래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전체적으로도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는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의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 2 노동생산성 향상을 꾀함에 있어서의 과제



출처 : 埼玉県「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1~3月期)」

12) 「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1~3月期)」

사이타마현은 고유한 고용문제도 갖고 있다. 현에 의하면, 노동력수요의 증감은 산업별·직업별로 편차가 심하다.¹³⁾ 2018년 현재, 창출된 노동력수요 전체의 26.2%를 의료·복지가, 15.1%를 서비스업이 차지한다. 직업별로는 전문적·기술적 직업이 전체의 20.9%, 서비스 직업이 17.8%를 차지한다. 의료·복지를 비롯한 서비스업에서 주로 노동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전반, 특히 대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낮아,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 결과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업종 간, 직종 간 격차가 확대된다. 한편 여성의 낮은 취업률도 문제이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여성의 M자 커브는 전국에 비해서도 깊게 파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쿄의 '베드타운' 위치에 있는 사이타마현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2017년 현재 사이타마현의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내 기업의 DX를 촉진하고, 현을 보다 매력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전략회의"의 시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다 현실에 다가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업만이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회의'에서 나열하고 있는 시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전통적 관점과 정책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하지만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지원하는 관점과 정책수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격근무의 경우도 도입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포함해 원격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격근무에 필요한 통신환경과 통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원격근무의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장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흔히 DX지원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에 관련 앱이나 시스템을 깔아 주거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략회의'의 시책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중소기업의 실제 니즈를 반영하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획일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역 내 산업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연계해 "IoT 강사단/ AI강사단" 등을 복수로 편성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원격/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이를 보다 높은 차원의 경영컨설팅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지원사업과 지원메뉴를 책정한 후 지원에 해당하는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을 신청한 기업이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페이퍼 워크에 능통한 기업에게 지원이 쏠려, 정작 해당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는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성장잠재력

13) 「埼玉県の産業と雇用のすがた」

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어 이를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역내 기업 맵(MAP)’을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기업 맵이란 역내 기업의 경제적 지도, 즉 기업이 경영자의 자질을 포함해 어떤 자원을 갖고 있고 그 전망은 어떤지를 파악해 가시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타마현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현내 주요기업에 해당하는 “지역미래견인기업” 레벨까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잠재력이나 경쟁력 등에 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산학관금(産學官金; 지역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을 순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빠른 시일 안에 현내 기업 맵을 작성하면, 이 문제가 상당 정도 해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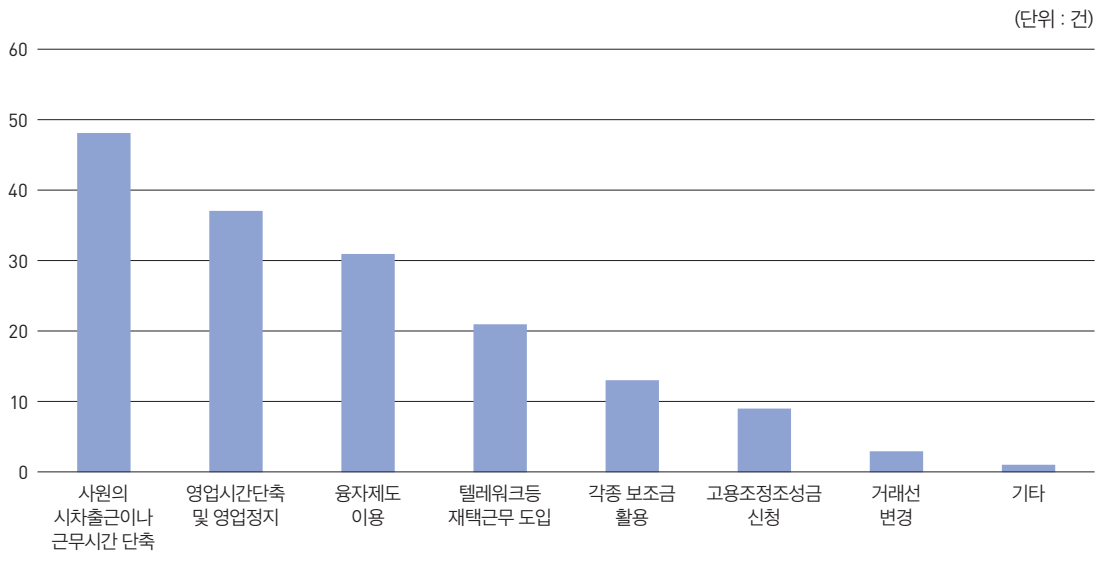
III 사이타마시의 실태와 과제

사이타마시는 도쿄에서 20~40km 권역에 있으며, 인구는 132만 명이다. 시내 주요 역 주변에 상업, 비즈니스기능과 행정 및 문화기능이 집적되어 있으며, 2000년에 개통된 ‘사이타마 신도심’ 지역에는 18개 국가기관과 ‘사이타마슈퍼아레나’ 등 중핵시설이 정비되어 있다. 현재 도쿄의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중추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이타마시도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특히 대인서비스업(숙박업, 음식점, 오락업)과 여객운송업의 타격이 매우 크고, 도·소매업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업종은 자금사정도 곤란한데 특히 음식점의 형편이 어렵다. 한편 고용사정은 앞서 본 현 전체와 비슷한데, 특히 시간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취업자의 감소가 현저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이들을 주된 고용조정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노동자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다수의 월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지자 시는 우선적으로 “결제수단의 캐쉬리스화”, “원격근무의 추진”, “부업·겸업의 추진”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사이타마상공회의소가 2020년 4월에 회원 사업체 150개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공업자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책은 “근무·영업시간 단축”, “용자제도 이용”의 순으로 많았고, 원격근무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10%대에 머물렀다<그림 3>. 또한 앞으로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도 각종 지원자금의 이용을 다수가 꼽은 반면, 원격근무 등의 도입을 택한 사업체 비율은 10%에 채 미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 원격근무가 신속하게 보급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도쿄 근방의 도시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보급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 사이타마시 상공업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출처: さいたま商工会議所「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関する緊急アンケート」

그렇다면 사이타마시는 포스트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 사이타마시는 마침 ‘종합진흥계획’과 ‘산업진흥비전’을 책정하고 있었다(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상위계획인 종합진흥계획에서는 시의 미래 도시상(像)으로 ‘고급 생활도시’와 ‘동일본의 중추도시’ 실현을 내걸었다. 이를 산업경제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산업진흥비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규모의 확대에 의거한 질 높은 시민생활의 실현”을 사이타마시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정책의 주축’이라고 명명한 위에, 시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을 ‘중점 전략’,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전술’로 분류해 정리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책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 속에 융합시켰다. 이를 요약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사이타마시 산업진흥비전의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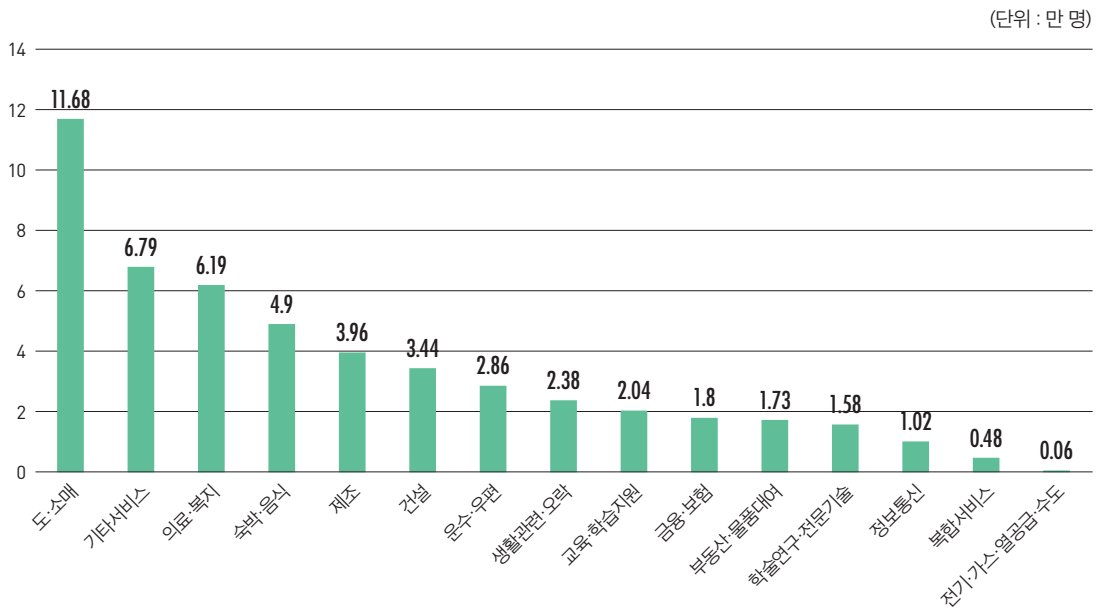
정책의 주축	중점 전략	전술
1. 활력 있는 지역산업을 육성할 시책의 총실	① 경영혁신과 경영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성장촉진 지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업 활성화
2.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에 의한 활력있는 지역산업의 창출	② 강한 산업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입지 촉진 산학연계 등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 지원 국내외 사업전개 지원 강화 창업·부업·원격근무 지원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
3. 교류 인구의 확대와 상업 및 관광 활성화에 의한 역외 자금의 획득	③ 유통거점 기능의 집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인구의 확대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진흥 MICE의 보다 강력한 추진
4. 산업인재 육성과 취업기회의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과 다문화공생 추진에 의한 다양한 인재의 활약 촉진	④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인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인재 육성 취업지원 총실 국제교류의 기회 증대 및 다문화공생 의식의 양성

출처: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p78.

표에서 보듯 “창업·부업·원격근무 지원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한 시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내용이 담겨진 것을 알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를 전망함에 있어 사이타마시가 중시하는 것은 오히려 인구 문제이다. 사이타마시의 경우도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25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제규모를 유지·확대하고 질 높은 시민생활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및 외국인 등 잠재적 노동력의 활용과 시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 여부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과제 설정이라 하겠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시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부터 살펴보자.

사이타마시의 민영기업은 약 2만 5천개, 민영사업체는 약 4만 1천개이다(파견사원만 종사하는 사업장은 제외). 종업원 수는 약 51만 명으로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의 98.5%를 차지한다. 특히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체 비율이 높아 전체 종사자 약 90%가 여기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서비스업, 의료·복지의 순이다<그림 4>. 현정소재지라는 도시의 성격을 반영해, 3차 산업의 소규모사업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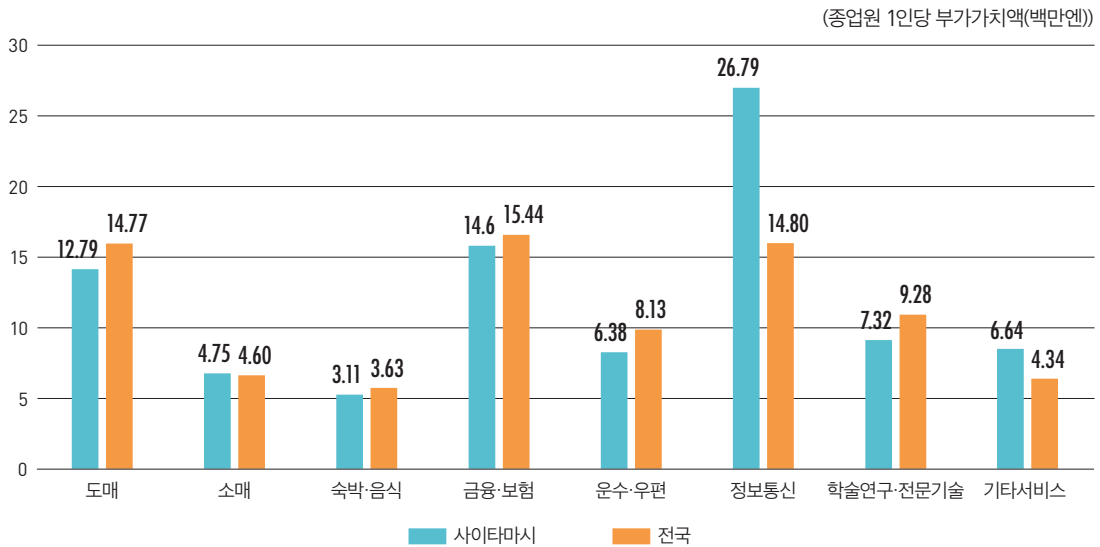
그림 4 사이타마시의 산업별 종업원 수



출처 : 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 p15. 원자료는 RESASデータ(2016).

문제는 부가가치이다. <그림 5>를 보자. 이는 사이타마시와 전국의 노동생산성을 상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시와 전국을 비교하면, 소매업에서는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도매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산업별 부가가치액의 추이에 주목하면, 세계경제위기를 겪은 다음인 2011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 보건위생·사회사업등의 분야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은 부진하다.

그림 5 사이타마시와 전국의 노동생산성(상업 및 서비스업 등)



출처: 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 p19. 원자료는 環境省・日本政策投資銀行「地域経済循環分析ツール(2015年版)」

한편, 특화계수(각 산업의 지역 집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주목하면 금융·보험업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제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소비도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만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지역간 수지(시외에 대한 판매액에서 시외로부터의 구매액을 뺀 값. 이 값이 플러스인 산업은 시외로부터 수입을 얻는 산업이며, 마이너스인 산업은 시내 수요가 시외로 빠져나가는 산업임)를 살펴보면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로 도·소매업이 시외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숙박·음식업과 오락업 및 대인서비스업에서는 시내 수요가 시외로 빠져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사이타마시가 소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사이타마지역 전체로는 제조업이 나름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타마시의 경우는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 중 다수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다만, 의약품 및 광학기기, 반도체제조장치 등은 경쟁력이 있어 흑자 달성).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실태에 비추다면 향후 인구감소 하에서 시의 경제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가가치액 및 고용흡수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기반 산업인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둘째로 부가가치가 높고 역외로부터 수입을 벌어들이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과 광학기기 등 시내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산업지원기관인 '사이타마시 산업장조재단'은 'BIZ Saitama'라는 이름의 온라인 기술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사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내외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니즈'를 수집해 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해결수단을 가지고 있음직한 시내 기업(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솔루션 제안'을 받아 이를 해당 대기업에 전달해, 대기업측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양자 간의 '개별면담'으로 진전시키는 것이다.¹⁴⁾ 실제 대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기술니즈가 시내 기업에 전달되고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다. 한편 자동차부품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업장조재단은 '스마트제조지원사업'을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종래의 개선활동에 더해 IT, IoT, AI, 로봇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여기까지이다. 즉 제조업에서는 이처럼 부분적이거나 타개책을 찾고 있지만,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해서는 아직 유효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포스트코로나로의 진전은 어렵다 하겠다.

시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이타마시가 중시하는 것은 여성과 고령자 및 외국인 등 잠재적 노동력의 충분한 활용이다. 근래의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사이타마시의 취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약간 증가했지만, 남성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즉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에 기여한 것은 오롯이 여성 취업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사이타마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1.8%로 전국평균 43.1%보다 상당히 낮다. 또한 이른바 'M자곡선'의 골짜기도 깊은 편이다. 이는 포스트코로나에 실효성 있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수도권에 입지한 탓에 사이타마시에는 외국인이 상당수 거주한다. 2019년에 실시한 '사이타마시 국제화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일자리 소개"를 꼽은 외국인이 38%에 이르렀다. 이는 외국인의 취업 지향이 높은 것과 함께 구체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여성과 고령자 및 외국인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도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래서는 개인적으로도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그 힘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여성과 고령자 및 외국인에게 적절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14) <https://www.sozo-saitama.or.jp/biz-saitama>

IV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위에서 살펴본 사이타마현 및 사이타마시의 케이스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한 지역창생의 추진”이라는 깃발을 내걸더라도, 또한 적지 않은 식자들이 포스트코로나에의 장미빛 전망을 그리더라도, 정작 지역의 시점에서 보면 그 실현은 용이하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냉정하게 보면 슬로건과 실태와의 괴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사실 지역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에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정보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질 좋은 일감을 대량으로 획득하면 국내의 중간층이 이에 폭넓게 취업할 수 있다는 전망을 그린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체력이 튼튼하지 않다. 버블이 꺼진 이후 일본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기치 아래 투자 억제, ICT의 외주활용, 인건비 삭감 등에 매달려 왔다. 하지만 이런 기업행동이 역설적으로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체력과 여유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노동의 질에도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중(中)기능 노동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高)기능 노동자는 그만큼 늘지 않아, 디지털 시대를 뒷받침할 중간층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일본의 고용시스템 또한 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정규직은 업무량 가중과 장시간 노동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여유를 상실하는 한편, 비정규직은 육아 등 케어(Care)의 중압 속에서 커리어의 전망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집약되어 드러난 것이 위에서 본 지역의 모습이다. 중소기업은 일부 강소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있고, DX를 뒷받침할 인재를 확보·육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기를 기대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사이타마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지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역에 대한 기대’에 막연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데는 조심스러워진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원격근무가 가져올 혜택이 아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생산성을 향상하는 일이다.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끈기있게 노력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참고문헌

■ 국내(일본) 문헌

「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7~9月期)」

「埼玉県四半期経営動向調査(令和2年1~3月期)」

「埼玉県の産業と雇用のすがた」

さいたま商工会議所「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影響に関する緊急アンケート」

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 p78.

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 p15. 원자료 RESASデータ(2016).

さいたま市「さいたま市産業振興ビジョン」2021年, p19. 원자료 環境省・日本政策投資銀行「地域経済循環分析ツール(2015年版)」

■ 인터넷 문헌

<https://v-resas.go.jp>

『朝日新聞』2020년 11월 18일자, <https://www.asahi.com/articles/ASNCK6W5BNC9UTNB017.html>

<https://www.sozo-saitama.or.jp/biz-saitama>

지역통신

-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 지역 심층 리포트

『지역통신』은 전국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제주권)을 대상으로 지역별 경제 및 일자리 현황을 청취하여 시의성 있는 지역-산업 일자리 동향 변화 및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심층분석이 필요한 지역 및 산업을 선정하여 지역 심층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다.

▶ 본 『지역통신』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 고용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지역통신의 흐름과 변화

구분	2021년 상반기(1~6월)	2021년 3/4분기(7~8월)
수도권	<p>서울</p> <p>정책 안전·건설 분야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투입 ↑ 안전·기반시설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 (1조 6,228억 원)</p> <p>인천</p> <p>정책 친환경 미래차 특화단지 구축 ↑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 평가센터 구축</p> <p>서비스 항공산업 구조조정 예상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합병</p> <p>경기</p> <p>정책 서해안 물류 벨트 신규일자리 사업 발굴 강화 ↑ 물류센터(쿠팡, 마켓컬리 등) 지속적 확장</p>	<p>서울</p> <p>제조 섬유제조패션업 타격, 안전 관련 섬유패션업 붐업 ↑ 환경 관련 소재, 패션제품 개발,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필요</p> <p>정책 '서울핀테크랩' 입주 기업 모집(8.2~8.30.) ↑ 금융산업생태계 조성 고도화 계획</p> <p>인천</p> <p>정책 인천공항에 해외 복합 항공정비업체 유치 가능 ↑ 정비물량확보지원, 비용절감(상용화인증), R&D 상용화 강화, 항공정비인력양성 등</p> <p>경기</p> <p>정책 경기 중부 '서비스업 분야' 신규 일자리사업 검토 ↑ 기초분석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실시</p>
강원권	<p>강원</p> <p>정책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4월 ↑ 1,500개 청년 일자리 창출 (2025년까지 300개 로컬벤처기업 육성 지원)</p>	<p>강원</p> <p>제조 수도권 등 기업 이전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 기업 이전 및 공장신설 등 투자유치로 1,479명 신규고용 창출(7월)</p> <p>서비스 ㈜플라이강원 경영악화로 무급휴직 돌입 전망 ↓ 고용지원금 제도 종료 이후 무급휴직 전환</p>
충청권	<p>대전</p> <p>서비스 신세계백 채용박람회 개최 : 6월 ↑ 3,000명 규모 온라인 박람회</p> <p>서비스 대전 메가허브물류센터 신축 ↑ 택배 분류, 상하차, 관리·운영 인력 채용 예정 (1,200명 추산)</p> <p>세종</p> <p>제조 중소기업 등 이전기업 입주 완료 ↑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증가</p> <p>정책 산업단지 조성 지속 ↑ 전동일반산업단지(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세종복합일반산업단지(전기장비, 금속가공, 기계 장비 제조업 등)</p> <p>충북</p> <p>정책 대규모 물류단지 유치 ↑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진천로지스틱스</p> <p>충남</p> <p>제조 자동차부품기업 휴업 ↓ 반도체 품귀 현상(동희오토, 현대차 아산공장 휴업)</p> <p>제조 현대차 아산공장 한 달간 휴업(7월) ↓ 전기차 생산을 위한 라인 개조 목적</p>	<p>대전</p> <p>정책 유성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2028년까지 센서 소자 지원센터, 신뢰성 지원센터, 스마트랩 조성 계획(기업 50여 개 육성, 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p> <p>정책 첨단기술산업 실태조사(460개 사) 실시 ↓ 노동시장 위축(채용계획 없음 34%, 채용수요가 많은 분야 연구개발 38.6%)</p> <p>세종</p> <p>정책 세종시 스타기업 10개 사 지정 ↑ 중장기적 기술혁신 지원, 수출 확대, 판로 컨설팅 등 기업성장 프로그램 제공 예정 (평균 고용 57.4명, 전년대비 고용 증가율 7.7%)</p> <p>충북</p> <p>제조 SK하이닉스 시스템IC 중국 우수 공장 이설 ↓ 청주 M8공장 장비를 2022년까지 이설 (2020년 매출 7,029억 원, 고용 1,200명 규모)</p> <p>충남</p> <p>정책 외투 5개 기업 외자 유치 협약 ↑ 5년간 1억 350만 달러 투자 협약, 1조 9,161억 원의 매출 및 242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p> <p>정책 천안 풍세2산단 충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 통과 ↑ 풍세산단 및 제6산단 연계 1,370여 명 창출 기대</p>

구분	2021년 상반기(1~6월)	2021년 3/4분기(7~8월)
호남권	<p>광주</p> <p>제조 GGM 공장 설립 : 4월 ↑ 연 10만 대 생산 규모 완성차공장 준공</p> <p>전북</p> <p>제조 자동차부품산업 코로나19로 침체 ↓ 수요부진 장기화 생산라인 가동 일시중단</p> <p>제조 ㈜가성중공업 경영악화 구조조정 ↓ 물량중단에 따른 폐업 위기 발생,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처리(31명)</p> <p>전남</p> <p>제조 철강업종 코로나19로 인한 침체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p> <p>정책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지역 내 고용 및 산업 위기극복 기대</p>	<p>광주</p> <p>제조 GGM 9.15. 경형 SUV 신차 양산 임박 ↑ 제4차 일반직 및 기술(생산)직 채용 공고 실시 중(7.16.), 결점 보완 및 문제점 개선 등 품질 생산성 조기 안정화 방침</p> <p>전북</p> <p>정책 상용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발굴 ↑ 전북형 30대 핵심부품 선정 집중 지원, 친환경 미래차 관련 인력양성-사업전환 컨설팅 등</p> <p>정책 신재생 에너지(풍력)관련 인력양성 지원 필요 ↑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관련한 대학 학과 개설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출 필요</p> <p>전남</p> <p>서비스 관광레저산업 인력 수요 증가 ↑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골프 인구 급격히 증가, 골프 경기 진행인력 134명 인력수요 확인</p> <p>정책 전남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 ↑ 조선업 생산기술 전문 인력 1,100명 육성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주관)</p>
경상권	<p>부산</p> <p>제조 자동차부품산업 양극화 발생 ↓ (호황)현대차 벤더, (불황)쌍용차, GM, 르노삼성, (호황)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불황)내연차</p> <p>정책 부산일포유(APP) 개발 운영 ↑ 부처별 지원제도, 일자리 정책 정보 제공</p> <p>대구</p> <p>제조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로 매출하락 우려 ↓ 자동차부품 기업 68% 반도체 부족 영향</p> <p>서비스 자영업자 수 감소세 지속 ↓ 코로나19 피해집중업종(대면 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등)) 회복 어려움</p> <p>울산</p> <p>제조 조선업 수주물량 증가로 인력수급 계획 준비 ↑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외국인 노동자 운영계획 수립 중</p> <p>경북</p> <p>정책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MOU 체결 ↑ ㈜태동테크 100억 원 투자, ㈜이엠이코리아 퍼스널 모빌리티 생산 등 김천시 MOU체결</p> <p>정책 미래일자리 자문위원회 출범 ↑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 발굴</p> <p>경남</p> <p>제조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청년층 근로자 대거 이탈 ↓ 향후 조선업 경기 회복에 인력난 야기 가능</p>	<p>부산</p> <p>정책 BGF 리테일 투자 유치(8월 MOU 체결) ↑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물류센터 건립 예정 (1,782억 원 투자 및 1,000명 신규 고용 기대)</p> <p>정책 관광인프라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대원플러스그룹 랜드마크 조성(1조 2,000억 원), 롯데월드 어드벤처 테마파크 개장(9월) 등</p> <p>대구</p> <p>제조 치과용 의료기와 고령인구 관련 의료기기 시장의 빠른 성장세 ↑ 티타늄 임플란트 분야 긍정적 (구강건강 인지도 증가와 구강 질환의 발병률 증가) ↑ 고령인구 증가로 혈압측정기, 생체리듬 모니터링 장비의 수요 증가</p> <p>제조 자동차산업 후방산업인 기계부품 업종의 어려움 ↓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 상승 등 수출 수익성 악화, 납기 악영향 등 모니터링 필요</p> <p>울산</p> <p>제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인력수급 계획 준비 및 외국인 노동자 수급 ↑ 조선업 수주물량 증가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 거제와 울산의 양대 중공업 업체에서 숙련인력 확보에 따른 경쟁 심화</p> <p>경북</p> <p>정책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MOU 체결 ↑ ㈜GS건설 5천억 원 투자(2,000명 일자리 기대) 등 포항시 MOU 체결</p> <p>경남</p> <p>제조 조선업 완만한 개선 전망 ↑ 글로벌 해상 물동량 증가, 카타르 관련 기체결 LNG선 예비 계약, 환경규제로 노후선 교체 수요 등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 증가세 지속</p>
제주권	<p>제주</p> <p>서비스 관광산업 업종별 양극화 발생 ↓ 코로나19로 관광트렌드 변화 (골프장 이용객 증가, 카지노 입장객 감소 등)</p> <p>서비스 대기업 아울렛, 리조트 등 제주 인재 채용 예정 ↑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박람회 개최(6월) 등</p>	<p>제주</p> <p>제조 전기차 보급증가로 주유소-정비업소 일자리 감소 ↓ 전기차 보급 5% 증가, 정비업소 59곳 폐업</p> <p>서비스 관광객 증가, 공영관광지, 숙박시설 매출 감소 ↓ 수용인원 제한으로 공영관광지 매출 감소</p>

■ 지역 심층 리포트

경기지역 물류산업 대내외 여건변화와 일자리창출 전략

최재문 | 경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 물류산업의 정책동향과 경기지역 물류벨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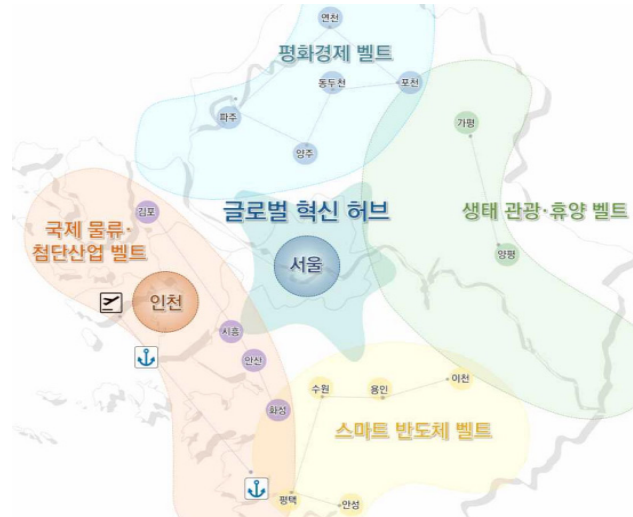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스마트·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2030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을 50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지금보다 32만 개 추가 확충하겠다는 목표(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를 제시하였다.¹⁵⁾ 이처럼 물류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구조는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맞춰 인력구조도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기지역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국토부) 공간구조 구상에서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연결되는 국제 물류 첨단산업 벨트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정부지원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마켓컬리 김포물류센터, 시흥시 쿠팡물류센터, 안산시 로지스밸리 물류센터, 화성시 코람코 복합물류센터 등 대기업 중심의 물류센터들이 대부분 완공되어, 물류산업 환경의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산업 변화와 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제공과 취업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15) 국토교통부(2021. 7. 1),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마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림 1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조



자료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12.29.)

☑ 물류산업의 변화와 전망

현재 물류산업은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인 ‘운수 및 창고업’과 맞닿아 있다. 현재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운수업’과 창고·하차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창고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 물류산업이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의 광범위한 업종을 연결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의 표준산업분류표만으로 물류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¹⁶⁾

실제로 물류산업은 타 산업(IoT, AI, 빅데이터)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물류 및 무역시스템 발전 속에서 유통 및 추적관리 등이 강조됨에 따라 스마트물류 시스템으로 사업장이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일자리가 쇠퇴-탄생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과거 단순 서버 중심의 물류 운영체제가 아닌 클라우드 운영체제가 중심이 되는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는 상품의 보관기능이 강조된 전통적 물류창고와 달리 온라인 주문에 맞춰 상품

16) 김태호 외(2020), 『운수 및 창고업 노동시장 진단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을 분류 및 포장하여 발송하는 서비스를 초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망 체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⁷⁾

이에 우리나라 2020년 총 택배 물량은 약 33억 7천만 개이며 2019년(27억 9천만 개)에 비해 20.9%의 성장세를 보인 점에서 5~6년 후 쯤 5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2~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한편 교통 및 물류산업의 경우 종사자 지위별, 직종별 특성뿐만 아니라 숙련된 종사자의 수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현재 부재하고 대기업군에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물류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는 시장변화에 다소 민감하지 않아 향후 물류업체 내에서도 대-중소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기술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인식의 변화와 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 확대 필요성

이처럼 노동시장 내에서는 스마트물류 산업의 발전과 배송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직자들에게는 물류업체가 단순 창고관리, 배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3D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¹⁹⁾하다. 또한 기업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경기지역 내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훈련 과정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순 지게차 교육과 ERP 교육과정 공급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고용부)'에서도 경기지역 내 물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 과정이 전무하므로, 향후 물류산업 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물류분야의 단순노무직으로 청년이 입직하는 데는 청년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스마트물류 분야로 진출하기에는 현재 청년의 숙련 수준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 물류산업 역시 AI, 빅데이터, 마케팅 등의 다양한 직무가 많으므로 구직자들의 인식개선²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물류기업 차원에서의 스마트물류 분야에 대한 명확한 직무분석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등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송재화(2021), “풀밀먼트 시스템이 가져다 준 물류산업의 변화”, 2021년 스마트물류 혁신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18) 손정우, “2020년 택배물량 33억 7천만 개 역대 최고치, 가격은 또...”, <물류신문>, 2021년 2월 22일자

19) 경기 인자위 일자리창출 운영협의회(2021.7.6) 발언 내용 :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전문가 의견 참고

20) 경기 인자위 일자리창출 운영협의회(2021.7.6) 발언 내용 : 물류분야 학계 전문가 의견 참고

지금껏 물류센터는 민간 영역으로 정책 대상에서 많은 부분이 배제되었으나 생활 물류가 일상적인 국민 생활 지원을 넘어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됨²¹⁾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사망사건, 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향후 물류산업 분야의 일자리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 초점에서도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물류벨트 지역 외에도 군포시, 고양시 등 대규모 물류센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기지역과 물류산업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모델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1) 서상범(2020),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동향과 정책”, 한국교통연구원 물류브리프, 2020년 2/4분기

■ 지역 심층 리포트

대구광역시 자동차 반도체 공급부족에 따른 일자리 이슈

최원옥 | 대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심화

자율주행, 전장부품 확대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IT 기기로 진화함에 따라 차량에 필요한 반도체 수와 종류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는 약 200개 정도이며, 전기차는 약 400~500개, 자율자동차에는 약 2,0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스마트 차량으로 진화하는 데에 있어 차량용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원활한 조달 여부는 자동차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²²⁾

표 1 차량용 반도체 종류 및 적용 분야

분야	주요 적용 부품	점유율
안전/ADAS	TPMS(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 에어백, 추돌·차선이탈 경보, 주차보조 등	20%
새시	제동장치, 조향장치, 트랙션 컨트롤, 서스펜션 등	17%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등	17%
차체	라이팅, 와이퍼, 선루프, 파워윈도 등	16%
파워트레인	트랜스미션, 엔진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등	14%
기타	전력반도체, 인버터, DC-DC 컨버터, BMS(배터리관리시스템) 등	16%

자료 :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차량용 반도체, 선택과 집중으로 기회 창출 필요), vol. 53, 2021. 2.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1),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6권 제3호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하여 국내 반도체 기업은 별도의 생산공정이 없는 실정으로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 중이며, 현재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생산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문제로 국내 완성차업체 공장 가동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이에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는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생산계획을 수립 중이며, 단기 휴업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공급부족이 지속되면, 비인기 차종의 생산이 중단되고 인기차종 및 신차 위주로 생산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업체는 수익성이 낮은 차량용보다는 가전, 모바일, 게임기 등의 IT 기기용 반도체를 선호하는 데 있으며 IT용 반도체 호황에 따른 생산라인에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 차량용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3개 회사(NXP 21%, 인피니온 19%, 르네사스 15%)²³⁾에 집중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인피니온과 NXP의 한파 영향, 르네사스는 극심한 가뭄으로 공급용수 부족 영향)로 인해 차량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셋째, 반도체 수급 대란 확산에 사재기 발생과 가격 폭등으로 자동차를 넘어 가전, 스마트폰, PC 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3) 산업연구원(2021), 최근 글로벌 기술개발 투자 및 전략,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17호

표 2 2021년 반도체 수급에 따른 주요 완성차업체 공장 가동중단 현황

구분	중단일자	세부 내용	생산 차종
현대	4/7~14	울산 1공장 휴업	아이오닉5, 코나
	4/10	울산 3공장 특근 취소	아반떼, 베뉴
	5/18	울산 3공장 휴업	
	5/6~7	울산 4공장 휴업	포터
	5/17~18	울산 5공장 일부 휴업	투싼, 넥쏘
	4/12~13	아산공장 휴업	쏘나타, 그랜저
	4/19~20	아산공장 추가 휴업	
	5/24~26	아산공장 휴업	
6/14~21	미국 앨라바마 공장 휴업	싼타페, 투싼	
기아	4/8~9	미국 조지아 공장 휴업	K5, 쏘렌토, 텔루라이드 등
	5/27~28	미국 조지아 공장 휴업	
	5/17~18	광명 2공장 휴업	프라이드, 스톨닉
한국GM	2/8 부터	부평 2공장 50% 가동	말리부, 트랙스
	4/19~20	부평 1, 2공장 전라인 운영 중단	트레일블레이저
쌍용	4/8~16	평택공장 가동중단	렉스턴 등
	4/19~23	평택공장 가동중단	

자료 :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기사 재정리

☑ 대구 자동차부품업체의 현황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중 현대/기아차 협력사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60개 사)의 68.3%가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²⁴⁾, 중견기업 및 1차 밴드 기업의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기업들은 생산라인 가동중단 및 생산물량 감축으로 인해 잔업 및 특근 축소 등으로 대응 중에 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ADAS(운전자보조시스템) 및 카메라 분야 투자 확대 중이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제품생산 중단 및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실정이다. B사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현대/기아차 공장휴업 여파로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

24)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109개사를 조사(기간 4.14.~15.)했으며, 그 중 60개 사가 응답함

지고 있다. C사 역시 미래 주력제품인 전기구동축(e-Axle) 개발에 노력 중인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 잔업과 특근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들은 반도체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 차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이며, 차량 반도체 공급난은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⁵⁾

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완성차업체의 경영전략과 대응 여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에 따른 완성차업체 공장의 생산 중단은 부품사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반도체 공급난의 장기화로 인한 부품사의 자금 유동성 위기²⁶⁾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부품업종을 '일시적 산업-고용 위기'에 준(準)해서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선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 한국자동차연구원(2021), "차량용 반도체 생산 내재화 동향과 과제", 산업동향, Vol.70.

26)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2021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겪고 있음

제주 관광산업 업종별 양극화

박서연 | 제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 제주 관광산업의 변화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행위로, 사람이 영리 추구와는 관계없이 휴식·기분 전환·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일시적 이동을 하는 가운데, 관광 목적지의 인적·물적 및 기타 여러 측면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²⁷⁾

최근 관광산업과 이동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관광의 대중화가 실현되고, 이러한 추세와 병행하여 세계 화되고 다양화된 관광 현상은 다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²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함께 코로나 19의 범세계적 영향 등으로 관광산업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제주의 관광산업 또한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광행태 및 상품개발 등에 있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중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비중의 변화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4일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되었는데, 그 여파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21만 명으로 2019년 173만 명보다 87%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었다.²⁹⁾

반면, 내국인 관광객들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해외 방문 이후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중문 지역 호텔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이 전체의 70~80%를 차지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신혼여행족을 포함해 2030 밀레니얼 세대의 방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³⁰⁾

27) “관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 “관광”,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9) 신익수, 박진주, “하룻밤 80만 원 호텔 스위트룸 동났다”, 『매일경제』, 2021년 4월 2일자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하면서 '탈출소비지수'가 더욱 높아졌다³¹⁾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방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광객 규모 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면서 단체보다는 개별·소규모 관광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관광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관광 총량(관광객 수×평균 체재일수)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 행태의 변화가 당일형 관광에 비해 숙박형 관광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³²⁾ 실제로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주일간의 여행,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등 장기체류형 관광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관광객들의 소비 및 구매 부분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짐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인식되는 대형 특급호텔이나, 대면 접촉이 비교적 적은 독채형 풀빌라·고급펜션 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행태를 보인다.³³⁾

또한,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나 해양 레저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실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용객이 전혀 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³⁴⁾

한편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쌓인 보복 소비 욕구가 아직 '하늘길'이 풀리지 않은 탓에 국내에서 럭셔리(luxury) 소비를 하는 쪽으로 쏟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보다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호캉스'나 호텔 미식을 즐기는 데 쏠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³⁵⁾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광산업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사업 등은 매출 감소를 겪게 되고,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 폐업을 하거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즉, 국내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관광객의 수는 유지하면서 관광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기존의 관광산업 중 특히 단체 관광객

30) 위와 동일

31) 이새하, 한상현, "해외골프 막히자...제주CC 골퍼 역대 최대", <매일경제>, 2021년 2월 18일자

32) 박종진, "[목요광장] 관광의 양극화와 섬 자원 개발", <중도일보>, 2021년 6월 16일자

33) 임성준, 「코로나19 장기화에... 특급호텔·골프장 '웃고' 관광지 '울고」, <세계일보>, 2021년 8월 10일자.

34) 김찬년, 「코로나에 관광업계 '양극화」, <제주MBC>, 2020년 6월 18일자.

35) 임성준, 「두 얼굴의 제주... 골프장·호텔 웃는데 전세버스·여행사 비명」, <세계일보>, 2021년 6월 29일자.

과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였던 관광상품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와 사업체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가 되면서 관광산업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 제주 관광산업 업종별 양극화 현상

제주 관광산업은 제주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역내 대기업이 많지 않고 제조업 등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은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면이 많은데, 특히나 중국 사드, 감염증(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세월호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광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경제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내에서는 이러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가 때로는 회복이 어려워 폐업과 실업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업종에서 주로 포함되는 서비스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이 있다. 또한 자동차 임대업, 오락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관광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가 관광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업일지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특성에 따라 매출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음식점업을 먼저 살펴보면, 숙박업의 경우 '호캉스' 여행이 증가하면서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성수기에 예약률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⁶⁾ 5성급 이상의 호텔 예약률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여행 이동 동선이 짧아지고, 호텔 내부시설을 이용하며 고급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시내에 있는 일반 호텔 등은 대부분 매출 감소와 영업 중지 등의 경영난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SNS 홍보가 활성화되어 있는 '맛집' 위주로 매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³⁷⁾ 단체 관광객 위주로 운영되었던 중·대형 식당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였다. 특히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36) MBN온라인뉴스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주 연말 호텔 예약률 80% 넘었다」, <MBN뉴스>, 2020년 12월 22일자.

37) 고동명, 「풍요 속 빈곤...제주 찾는 사람 많지만 지갑은 안 열어」, <뉴스1>, 2021년 7월 13일자.

자동차 임대업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임대할 수 있고, 동선이 길고 해안가 위주의 경관을 보러오는 여행객들에게는 편리함을 줄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렌터카사업은 도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차비용이 2020년도 대비 4배나 상승하기도 했다.³⁸⁾

오락서비스업종의 대표적인 사업이 '카지노' 사업이다.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성화되었던 카지노 사업은 국외 관광객이 증가할수록 각광 받는 사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해외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이 하락하였고, 현재 도내 8개의 카지노 중 6개가 휴업하였다.³⁹⁾

골프 관광을 오는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어 골프장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용객이 47% 이상 증가하였으며, 캐디피 등 각종 편의시설 사용료도 증가하였다.⁴⁰⁾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세버스업이다. 2020년 수학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관광은 전년 대비 100% 감소하여 전세버스업체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전세버스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도내 전체 전세버스 중 48%가 휴지(운행 허가증인 번호판을 지자체에 반납) 신고한 상황이다.⁴¹⁾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택시 매출 또한 감소하면서 법인택시 기사도 40명 이상 일자리를 잃었다.⁴²⁾

이외에도 공영관광지의 경우, 수용인원 제한으로 인한 탐방객 수가 40% 이상 감소하며 매출도 감소하고 있다.⁴³⁾ 또한 문화해설사, 관광 가이드 등 프리랜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내사 관련 직업의 경우 매출이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며, 기존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던 게 아니라 생계의 위험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되고 관광 관련 매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업종별 매출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8) 최현재, 「관광객이 붐?…“2년새 4배 꺾음” 제주 렌터카값 치솟는다」, 〈매일경제〉, 2021년 7월 12일자.

39) 좌승훈, 「“코로나19로 보릿고개” 제주도 카지노 8곳 중 6곳 휴업」, 〈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15일자.

40) 이송렬, 「세금 덜 내면서도…제주 골프장, 그린피·캐디피 인상」, 〈한경경제〉, 2021년 4월 21일자.

41) 김은수, 「1년 멈춘 제주 ‘전세버스’ 고사 위기」, 〈제민일보〉, 2021년 5월 27일자.

42) 김진규, 「“코로나 여파 제주 법인택시 기사 41명 일자리 잃었다”」, 〈제주매일〉, 2021년 1월 28일자.

43) 최충일, 「코로나가 바꾼 제주여행…호캉스 ‘복직’ 공영관광지 ‘한산」, 〈JTBC뉴스〉, 2021년 8월 5일자.

☑ 문제 해결방안

관광산업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산업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입해서 매출 감소나 실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못 했을 경우, 대량의 실직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여 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대안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매출의 일부로 조성되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재원이 70% 이상 감소하였고⁴⁴⁾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

관광산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찾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 충격을 크게 받은 실업자나 사업주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김영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출자 '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 〈한국일보〉, 2021년 7월 8일자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양산 임박⁴⁵⁾

김상우 | 광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4월 29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60만 4,338㎡(18만 3,000여 평) 부지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9월 양산을 앞두고 있는 GGM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저효율 체질 개선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준공... 경형 SUV 위탁 생산⁴⁶⁾

1998년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준공된 GGM은 노사 상생과 사회적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노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획된 정책으로, 2014년 처음 시도될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 전격적인 투자협약이 체결되면서 급물살을 탔고, 그 해 9월 지역 34개 민간 투자자들이 공동 출자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법인 출범, 12월 공장 착공, 2020년 6월 15일 전국 최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등을 거쳐 올해 4월 완공에 이르렀으며, 오는 9월에는 역사적인 첫 차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45) 원영진(2021), “호남권,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 마련”, 지역경제보고서(2021년 6월), 한국은행
46) 한국은행(2019),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추진전략 및 과제”, 2019 지역경제 세미나 결과자료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상공회의소

연간 1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GGM은 자동차 위탁생산 전문기업으로 제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차량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담당하고 GGM은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오는 9월부터 생산될 차량은 현대차가 개발한 경형 SUV(프로젝트명 AX1) 가솔린 모델로 연말까지 1만 2,000대, 내년에는 7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AX1은 현대차가 '아토스' 이후 20년 만에 출시하는 경형차로 국내 미개척 분야인 경형 SUV 시장에 진출해 20~30세 연령층의 엔트리카(생애 첫 차)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경차 혜택과 SUV라는 강점이 결합되어 경제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위축된 국내 경차 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형차 판매는 9만 7,000대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10만 대를 밀돌았다. 한편 현대차는 GGM이 생산하는 AX1을 D2C(Direct To Consumer·소비자 직거래)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버팀목,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⁴⁷⁾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설립되었다. 광주형일자리가 논의될 당시, 청년 고용지표와 청년인구 유출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근로조건의 일자리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기에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진행된 1, 2차 기술직(331명)과 일반직(43명) 신입사원 공채에는 2만 명이 넘는 구직자가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언론에서는 GGM의 일자리가 코로나19 한파로 얼어 붙은 채용 시장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GGM 분석에 따르면 1차 기술직 신입사원 합격자 186명 중 광주·전남지역 인재 합격률이 97.3%, 20대와 30대 청년층이 94.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 우대 조항(주소지 또는 지역 고졸 및 대학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을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채용된 520명 가운데 93.4%를 광주전남 인재로 구성하는 등 지역 청년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GGM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 1천 명까지 고용을 늘릴 계획이며, 공장 운영 등에 참여하는 지역 협력업체의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7) 광주글로벌모터스(2021), <http://www.ggmotors.com/> (검색일 : 2021년 9월 13일)

☑ 성공적 안착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뿌리 내려야⁴⁸⁾

GGM이 자동차 위탁전문 생산기업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고 품질의 자동차생산, 순조로운 판매, 노사상생실천, 친환경차 생산체제로의 적시 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판매에 있어서는 광주시가 신차 홍보·판매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모색 중이다.

최근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2년 연장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과 감면 상한선을 확대(50만 원 → 65만 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경형 SUV 신차 판매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또한, GGM은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생산 차종의 다각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차 등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적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GM 공장은 친환경, 디지털, 유연화의 3가지 콘셉트로 설계되어 있어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다른 차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가치인 노사상생 실천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나 생산성 향상, 성과 배분, 근로자 채용·배치, 고충 처리,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노사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GGM은 지금까지 쉽지 않은 여정 속에 여기까지 왔다. 노사가 힘을 합쳐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해본다.

48) 노정훈, “광주 글로벌모터스 성공 해법은”, 기획특집 시리즈, <남도일보>, 2021년 4월 6일~8일자

지역-산업 고용동향

- 17개 시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산업
-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 고용위기업종 고용동향 : 항공운송업·조선업

『지역-산업 고용동향』은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고용보험 지표의 변화와 지역 및 업종별 위기대응 지정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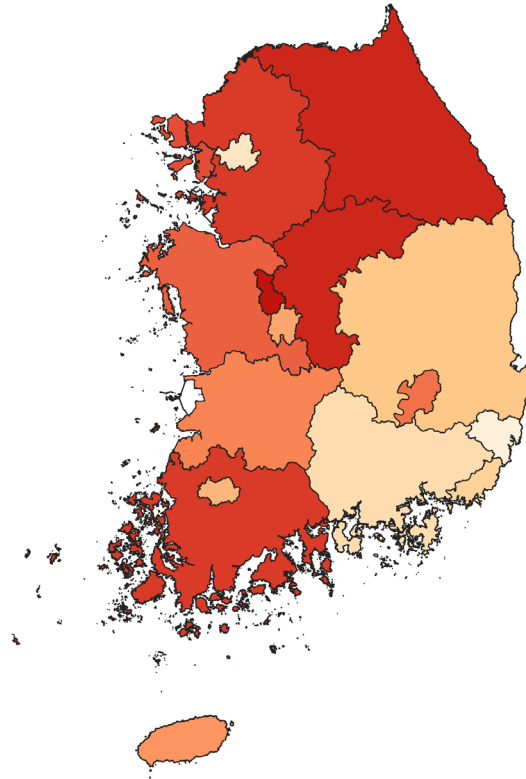
이용자 안내

1. 본 『지역-산업 고용동향』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지역-산업별 통계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 사업장 통계는 1인 이상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등록 시 신고된 소재지 및 산업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17개 시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산업

그림 1 17개 시도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광역시도	증감률
세종특별자치시	9.5
강원도	5
충청북도	5
경기도	4.8
전라남도	4.8
인천광역시	4.7
충청남도	4.5
대구광역시	4.4
전라북도	4.3
제주특별자치도	4.1
대전광역시	3.7
광주광역시	3.5
경상북도	3.4
부산광역시	2.6
경상남도	2.2
서울특별시	1.9
울산광역시	1.3



주: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수 증감률은 2021년 5월~7월 간 평균값을 나타낸 것임
 자료: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 2021년 5월~7월 전국 평균 피보험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보험자 수 감소라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년동기대비 피보험자 수의 증가세
- 세종지역의 피보험자 증가율은 9.5%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울산(1.3%), 서울 (1.9%) 순으로 피보험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출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에서 피보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

1 17개 시도별 피보험자 증감 상위 산업

지역별		피보험자 수 증감 상위 산업명
수도권	서울 1.9%	증가 : 출판업(+27.3), 교육 서비스업(+12.8), 전문 서비스업(+11.9) 감소 : 사업지원 서비스업(-13.4), 도매 및 상품 중개업(-10.2), 음식점 및 주점업(-9.7)
	경기 4.8%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16.3), 교육 서비스업(+11.4), 보건업(+11.4), 소매업(+11.3)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2.0), 우편 및 통신업(-1.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0.9)
	인천 4.7%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교육 서비스업(+2.6), 종합 건설업(+2.5) 감소 : 음식점 및 주점업(-1.2)
충청권	충북 5.0%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2.9), 교육 서비스업(+2.9), 식료품 제조업(+1.4)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5)
	충남 4.5%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2), 사업지원 서비스업(+1.8) 감소 : 교육 서비스업(-0.3)
	대전 3.7%	증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 출판업(+1.6), 사회복지 서비스업(+2.5) 감소 : 부동산업(-0.2)
	세종 9.5%	증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 사회복지 서비스업(+0.8) 감소 : 종합 건설업(-0.2)
호남권	전북 4.3%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8), 교육 서비스업(+1.9) 감소 : 항공 운송업(-0.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3)
	전남 4.8%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3.3), 종합 건설업(+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 감소 : 사업지원 서비스업(-0.7),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2)
	광주 3.5%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8), 종합 건설업(+1.3) 감소 : 음식점 및 주점업(-0.7)
경상권	경북 3.4%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1.4)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3)
	경남 2.2%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5.4), 보건업(+2.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 감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7.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7)
	대구 4.4%	증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4), 사회복지 서비스업(+4.1), 교육 서비스업(+2.7)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6)
	울산 1.3%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0.9) 감소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0.6)
	부산 2.6%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0), 보건업(+3.0)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1.4), 사업지원 서비스업(-1.2), 음식점 및 주점업(-0.9)
강원 제주	강원 5.0%	증가 : 사회복지 서비스업(+2.7), 종합 건설업(+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0) 감소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0.7), 숙박업(-0.6)
	제주 4.1%	증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4), 숙박업(+1.2), 사회복지 서비스업(+1.1) 감소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0.3)

주 : 1) 고용보험DB 내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개정)를 따르며, 시도별 산업 고용동향은 산업대분류에 따라 나타내었음
2) 전년동기대비 피보험자 수 증감폭을 나타낸 것으로, 2021년 5월~7월 평균값을 전년동기대비로 나타낸 것에 해당함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개요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고용보험법』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하여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정제도에 해당됨
 - 고용위기 대응체계는 고용조정 지원이 필요한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세부적으로 적용됨
-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는 2018년 4월과 5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었으며, 조선업 위기지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
- ▶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2021년 9월 기준)으로 지정된 업종은 관광·공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등(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등(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조선업이 해당됨

1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충족지역

표 1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기준		지정기준 내용
유형 A	기준 1	직전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기준 2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 3	직전 1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그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B	기준 4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1~3을 동시 충족(정량 A)하거나 기준 4를 충족(정량 B)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정량 요건 충족

주 :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수를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2020),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6호

표 2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충족 지역(2021년 1월~7월)

지역	지정기준 충족 기간	유형	수치			실질적 고용위기 발생
			피보험자 증감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	피보험자 증감 (3년전 대비)	
서울 중구	1월~4월	A	-9.0%	20.7%	-2.9%	X
서울 용산구	3월	A	-5.3%	31.5%	-1.5%	O
서울 동작구	1월~7월	B	0.5%	-7.6%	-11.8%	X
부산 동구	1월~5월	B	-1.1%	75%	-7.5%	X
대구 서구	1월~2월	B	-1.5%	28.4%	-7.0%	X
울산 동구	1월	B	-3.3%	52.6%	-8.3%	O
충북 청주시 상당구	1월~2월	B	0.3%	15.1%	-7.6%	X
경남 거제시	1월~6월	A, B	-6.3%	38.3%	-6.2%	O

주 : 1) 고용지표 수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마지막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지정기준 충족 기간은 정량요건 3개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기간을 나타낸 것임
 3) 피보험자 증감 수치는 지정기준 2를 의미하며, 해당 열에 나타난 수치값은 각 지역의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감소한 값을 나타낸 것임

정량요건 충족지역 검토

- 서울 용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업종인 상품 종합 도매업, 음식점업, 영화관 운영업에서 피보험자가 감소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단, 용산구는 기업 본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지역 내 실질적인 고용 감소분보다 피보험자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
- 경남 거제와 울산 동구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이 지역 고용감소를 견인한 경우임. 두 지역은 지역 피보험자 수의 절반 이상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산업의 위기가 지역 고용위기로 이어짐
- 서울 중구는 사업장이 지역 내 타 지역구로 이전하거나 사업장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피보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실질적인 고용감소를 유발하지 않은 변화로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음
- 서울 동작구,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역시 사업장 이전이나 분할, 주소지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감소하여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함
-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경우, 청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당구 소재 사업장의 주소가 청원구나 서원구로 변경되면서 피보험자가 감소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고용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음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산업(산업중분류 기준)

표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기준	지정기준 내용
기준 1	해당 업종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이상 낮은 경우
기준 2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 3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기준 4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 1~4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 요건을 충족

주: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 사유 중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 수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2020),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7호

표 4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충족 산업(2021년 1~7월)

산업 구분	지정기준 충족 기간	기준별 충족 기간(월)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월~7월	1~7	1~7	1~2	1~7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월~7월	1~7	1~7	-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월~6월	1~7	1~6	-	1~7
1차 금속 제조업	1월~3월	-	1~7	1~3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월~5월	3~7	2~7	2~5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월~7월	1~7	1~7	1~2	1~7
항공 운송업	3월~7월	3~7	1~7	1~7	-
숙박업	1월~2월	1~7	1~7	1~2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월~3월	1~7	1~4	1~3	-

주: 1) 지정기준 충족 기간은 정량요건 3개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간을 나타낸 것임

2) 기준 1~기준 3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개정)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기준 4는 9차개정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정량요건 충족지역 검토

- 사양산업인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지속적인 피보험자 감소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을 충족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에 따른 항공운송업, 숙박업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산업 피보험자가 감소,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함
- 1차 금속 제조업 피보험자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2020년 2분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발생하여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 2021년 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을 충족함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피보험자가 감소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함

고용위기업종 고용동향 : 항공운송업·조선업

▶ 「고용위기업종 고용동향」은 전술한 「위기지역 및 업종 지정기준 고용동향」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산업 및 고용동향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항공운송업

① 산업 현황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국적 항공사 운항 및 여객 실적이 감소함
 - 2020년 연 누적 항공 운항은 2019년 대비 49.2%, 여객 실적은 62.9% 감소함
 - 2021년 2분기에는 국내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국내선 여객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74.0% 증가함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제한으로 국제 여객 실적 회복이 더디지만,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2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함

표 5 분기별 국적 항공사 운항 및 여객 실적

	운항(편)			여객(명)		
	계(증감률)	국제선	국내선	계(증감률)	국제선	국내선
2019Q1	133,922 (6.0)	87,162	46,760	23,561,602 (5.7)	15,923,755	7,637,847
2019Q2	137,503 (5.2)	88,062	49,441	23,875,138 (3.6)	15,320,530	8,554,608
2019Q3	138,990 (3.6)	89,357	49,633	23,675,042 (2.1)	15,241,052	8,433,990
2019Q4	131,696 (-1.2)	82,181	49,515	23,133,229 (1.7)	14,373,113	8,760,116
2020Q1	96,380 (-28.0)	59,233	37,147	13,852,165 (-41.2)	8,449,331	5,402,834
2020Q2	50,400 (-63.3)	12,691	37,709	5,622,823 (-76.4)	331,057	5,291,766
2020Q3	61,925 (-55.4)	14,374	47,551	7,612,911 (-67.8)	410,402	7,202,509
2020Q4	66,663 (-49.4)	16,687	49,976	7,864,313 (-66.0)	405,738	7,458,575
2021Q1	58,406 (-39.4)	16,460	41,946	6,735,785 (-51.4)	350,021	6,385,764
2021Q2	75,723 (50.2)	18,029	57,694	9,594,958 (70.6)	388,623	9,206,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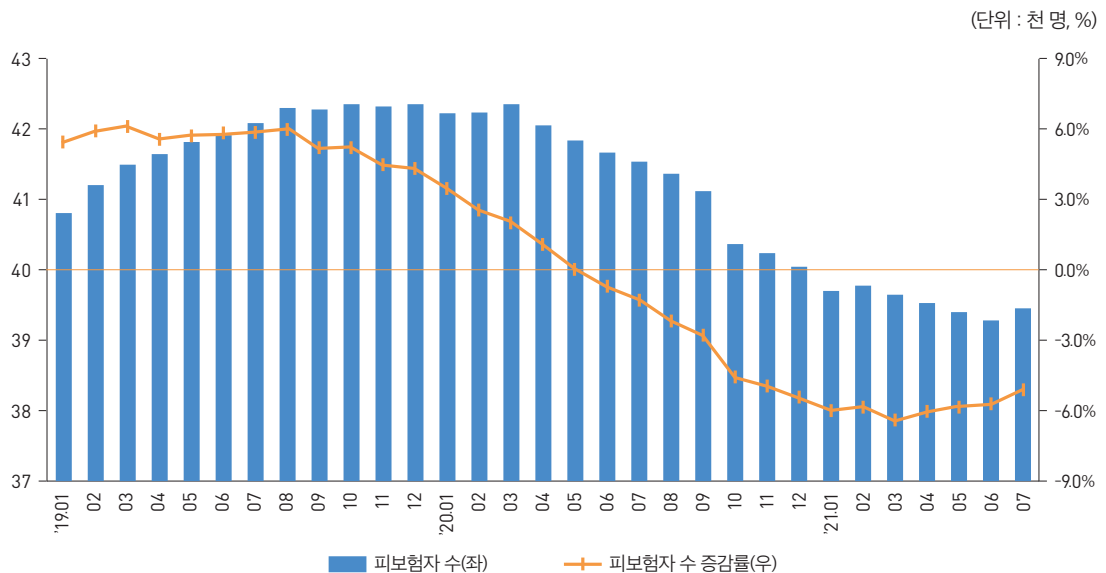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https://www.airportal.go.kr>)

② 고용보험 동향

□ 피보험자 수 동향

- 항공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020년 4월에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1년 2분기 피보험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함
 -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피보험자 감소 폭이 확대됨
 - * 구조조정으로 인한 상실 규모는 700여 명
 - 2021년 7월 피보험자 수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함
- 2021년 고용보험 상반기 누적 취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3.6% 감소한 수치인 359명을 기록하였음
 - 2020년 고용보험 연 누적 취득자 수는 700명으로 전년대비 83.7% 감소함

그림 2 항공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9년 1월~2021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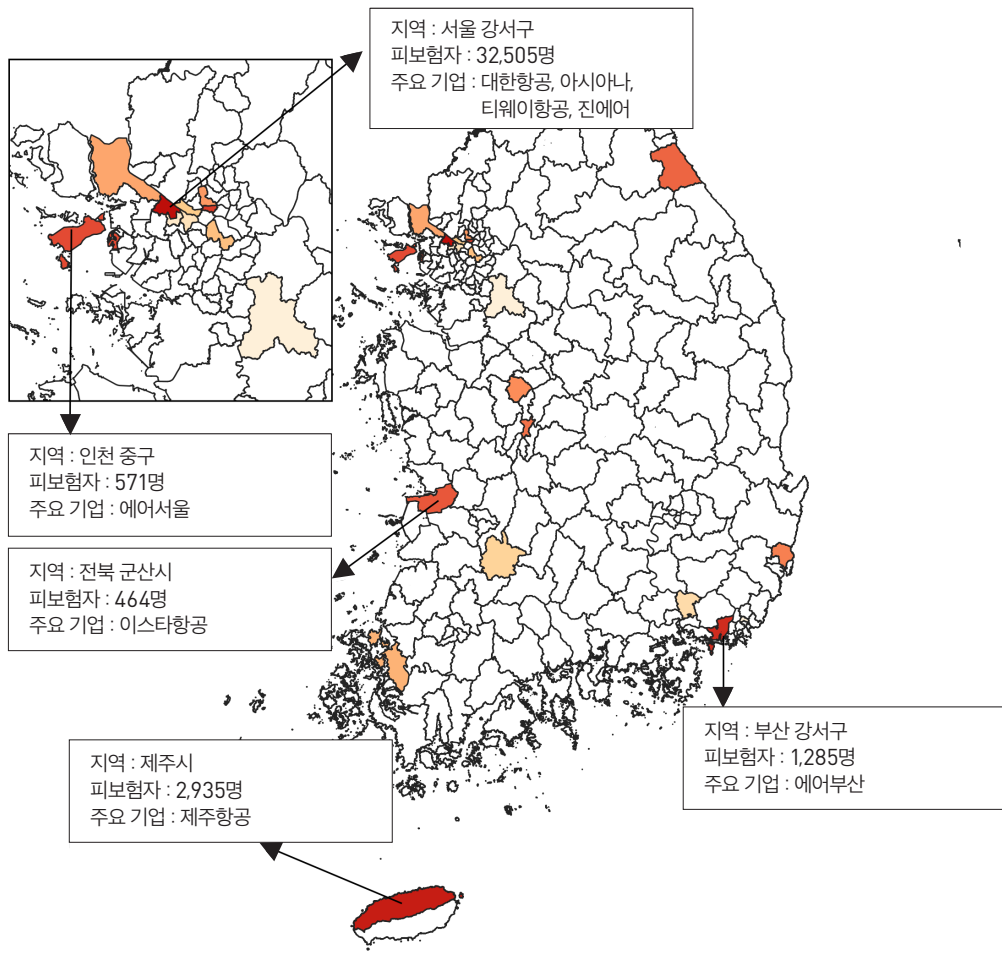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 지역별 항공운송업 피보험자 현황

- 공항 소재지 혹은 인접 지역에 항공사 본사가 위치하여 특정 지역에 피보험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함
- 항공운송업 전체 피보험자 중 수도권 지역 피보험자가 86.2%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7.4%), 영남(3.7%), 호남(1.4%)의 비중이 큼

- 항공운송업 피보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형 국적 항공사 본사 소재지인 서울 강서구로 전체 피보험자 중 82.4%가 강서구 지역 사업장에 근무함
 - 제주(7.4%), 부산 강서구(3.3%)는 저비용 항공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강서구 다음으로 항공운송업 피보험자가 많은 지역임
- 인천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년간 항공운송업 피보험자가 감소함
- 피보험자 규모가 가장 큰 서울 강서구에서 항공운송업 피보험자가 가장 큰 폭(전년동기대비 -1,100명, -3.1%)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스타항공 소재지인 군산 지역이 가장 낮은 피보험자 증감률(-800명, -64.4%)을 기록함

그림 3 항공운송업 주요 기업 및 피보험자 분포(2021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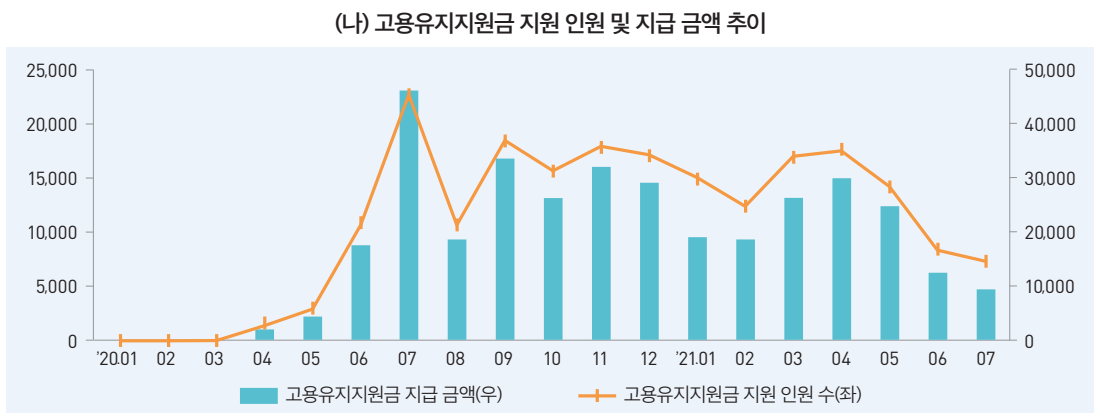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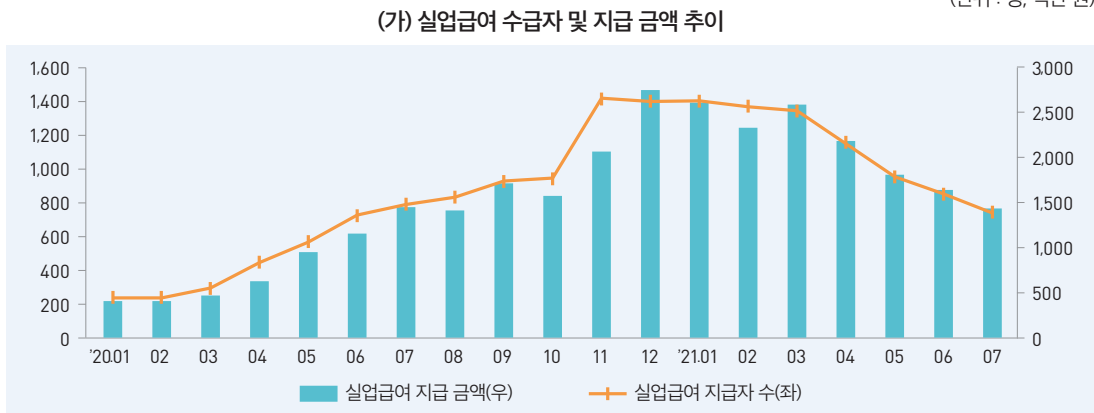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11월 1,428명, 지급금액은 2020년 12월에 27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2분기부터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급금액은 감소세를 보임
 - 이스타항공 구조조정(2020년 10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과 금액은 2020년 7월 각각 22,446명, 4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6월에 고용유지지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2020년 4월 이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운송업 사업장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증가함
 - 최근 1년(2020년 7월~2021년 6월)간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13.1%는 항공운송업에 지급되어 고용 대비 고용유지 지원 규모가 컸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항공운송업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2020년 1월~2021년 7월)

(단위 : 명, 백만 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③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현황

- 2021년 상반기 고용보험 상실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
 -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상실자 수는 20.5% 감소하였지만, 비자발적 상실자 수는 112.8% 증가함
- 2020년 연 누적 상실자 수는 전년대비 42.7% 증가하였으며, 비자발적 상실자 수는 2019년 대비 272.6% 증가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상실자 수는 2019년 대비 685.4% 증가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자 수는 103.0% 증가하였음
-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승무원 및 운송서비스 관련직 등 항공 운송에 특화된 직종에서 비자발적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함
 - 비자발적 실직자의 평균 재취업률은 36.7%를 기록함

표 6 상실사유별 상실자 수

(단위 : 명, %)

	2019	2020	2021.1/2
총 상실자 수	2393	3414 (42.7)	1052 (-27.7)
자발적 상실	1775	1256 (-29.2)	463 (-19.8)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712	1050 (-38.7)	415 (-18.0)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63	206 (227.0)	48 (-32.4)
비자발적 상실	576	2146 (272.6)	581 (-33.6)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130	1021 (685.4)	44 (-82.3)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5	23 (-34.3)	3 (-84.2)
정년	42	353 (740.5)	202 (30.3)
계약만료	369	749 (103.0)	332 (-26.7)
기타	42	12 (-71.4)	8 (100.0)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2) 2019년, 2020년은 연간자료이고, 2021년은 상반기 기준 수치값을 나타내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마이크로데이터

표 7 직종별 비자발적 상실자와 재취업 현황(2020년 1월~2021년 6월)

(단위 : 명, %)

	비자발적 상실자 수(비중)	재취업자 수	재취업률
관리/사무직	344(15.8)	136	39.5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725(33.4)	241	33.2
승무원 및 여행, 운송 서비스 관련직	662(30.5)	241	36.4
운송장비 및 기계장비 정비원	354(16.3)	139	39.3
자동차 운전원 및 운송 종사자	38(1.7)	24	63.2
기타	49(2.3)	17	34.7
합계	2,172(100.0)	798	36.7

주: 정년으로 인한 퇴직을 제외하고 비자발적 상실자 수를 집계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마이크로데이터

-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산업을 살펴보면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이동이 많았음
- 항공운송업으로 재취업하는 이직자의 비중은 2019년 27.3%에서 2020~2021년 간 11.3%로 16.0%p 감소함
 - 직종별로는 단순 운송 종사자와 정비원의 산업 내 재취업 비중이 가장 높음
 - 항공 여객 수요 회복 지연으로 승무원 및 여행, 운송 서비스 관련직의 항공운송업 재취업 비중은 0.4%에 불과

표 8 비자발적 이직자의 직종별 재취업 산업 비중

(단위 : %)

	C	G	H		J	M	N	P	기타
			항공	기타					
전체 이직자	11.3	12.8	16.2	11.3	8.4	9.3	15.9	5.3	20.9
관리/사무직	15.4	17.6	11.0	3.7	14.7	5.9	12.5	4.4	18.4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10.8	11.2	15.4	11.2	10.4	10.0	16.6	6.2	19.5
승무원 및 여행, 운송 서비스 관련직	6.2	17.8	4.6	0.4	8.7	14.9	16.2	3.7	27.8
운송장비 및 기계장비 정비원	17.3	5.0	31.7	26.6	0.0	2.9	19.4	7.9	15.8
자동차 운전원 및 운송 종사자	4.2	4.2	62.5	62.5	4.2	0.0	4.2	0.0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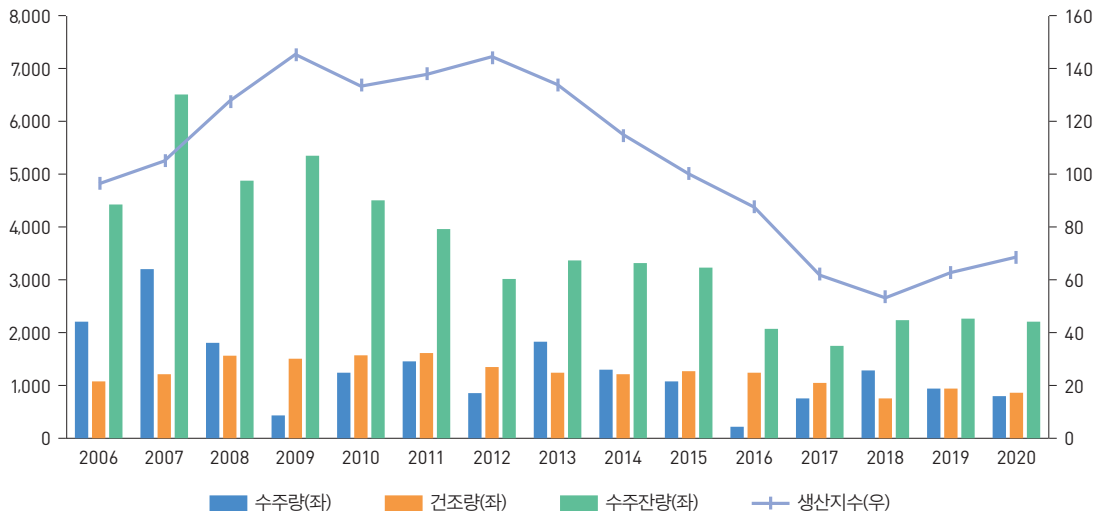
주: 각 직종 이직자의 재취업 산업을 산업표준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 행의 합은 100임. 각 산업은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J(정보통신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을 뜻함

2 조선업

① 산업 현황

- 조선업 위기 이후 2019년 회복세를 보였던 조선업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업황은 둔화되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증가하여 업황이 개선
 - 그러나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건조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1~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해운·조선업 경기는 침체되어 중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조선업 1차 위기가 전개됨
 - 대형조선업체는 고유가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여 충격이 완화됨
-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하락하여 해양플랜트 발주가 감소하였고, 조선업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2016년에는 수주절벽이 발생하여 조선업 2차 위기가 전개됨
 - 1차 위기와는 달리 조선업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설비 및 인력감축 진행

그림 5 조선업 수주/건조량과 생산지수(2006년~2020년)



주: 수주량은 국내 조선소가 국내외로부터 수주한 물량, 건조량은 수주한 물량 중 건조한 물량을 톤수로 나타낸 지표로 한국조선협회 9개 회원사 기준으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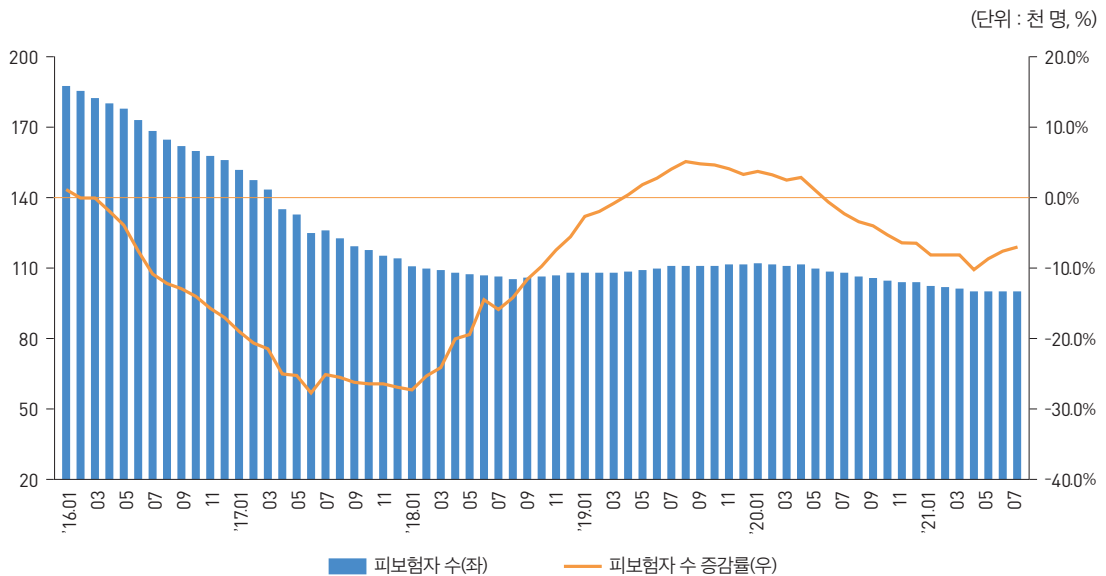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Research「World Shipyard Monitor」,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② 고용보험 동향

□ 피보험자 수 동향

- 2021년 7월 기준 조선업 피보험자⁴⁹⁾는 약 10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5% 감소
 - 피보험자 고점을 기록했던 2016년 1월 187천 명에서 1차 저점 2018년 8월 105천 명 → 2020년 4월 110천 명 수준으로 회복했으나, 현재 1차 저점 대비 5천 명 더 감소한 것임
- 조선업 인력구조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20~30대 피보험자 비중은 2015년 12월 절반(49.9%)을 차지하였으나, 2021년 7월 32.6%로 17.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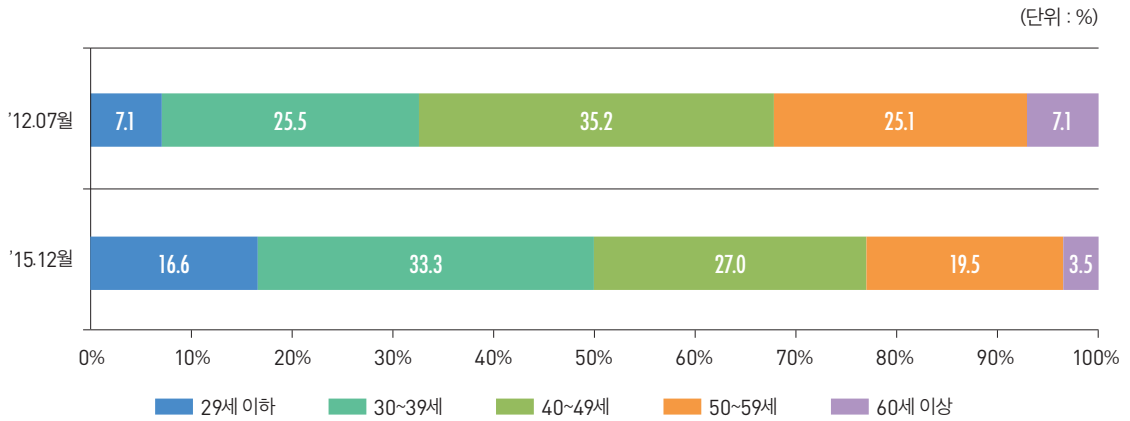
그림 6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2019년 1월~2021년 7월)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49)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코드 311)을 조선업으로 간주하여 분석

그림 7 조선업 피보험자의 연령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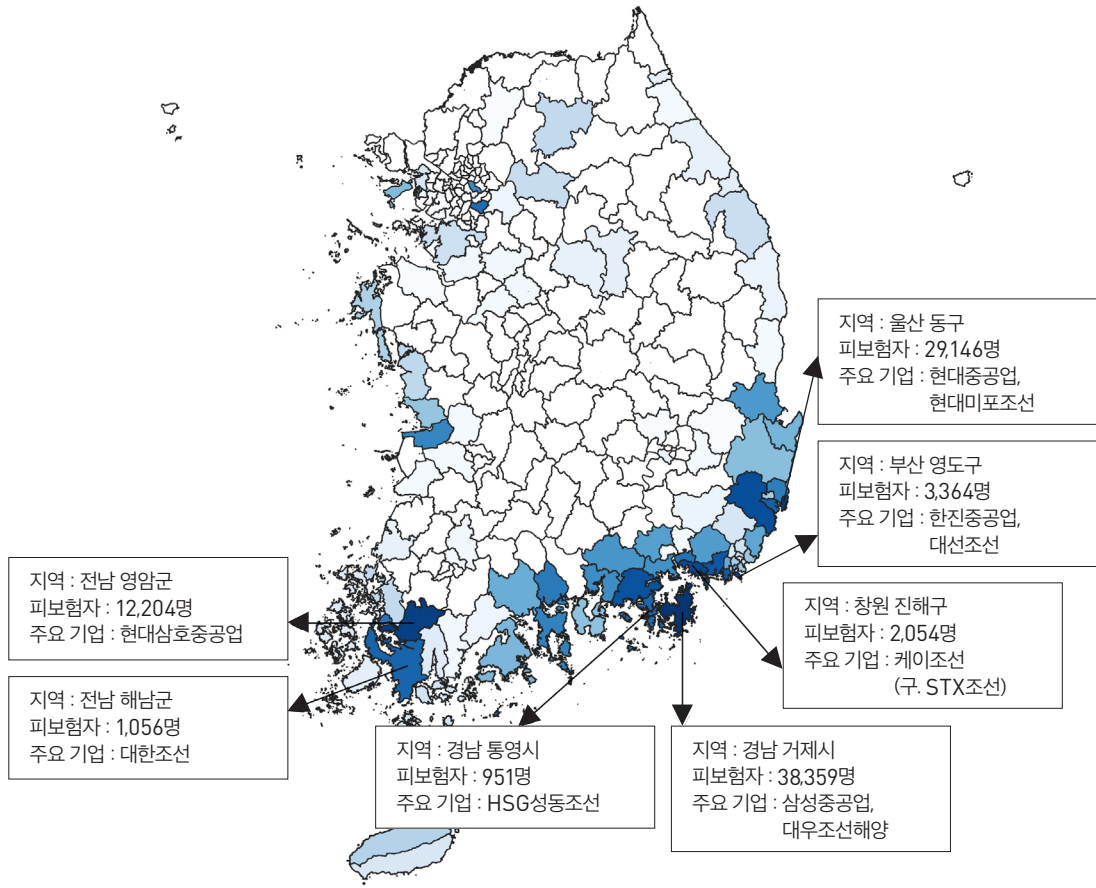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마이크로데이터

□ 지역별 조선업 피보험자 현황

- 조선업 사업장은 도크설비가 필요하여 해안지역에 주로 위치함
- 조선업 피보험자 중 영남권 지역 피보험자가 83.6%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호남권(15.1%)의 비중이 큼
 - 거제와 울산 동구는 대형 조선소가 있어 피보험자 수가 가장 많음
 - 거제와 울산 동구 외에도 영남권에는 부산 영도구, 창원 진해구, 고성, 통영 지역에 조선업 피보험자가 밀집해 있음
 - 호남권에는 영암과 해남에 조선업 피보험자가 집중되어 있음
- 지난 1년간 전남 영암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지역에서 조선업 피보험자가 감소함
 - 거제의 조선업 피보험자는 전년동기대비 5,500명(-12.5%), 울산 동구 조선업 피보험자는 전년동기 대비 1,300명(-4.1%) 감소하여 조선업 밀집 지역 중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함
 - 전남 영암의 조선업 피보험자는 전년동기대비 600명(+5.1%)이 증가하여, 지역 내 조선업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8 조선업 주요 기업 및 피보험자 분포(2021년 7월 기준)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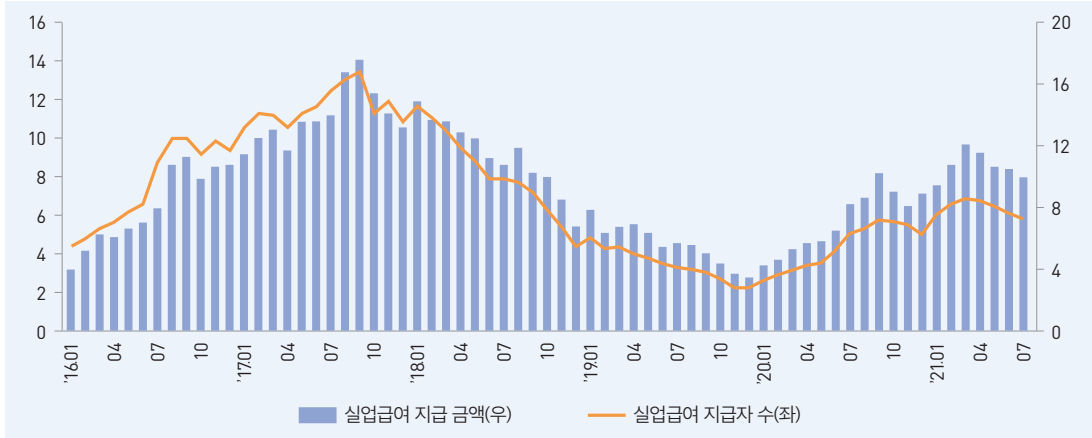
□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 조선업 고용보험 상실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실업급여 지급금액과 지원 대상 수는 2020년부터 증가하여 2021년 3월 6,900명에게 총 122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 4월 이후 지급자 수와 금액이 감소 -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지원 금액은 2017년 9월 각각 13,528명, 17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세였으나 2020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2020년 9월 고용유지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이 27억 원에 이르렀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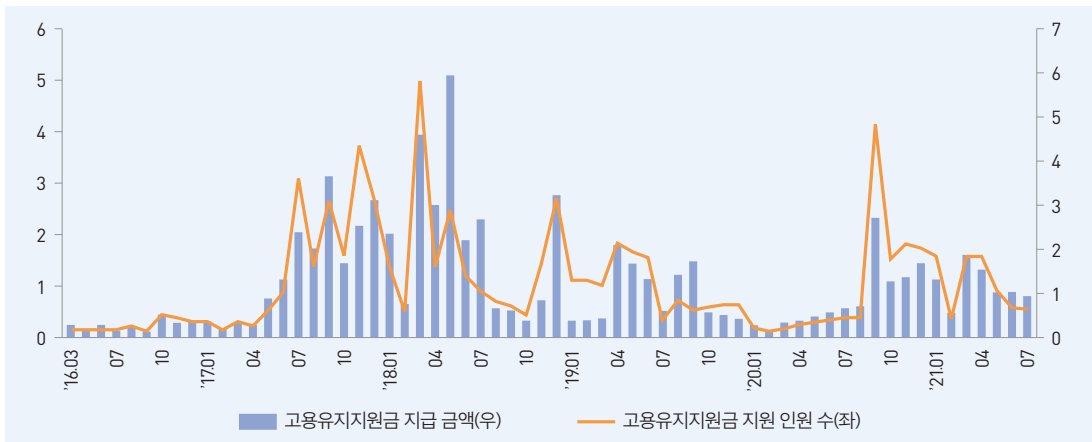
그림 9 조선업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2016년 1월~2021년 7월)

(단위 : 천 명, 십억 원)

(가) 실업급여 지급자 및 지급 금액 추이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 및 지급 금액 추이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합정보시스템(EIS)

50) 정년퇴직을 제외한 비자발적 상실자를 분석 대상으로 함. 비자발적 실직자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때로 정의함 : 폐업, 도산, 공사중단(코드 22),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코드 23),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코드 24),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코드 25), 정년(코드 31), 계약기간 만료(코드 32), 공사종료(코드 33)

③ 비자발적 실직자⁵⁰⁾의 재취업 현황

- 2021년 1월~4월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90일 이내 재취업률은 43.5%로 전년동기대비 7.3%p 감소(전년도 1월~4월 재취업률은 50.8%임)
 - 2020년 연평균 재취업률은 2020년 5월 이후 재취업률 하락으로 인해 42.6%를 기록함
 - 고용위기 이전 60%를 상회하던 조선업 실직자의 재취업률은 2017년 39.7%까지 하락한 후 회복 추세를 보여 2019년 56.2%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 다시 하락함
 - 다만 2020년 재취업률 하락은 전 산업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선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재취업률은 조선업보다 6.0%p 낮은 36.6%를 기록함

표 9 조선업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현황(2014년~2021년)

(단위: 명, %, 일)

	전체 상실건수	재취업 건수	90일 이내 재취업률			재취업 소요 기간
			조선업	(전 산업)	재취업률 격차	
2014년	21,822	19,135	61.9%	(43.3%)	18.6%p	475
2015년	30,189	26,167	61.1%	(43.6%)	17.5%p	490
2016년	45,335	37,879	47.0%	(44.3%)	2.7%p	72.3
2017년	51,197	42,048	39.7%	(44.2%)	-4.5%p	90.7
2018년	26,043	21,423	45.6%	(43.9%)	1.7%p	81.0
2019년	15,177	12,350	56.2%	(41.1%)	15.1%p	59.3
2020년	19,218	12,363	42.6%	(36.6%)	6.0%p	75.7
2021년	10,290	4,602	43.5%	(42.3%)	1.2%p	275

주: 2021년 재취업률은 1월~4월 상실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값에 해당하며, 재취업 소요 기간은 1년 이내 재취업한 사람들의 재취업 기간을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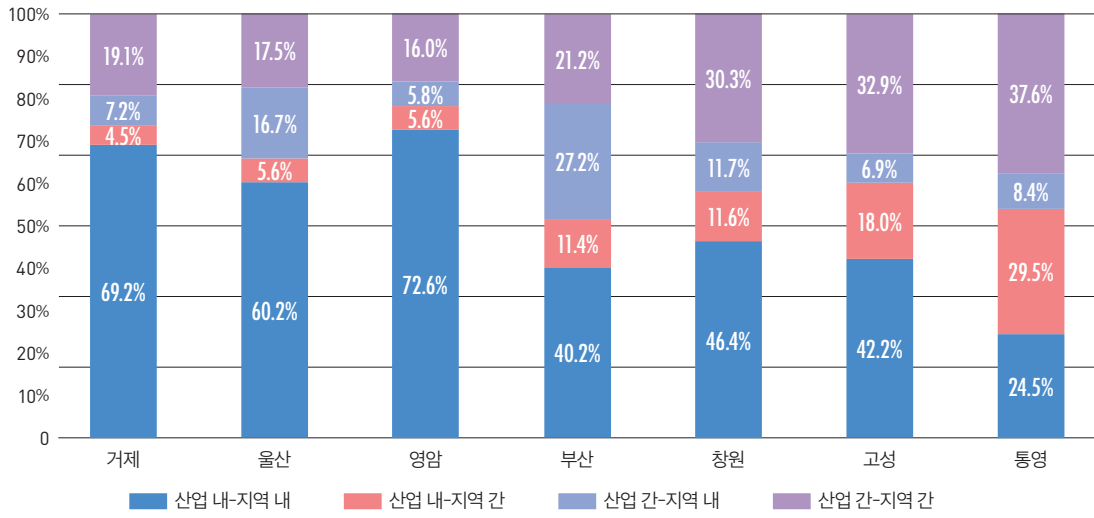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마이크로데이터

○ 재취업 경로⁵¹⁾(2016년 1월~2021년 7월까지의 비자발적 이직자 전체 기준)

- 지역 내-산업 내 재취업자 비중은 영암 72.6% > 거제 69.2% > 울산 60.2% 순으로 나타남. 즉, 역대 조선업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부문 내 노동이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반대로 산업 간-지역 간 재취업자 비중은 통영 37.6% > 고성 32.9% > 창원 30.3%로, 역대 조선업의 쇠퇴 정도가 심한 지역은 부문 간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51) 지역 내 이동은 상실 당시 사업장과 취득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있을 때로, 산업 내 이동은 상실 사업장과 취득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같을 때로 정의함

그림 10 지역별 조선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경로(2016년 1월~2021년 7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마이크로데이터

- 실직 후 조선업으로 재취업하는 이직자들의 지역 이동 양상을 살펴보면, 지역 내 이동을 하는 이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거제지역 산업 내 재취업자의 경우, 94.0%의 이직자들이 다시 거제지역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암(92.8%), 울산(91.6%) 지역도 지역 내로 재취업하는 이직자의 비중이 90%를 초과
 - 조선업 쇠퇴 정도가 심한 통영은 지역 내 재취업 비중이 45.4%로 주요 조선업 밀집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 산업 내-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경우, 조선업 규모가 큰 거제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음

표 10 산업 내 이동자의 재취업 지역

(단위 : %)

		재취업 지역								
		거제	울산	영암	부산	창원	고성	통영	해남	기타
실직 지역	거제	94.0	2.5	0.7	0.7	0.4	0.7	0.6	0.1	0.5
	울산	6.4	91.6	0.6	0.3	0.2	0.3	0.1	0.0	0.6
	영암	1.8	1.1	92.8	0.3	0.1	0.1	0.3	1.8	1.8
	부산	9.6	4.3	1.3	77.9	2.9	0.9	0.6	0.1	2.4
	창원	8.8	2.2	0.2	5.2	79.9	1.2	0.8	0.2	1.5
	고성	15.5	1.7	0.9	1.8	2.7	70.1	4.9	0.2	2.3
	통영	36.7	1.7	0.9	1.2	0.9	8.4	45.4	0.8	4.0

주: 각 지역의 조선업 실직자들이 산업 내 이동지역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각 행의 합은 100임

- 조선업 외 타 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조선업과의 숙련 연관성이 높은 산업 또는 단순 인력공급이 가능한 산업으로의 이동이 많음
 - 산업 간 이동자 중 제조업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은 38.1%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2%) 등 조선업 숙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6%), 건설업(9.5%) 등 단순 인력공급이 가능한 산업군으로의 이동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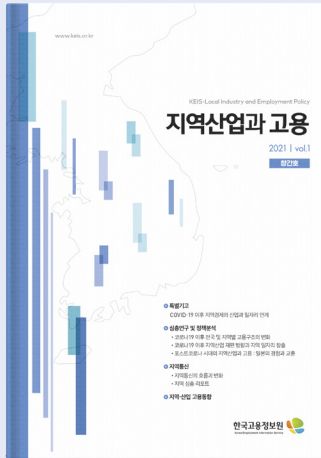
표 11 산업 간 이동자의 재취업 산업

(단위 : %)

이동 산업(대분류)	비중	산업 내 중분류 구성	(비중)
제조업	38.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
		전기장비 제조업	(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6	사업지원 서비스업	(6.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5)
건설업	9.5	종합 건설업	(8.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
		전문서비스업	(2.2)
도매 및 소매업	8.2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
운수업	5.1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		
숙박 및 음식점업	3.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		

· 지역-산업 고용동향
 이나경 |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연구원

『지역산업과 고용』 원고모집 안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역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등에 대한 전문간행물 『지역산업과 고용(KEIS-Local Industry and Employment Policy)』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에서는 지역 일자리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정책분석, 지역 일자리 이슈 및 사례 등을 다룬 원고를 상시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지역 고용과 관련된 자유주제 원고

분량

A4 기준 15~20매 내외(hwp 파일 제출)

*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원고제출 및 기타 문의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사무처

편집간사

김수진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부연구위원

☎ 043-238-9218 ✉ sjkim07@keis.or.kr

사무간사

오윤석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연구원

☎ 043-238-9214 ✉ wakun5@keis.or.kr

